



"부산연구원" (부산)

~22. 12. 9.

들어가기 전에...

※ 타 직렬이나 혹은 기타 다른 문서가 궁금하시다면

 "아카이브  "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공공누리 관련 공지 또한 위 링크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https://open.kakao.com/o/sSL8zGSd>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 :

저작권자 :

공공누리 :

목차

※ 클릭 후 파란 글씨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이동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2
목차	3
상세한 목차	10
부산연구원	11
BDI간행물	12
연구보고서	12
정기간행물	48
BDI포커스	48
부산발전포럼	61
BDI경제동향브리프	80
BDI산업동향	94
부산고용동향	107
BDI국내정책연구동향	109
미디어	122
영상리포트	123
인포그래픽스	124
이슈큐레이션	126
열린광장	135
데이터 개방	135
아카이브	135
부산경제통계포털	135

상세한 목차

※ 클릭 후 파란 글씨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이동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2
목차	3
상세한 목차	10
부산연구원	17
BDI간행물	18
연구보고서	18
통상도시 부산을 위한 비전과 전략	18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방안	19
부산지역 공연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연시설 운영모델과 실행방안	33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부산시민 문화권 보장방안	33
아시아 창업도시를 위한 부산혁신도시 발전과제	33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 방안 연구	33
부산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방안	33
부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 방안	34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39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실태분석 및 시사점	39
부산시 리스크 감사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	39
부울경 중심도시 부산 도시공간 구축방안	39
문화콘텐츠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부산시 주요 정책방향	39
미래 혁신 인프라, 제2에코델타시티에 거는 기대와 과제	39
신교통수단(트램) 운영방안 연구	40
세계도시포럼(WUF) 유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전략 수립	49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화제도 활용방안(I)	49
부산지역 지역안전지수 개선·관리체계 구축(I)	49
부산광역시장 관사 활용방안 연구	49
부산 스타일테크 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연구	49
부산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49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 연구	49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산 생활권 재구축 방안	49
부산광역시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	49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49

부산지역 해양치유자원 발굴에 따른 활용방안	49
부산여성회관 기능고도화를 위한 공간구상	49
부산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방안	49
부산지역 표면처리산업 육성방안	49
코로나19, 부산지역 노동의 미래와 과제	49
부산지역 자치구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49
부산, 15분 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	49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부산시 관광진흥과)	49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49
부산시 중대재해 실태와 정책과제	49
부산시티투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49
도심지 소규모 필지 개발유도 방안 연구	50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인구 유지 방안	50
동남권 중심철도역 추진전략	50
탄소중립(넷제로)기반 부산형 트라이포트 기본구상	50
부산시 융합방사선산업 육성 방안	50
부산광역시 산학협력 고도화 방안	50
부산지역 공영관광지 평가 지표 개발	50
도시 수용력 기반의 부산시 용도지역 관리 방향	50
부산지역 주요 산업부문 탄소배출 감축 지원방안	50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그린뉴딜 추진 방안	50
깨끗하고 안전한 영남권 물관리체계 구축방안	50
영남권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50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계획(부산시 원자력안전과)	50
기장군 2040 장기발전계획(기장군 기획청렴실)	50
부산광역시 통합물관리기본계획(부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50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50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실태	50
초고령사회, ‘슈퍼시니어’를 맞이하는 부산의 준비	50
부산의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생활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	51
포스트 시네마 시대 지속가능한 부산 영화·영상·미디어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연구	51
벨리카고 실태분석을 통한 가덕신공항 항공화물 확대방안	51
그린인프라 공간분석을 통한 부산시 기후변화 적응성 강화 방안	51
부산시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방안	51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한 도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방안 연구	51
부산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51
부산기장해안마을	51
부산갈매기의 야구이야기	51
부산의 골목길	51
2021년 청년프론티어	51

2021 시민연구원	51
부산광역시 물산업융합연구단지 조성방안	51
외부충격 유형에 따른 영향과 부산경제 회복탄력성 제고방안	51
부산형 씨푸드테크산업 육성방안 연구	51
부산형 데이터 댐 기반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	51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효율적 운영방안	51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용역	51
부산발전 대선 공약과제 발굴	51
부산 영화·영상 클러스터화를 위한 연계 협력 방안	51
위성 영상을 이용한 도시모니터링 가능성 연구	51
한중일 분업구조를 통한 부산시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52
부산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52
부산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52
동북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부산의 대응	52
부산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효과 확대방안	52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제18차, 종합조사)(부산시 환경정책과)	52
부산광역시 제4차 지역물류계획 수립(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52
코로나 이후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사회적 가치 연구	52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복합 리스크 극복방안	52
일본 (지방)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과 부산의 과제	5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부산지역 도시관리 방향	52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52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방안	52
부산 노인의 행복실태조사	52
철도 중심 도시의 특성과 베를린의 발전전략	52
서낙동강 비점오염 영향 평가 및 저감기술 연구	52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부산광역시, 경상남도)	52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국토교통부)	52
낙동강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 방안	52
부산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방안	53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평가를 통한 부산형 도시재생 방향	53
부산지역화폐의 경제효과와 발전방향	53
부산지역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53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	53
부산업사이클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3
정기간행물	54
BDI포커스	54
대중교통 친화도시를 위한 일석삼조, 부산DRT	54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 도시디자인 통합추진 과제	63
한중수교 30주년, 부산의 대중국 경제협력, 메가시티를 지	63

부산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서부산 '사이언스 파크' 조성	63
동남권 중심철도역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63
부산RCE(부산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국제 인증 필요성과 획	63
두바이 사례로 본 부산 트라이포트 완성 전략	63
부산형 15분 도시 세계 선도를 위한 조성 방식	63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의 가능성과 대전환	63
2021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63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생활SOC에 집중해야	63
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부산의 주요 과제	63
부산 재난안전산업, 연계와 집적으로 활성화해야	63
'15분 도시 부산'시민 문화권 보장이 핵심	63
자율주행 선도도시를 위한 부산의 과제	63
오시리아(OSIRIA),세계적 관광단지 되려면	63
부산, 환경보건 정책 적극 대응해야	63
호국보훈의 달 6월, 평화도시 부산의 과제	63
효과적 재난관리 위해 도시 회복력 강화해야	63
일자리 여건 변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63
부산,무장애(Barrier-Free)도시로 전환 시급	64
중대재해 제로(ZERO)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 제언	64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부산시 도시계획 전환	64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무역구조 평가와 대응 방안	64
'2050 탄소중립 도시'전화를 위한 부산의 대응 과제	64
부산지역 항만 미세먼지 이슈와 저감 방안	64
2020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64
코로나19 시대 부산의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방안	64
혁신적 진화 중인 미래 모빌리티 부산의 운영 방안	64
EBPM, 市政 운영 효과 제고의 새로운 전략(증거 기반	64
부산시민 주거실태와 정책 방향	64
미래 부산의 중심지 체계, '넷통 시티' 제안	64
부산 글로벌 전자상거래 해상물류 허브 구축	64
부산울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미래 먹거리 창출	64
'지구(地球)보행의 신(新)문명도시', 부산이 되려면	64
AI(인공지능) 중심도시 부산, AI생태계 조성에서 시작	64
해양수도 부산, 해양플라스틱 관리 로드맵 필요	64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64
중국·홍콩·대만의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과 시사점	65
부산 디지털 산업의 新성장동력, 블록체인 생태계	65
코로나19 부산관광 위기 극복 방안	65
중국 조선기자재산업의 성장과 부산의 대응	6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시 정책 대응	65

플랫폼 노동 확산과 부산시의 대응	65
부산 제조업 혁신플랫폼, 스마트산업단지	65
해양신산업,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의 신성장동력	65
2019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65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왜 필요한가?	65
도시 수용력, 부산시 도시계획의 새로운 접근	65
부산지역 라이프스타일 기반 스포츠산업 육성 전략	65
디지털전환으로 부산 첨단 해양일자리 창출	65
부산의 신제조업 기반, 탄소융복합소재부품	65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이정석)	65
도시의 안전·방재시스템의 질이 시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대	65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과제(여운상)	65
오사카의 월드엑스포 유치가 부산에 주는 시사점	65
환동해 경제권 활성화의 大동맥, 북방물류 루트 개척	65
‘부산노동권익센터’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	65
부산관광의 새로운 기획,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	65
다목적 보행공간 조성을 통한 부산 원도심 활성화(윤지영)	66
부산시 수출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황영순)	66
부산의 남북경제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권태상)	66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될 수 없다(이은진)	66
2018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66
부산 뷰티서비스업의 새로운 기회와 도약과제(장정재)	66
新 라이프스타일 시대 부산 도시정책의 전환	66
부산 스마트시티로 남북협력의 기회 선점	66
"수소 바닷길(Sea Way)" 선언, 수소경제사회 진입의	66
우수정책 수출을 통한 부산 도시외교 강화(윤지영)	66
부산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을 방지	66
부산발전포럼	67
부산발전포럼제197호	67
부산발전포럼제196호	85
부산발전포럼제195호	85
부산발전포럼제194호	85
부산발전포럼제193호	85
부산발전포럼제192호	85
부산발전포럼제191호	85
부산발전포럼제190호	85
부산발전포럼제189호	85
부산발전포럼제188호	85
BDI경제동향브리프	86
BDI경제동향브리프제28호	86

BDI경제동향브리프제27호	99
BDI경제동향브리프제26호	99
BDI경제동향브리프제25호	99
BDI경제동향브리프제24호	99
BDI경제동향브리프제23호	99
BDI경제동향브리프제22호	99
BDI경제동향브리프제21호	99
BDI경제동향브리프제20호	99
BDI경제동향브리프제19호	99

BDI산업동향	100
BDI산업동향10호	100
BDI산업동향 9호	113
BDI산업동향 8호	113
BDI산업동향 7호	113
BDI산업동향 6호	113
BDI산업동향 5호	113
BDI산업동향 4호	113
BDI산업동향 3호	113
BDI산업동향 2호	113
BDI산업동향 1호	113

부산고용동향	114
--------	-----

BDI국내정책연구동향	115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63호	115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62호	128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61호	128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60호	128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9호	128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8호	128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7호	128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6호	128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5호	128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4호	128

미디어	129
-----	-----

영상리포트	129
-------	-----

인포그래픽스	130
--------	-----

[인포그래픽스 제127호]공공주도 노후주거지 재생	130
-----------------------------	-----

부산시 주거여건 진단	130
-------------	-----

출산율을 높이려면(부산사회조사_가족편)	130
-----------------------	-----

부산대개조에 따른 부산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전략	131
-------------------------------	-----

데이터로 보는 부산항 물류	131
----------------	-----

코로나19 부산시민 생활변화	131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와 공적지원 방안	131
해양신산업,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의 신성장 동력	131
공유교통 활성화로 부산교통 혁신플랫폼 구축	131
이슈큐레이션	132
[부산이슈큐레이션 제 17호]소프트파워 부산을 꿈꾸다	132
[부산이슈큐레이션 제16호]'2050탄소중립 도시 부산'을 그린(Green)다	133
[부산이슈큐레이션 제15호]#피란수도부산#유네스코세계유산	134
[부산이슈큐레이션 제14호]#항만미세먼지#대기오염#온실가스#대기질	135
[부산이슈큐레이션 제13호]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 정책연구	136
[부산이슈큐레이션 제12호]#인구변화#인구정책#교통정책#도시정책	137
[부산이슈큐레이션 제11호]#스마트산업#스마트공공#스마트시민사회	138
[부산이슈큐레이션 제10호]부산, 힐링·치유의 도시로 거듭나다	139
[부산이슈큐레이션 제9호] #일자리#청년일자리#노동	140
열린광장	141
데이터 개방	141
아카이브	141
부산경제통계포털	141

부산연구원

BDI간행물

연구보고서

통상도시 부산을 위한 비전과 전략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방안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방안

A Study on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Young One-person Household Members' Life in Busan after COVID-19

김세현·김민경·이가현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산시의 1인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부산의 1인가구 증가의 이면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대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필요
 - 한국에서 1인가구는 대표적인 사회취약계층이기 때문에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부산지역의 청년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 1인가구 정책이 필요
 - 1인가구는 세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와 중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에 각기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
 - 부산의 경우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청년 1인가구 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청년 1인가구가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청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1인가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됨
 -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정신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실태 연구는 부족함
- 부산지역의 청년 1인가구 실태를 경험적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제안함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탐색
 - 국내외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조사
 - 코로나19가 부산 청년 1인가구에 미친 영향을 진단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시

-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연구범위: 2022년 기준 부산시 거주 청년(만 18~34세) 1인가구
 - 연구방법: 사례연구 및 정량분석,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 전국에서 나타나는 1인가구 증가 추세와 더불어 청년 1인가구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21년 기준 전국의 청년 1인가구는 212.2만 가구로 2015년 대비 43.6% 증가(인구총조사, 2021)
 - 부산의 청년 1인가구 수는 13.3만 가구로 광역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 부산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부산의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구성비(27.3%)는 전국(29.6%) 보다 약간 낮은 편임
- 부산의 청년 1인가구 수와 전체 1인가구에서 청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5년 부산시의 청년 1인가구는 9.1만 가구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3.3만 가구로 2015년 대비 약 45.7% 증가 함
 -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가구 비율의 경우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약간 감소 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체 1인가구의 27.3%가 청년 1인가구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청년 1인가구의 구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
 - 부산시의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3,620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은 부산진구와 수영구, 연제구, 서구, 해운대구, 중구, 동구이며, 남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은 사하구, 영도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북구, 남구, 사상구, 동래구로 조사됨
 - 부산진구의 경우 여성 청년 1인가구의 수가 남성 청년 1인가구에 비해 2,070가구가 많았던 반면, 사하구의 경우 남성 1인가구의 수가 여성 1인가구에 비해 1,487가구가 많아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금정구의 경우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36.1% 수준이지만(인구총조사, 2020),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 비는 35.8%로 부산 구/군중 가장

높은 수준임. 반면, 북구의 경우 전체 1인가구 대비 청년 1인가구의 비가 가장 낮은 지역(15.7%)으로 나타남

- 부산지역에서 나타나는 청년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교육 및 거주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및 계층적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함
 - 주요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는 금정구, 부산진구, 남구 역시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청년 1인가구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음
 - 강서구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청년 남성 1인가구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유추됨

■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

- 해외의 경우 가구형태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사회적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 및 고독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영국정부는 2018년 1월에 조 콕스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외로움 대응부서를 설립
 - 외로움은 특정 연령 또는 사회적 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사회문제임을 강조
 - 국가적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사회적 관계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
 - 외로움 문제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정부 정책의 실천, 실증적이고 과학적 정책 대안 마련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접근
 - 외로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정부는 2021년 2월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해 내각을 신설함
 - 내각 관방에 고독·고립 대책실을 설치하여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안, 사회적 고독·고립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 고독·고립대책실은 기존 중앙부처가 수행해오고 있던 고독·고립대책 관련 정책 총괄과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
 - 고독·고립 대책의 기본방침
 - 고독·고립에 관한 지원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기 쉬운 사회를 조성
 - 상황에 따른 상담 지원과 정책 연결

- 사람 간의 연결이 체감되는 지역환경 조성
 - 비영리 단체의 활동 지원 및 관·민·비영리 단체 간 연계 강화
-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6월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I)'을 발표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빈곤 및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취약 1인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 정책 대응을 위해 1인가구 생활기반(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별 5대 분야 정책 과제와 1인가구 실태조사 강화 방안을 제시
-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1인가구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형태임은 분명하나, 모든 1인가구가 동일하게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님
 - 현재 국내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세대 및 경제·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1인가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 및 고독사 문제에 주목하면서 조례를 통해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
- 2022년 5월 기준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28건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제정된 조례는 239건으로 총 267건의 조례가 제정됨
 - 각 조례가 담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수행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탐색
 - 식사문제 해결: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식습관 관리임. 이는 많은 1인가구 구성원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적 고립이 염려되는 1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음.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모임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안되는 동시에, 공유 공간 구축을 통한 관계 형성 방안 역시 나타나고 있음
 - 장례: 장례 토픽은 고독사 관련 지원 사업으로 고독사가 임박하거나, 발생한 뒤 수행해야 할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응급상황 대응: IT기술을 활용하여 1인가구 구성원의 생활 활동을 파악하고, 응급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분류됨
 -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이 분류됨. 특히 정부, 지역, 민간영역 연계가 강조되고 있음
 - 방문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노인들의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들이 나타남. 앞선 고독사 예방토픽과는 다르게 관리사를 통한 직접적인 방문지원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심리상담: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들이 분류됨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정부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토대로 부산지역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4대 분야(소득·돌봄, 안전, 주거, 생활·건강)별 생활밀착형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
 -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는 정책지원방안 이외에도 1인가구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수립·시행되지는 않음
- 서울시는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범죄·고립·주거 분야의 안심정책을 추진
- 서초구를 시작으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지원센터 운영

■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부산시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
 - 조사대상
 - 부산지역에 거주중인 만 18~34세 청년 1인가구 1,000명
 - 지역, 성별, 연령에 비례한 할당 표집 수행
 - 1인가구 기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 조사기간: 2021년 5월 9일 ~ 2022년 6월 17일(6주)

- 1인가구의 삶, 주거, 경제생활, 건강,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안전, 결혼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
- 부산 청년 1인가구의 특성
 -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노년 1인가구와 달리 부산 거주 청년 1인가구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수준을 중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기대 역시 긍정적인 편임
 - 청년세대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안정이 요구됨
 - 고용, 훈련, 진학을 하지 않는 니트(NETs) 청년의 경우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1인가구를 구성하지 못함
 - 1인가구를 구성하였더라도 졸업이나 실직과 같은 개인의 여건이 변화하게 된다면 기존의 가족에게 돌아가기도 함
 - 사회안전망 제공이 시급한 노년 1인가구와 달리 청년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청년 1인가구는 노년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98% 이상의 응답자가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
 - 청년 1인가구는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음
 - 다수의 청년 1인가구는 다른 1인가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
 -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가하며, 앞으로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함
 - 타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더욱 높음
 - 부산출신 1인가구의 21.1%, 울산·경남 출신 1인가구의 18.3%가 1인가구 구성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단절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기타지역 출신 1인가구의 경우 33.6%가 사회적 관계의 축소/단절을 경험하였다고 응답
 - 부산 출신 1인가구에 비해 울산·경남 출신 및 기타지역 출신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편

- 부산 출신 1인가구에 비해 기타지역 출신의 정서적 불안감이 높은 편
- 타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1인가구 구성 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지원정책이 주민등록상 1인가구 구성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타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들의 전입 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가 부산거주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미친 영향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청년 1인가구에 미친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한 편
 - 청년 1인가구의 24.8%가 사회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학생임
 - 응답자의 67.8%가 임금근로자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5.3%에 불과하여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1인가구 유지를 포기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코로나19는 청년 1인가구에게 문화·여가생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청년 1인가구의 86.4%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여가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다고 응답
- 성별에 따라 코로나19가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다름
 - 여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더욱 단절되었다고 느꼈으나, 남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확장되었다고 응답
 - 관계지향적인 여성에게 코로나19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나타난 온라인 중심의 관계성 형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

■ 부산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과제

○ 청년의 특성에 맞춘 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

- 부산 거주 청년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표적 사회 취약계층인 노년 1인가구와는 다른 형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사회적 고립은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은 사회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의 사회고립 예방정책의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
 - 1인가구 정책이 1인가구의 전환 및 확산을 장려·유도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1인가구 지원정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 청년의 생애주기 및 사회구조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취약계층만이 아닌 청년 1인가구 모두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이 요구됨
 - 청년시기에 구성된 1인가구는 영구적 1인가구가 아닌 만큼 청년 1인가구 구성을 장려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이 필요
 - 부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인가구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편적 청년 지원정책에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을 다수 포함시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성별 및 주거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 밀집 지역(금정구,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주요 행위자 간 정책 네트워크 재구조화가 요구됨
 - 현재 부산의 1인가구 지원정책은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성상 다인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
 - 노년 1인가구의 경우 한국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반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삶의 질 측면에서 노년 1인가구 보다는 보다 여유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
 - 효율적인 부산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중심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청년층의 경우 노년층에 비해 지역사회를 통한 접근이 어려운 만큼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년 1인가구 지원 방안 및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1〉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목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청년중심의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청년 1인가구 정책 반영 - 주요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청년 1인가구 정책 개발
	부산 청년플랫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정책 접근성 강화	청년 개인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계획	부산이주 1인가구를 위한 웰컴 세트 제공	타 시·도지역에서 부산으로 전입하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 및 정보 제공
	1인가구 위케이션 지원	- 공유공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업무공간 및 숙박공간을 제공하여 위케이션 사업을 추진 - 국내 대학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산살기 지원사업 수행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의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운영 1인가구 특성 및 개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 개별 1인가구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정책,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예비 및 신규 1인가구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독립 계획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사업 수행
	사회적 고립 청년 1인가구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	고립 1인가구 발굴을 위한 주요 행위자 간 네트워크 구성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청년 1인가구 지원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 여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
1) 연구범위 및 방법	2
2) 연구방법	2
3. 주요 연구내용	3
제2장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4
1. 청년 1인가구의 증가	4
1) 전국 청년 1인가구 현황	4
2)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증가	5
2.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6
1)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청년 1인가구	6
2) 노년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의 비교	7
3. 부산 청년 1인가구 현황 및 시사점	9
제3장 1인가구 지원정책 현황	10
1. 해외 1인가구 지원정책	10
1) 영국	10
2) 일본	17
2. 국내 1인가구 지원정책	21
1)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21
2)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23
3) 제1차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27
4)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29
3. 선행연구 정리 및 시사점	32

제4장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34
1. 설문조사 개요	34
1) 조사목적	34
2) 조사방법 및 기간	34
3) 조사 내용	35
4) 응답자 특성	35
2. 설문조사 결과	37
1) 1인가구의 삶	37
2) 주거 및 경제	47
3) 건강	52
4)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55
3.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7
1) 부산 청년 1인가구의 특성	57
2)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	58
3) 코로나19가 부산거주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미친 영향	58
제5장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과제	60
1.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방향	60
1) 청년의 특성에 맞춘 정책 방향성 설정	60
2)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61
3)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62
4) 주요 행위자 간 정책 네트워크 재구조화	62
2. 부산시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64
1)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65
2)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계획	71
3)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74
4)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청년 1인가구 지원	79
3. 연구 요약 및 시사점	80
1) 부산 청년 1인가구의 특성	80
2) 성공적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81
Abstract	83
참고문헌	85
부록	88
1. 설문지	88
2.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 빈도표	103

부산지역 공연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연시설 운영모델과 실행방안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부산시민 문화권 보장방안

아시아 창업도시를 위한 부산혁신도시 발전과제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 방안 연구

부산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방안

2022-10-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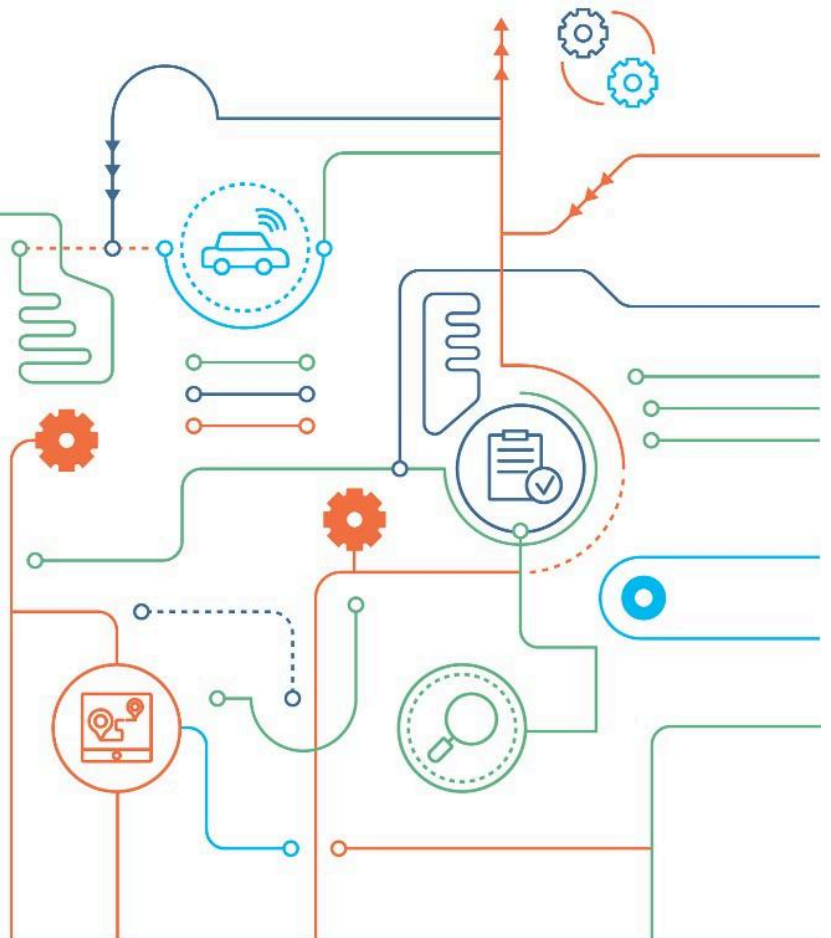
BDI insights



부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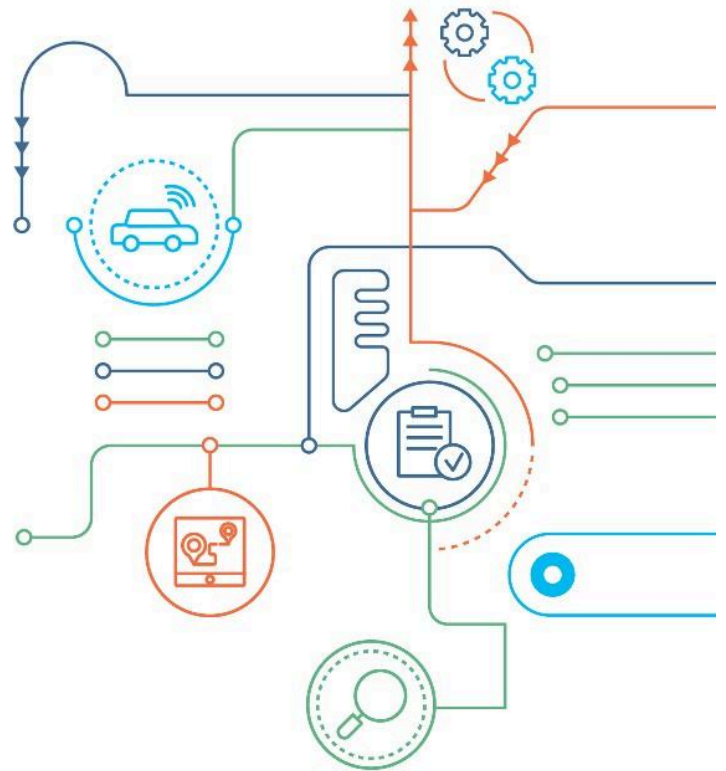
최윤찬 · 이자연 · 남호석 · 김아진 · 박혜림

BDI 부산연구원
BUSAN DEVELOPMENT INSTITUTE



2022-10-037

BDI Insights



Contents

I. 수소시범도시란?	1
II. 수소시범도시 사례	3
III. 부산시 여건 검토와 도입 모델	9
IV. 부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 방안	27
V. 결론 및 추진절차	52

요약

- 2040년까지 전국 지자체 30%를 수소도시로 조성 계획
 -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수소도시를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법(수소도시법)”을 근거로 전국 확산을 지속적 추진
- 그동안 ‘수소도시법’이 입법화 되지 못해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22년 4월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
- ‘수소시범도시’사업에 울산시, 안산시, 전주·완주, 삼척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소시범도시’사업이 ‘20년부터 진행 중
 - 수소시범도시 시행 지침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진행 중
- 부산시 수소시범도시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 여건 검토와 수소와 관련된 부산시의 보유자원을 파악하고, 수소시점도시 시행 지침 항목별로 부산시의 여건을 판단함
 -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수소충전소, 관련 R&D, 혁신기관 등을 검토한 결과 수소시범도시 추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수소 생산과 역외 수소 반입 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시행이 필요한 상황
- 6가지의 부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안을 설정
 - 보유하고 있는 수소자원을 중심으로, 6가지의 수소시범도시 조성안을 설정
 - 조성안은 수소시범도시 지침에 제시한 사항을 기초로 구축
 - 주거지, 산업단지, 항만, 교통, 배관망, R&D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
- 6가지 안에 대하여, 연구 수행 자문단 (7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트라이포트 지역 수소 시범도시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
- 트라이포트(항만, 공항, 철도), 주거, 수소배관망, LNG 벙커링 연계 수소생산, 암모니아 수소 규제특구 사업과의 연계 등을 주요 사항으로 설정

요약

- 총 사업비는 9,794.4억 원 (국비 4,733/시비 2,288/민자 2,742)으로 산정
: LNG 벙커링 조성사업비 약 2~3조원은 사업비 내역에서 제외한 것임

〈부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안) - 우선추진 사업〉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실태분석 및 시사점

부산시 리스크 감사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

부울경 중심도시 부산 도시공간 구축방안

문화콘텐츠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부산시 주요 정책방향

미래 혁신 인프라, 제2에코델타시티에 거는 기대와 과제

현안연구
2022-07-027

신교통수단(트램) 운영방안 연구

이상국·이동현·이원규·김선우

요약

■ 연구 개요

-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오륙도 실증노선 및 C-Bay~Park선(1-1단계)의 개통에 대비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이며 중장기적 트램 도입의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 운영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부산의 트램계획 현황 및 운영 고려사항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는 결국 사업주체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가선 트램 차량의 성능과 관련된 비용 증가 요인을 파악하여 장래 운영에 대비해야함
- 도시철도의 운영방식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 운영, 민간에 위탁운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합동운영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기관)는 4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운영자의 4대 요건 : 운영의 효율성(비용 효율 포함), 트램 운영 기술 및 노하우, 교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및 책임성,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 부산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운영자(기관)가 갖추어야 할 4대 요건 중 운영 효율(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책임을 다하는 운영자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음

■ 도시철도 운영유형 검토 및 유사 운영(실용화사업) 사례

- 도시철도의 세 가지 운영유형(지방자치단체 직·간접 운영, 민간위탁운영, 민관합동운영)은 각각 법적근거를 갖고 있으나, 법적 운영조직의 한시성(단점) 또는 지속가능성(장점)이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직접운영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 한시성
 - 지방자치단체 간접운영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속가능성

- 민간위탁운영 : 도시철도법 및 동법 시행령 → 한시성 & 지속가능성
 - 민관합동운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한시성 & 지속가능성
- 상기의 운영유형을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에 적용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고, 유형에 따라 장단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민관합동운영은 이론상 장점이 많지만 현실 적합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사례도 없음

구분	직·간접 운영		민간위탁 운영	민관합동 운영
	직영 (사업소 설치)	간접 운영 (부산교통공사)		
장점	공공성, 공익성, 책임성	공공성, 공익성, 책임성, 지역상생	창의성, 신속성	공공 장점 + 민간 장점
단점	한시성, 전문성 부족	조직 비대화, 비용효율 저하	책임한계, 수익성 추구	의견충돌, 비용효율 한계, 민간 책임한계

-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 실증구간에 참고하고자 조사한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 실용화사업 운영사례를 보면, 신기술 철도차량의 실증사업은 제반 여건(연장구간 건설, 수요확보, 차량성능 공개, 타 지자체 수요 등)이 수반되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줌

■ 오륙도선 실증구간의 운영과 부산형 최적 트램 운영방안

①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한 최적 운영

-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 운영에 관련하여 설문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시민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부산교통공사의 공공성과 안전성의 강점으로 민간 또는 민관합동보다 트램 운영을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하나, 높은 인건비(낮은 비용효율)가 우려됨
 - 둘째, 운영유형별 장단점과 운영자의 4대 요건을 고려할 때,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에 기대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민관합동 운영에 기대를 보임
 - 셋째, 대안적 운영방식(부산교통공사 자회사 or 시내버스사업자단체와의 공동 자회사)을 추가 포함할 때, 여전히 부산교통공사에 가장 큰 기대를 보이지만, 대안적 운영방식에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냄
 - 넷째, 시민들은 장래에도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또는 공동 자회사)에 의한 트램

- 운영을 선호하지만, 트램 전문운영(제2교통공사)의 출범에 기대를 나타냄
- 요약하면, 시민들은 공공(부산교통공사)에 의한 오륙도선 트램 운영을 희망하지만 낮은 비용효율을 우려하고 있어, 대안적 운영방식(공공의 책임성 + 지역의 민간 참여 ⇒ 상생운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② 무가선 트램의 성능과 오륙도선 트램의 최적 운영

- 신기술 철도차량으로 소개되는 배터리 탑재형 무가선 트램은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DOD(Death of Discharge)가 검증되어야 하며 실증사업뿐만 아니라 장래 확대 도입에 대비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함
- 부산광역시에는 오륙도선 실증사업, C-Bay~Park선(1-1단계)을 시작으로 장래 다수의 트램 노선 건설이 예상되는 바, 무가선 트램의 성능을 토대로 충전간격 운행 횟수와 차량소요편수를 산정하여 무가선 트램의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함
 - 배터리 탑재형 무가선 트램은 노선의 길이가 짧은 구간의 운영에서 차량소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가선의 장점이 돋보이지만, 노선이 많아지고 길어지면 차량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드러남
-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 실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최적 운영사 선정방안'은 평가요소의 편향성(개발자 또는 공급자 중심)이 나타나는데 특정 업체를 운영사 선정에 포함하기 위해 이론상 장점이 많지만 현실적 적용성이 낮은 민관합동운영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음
- 본 연구에서 공급자 측면과 수용자 측면의 형평성을 고려한 평가요소를 이용하여 운영방식 선정을 재평가한 결과, 가중치 미적용 시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가중치 적용 시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운영이 가장 높게 평가됨
 - 공급자 측면 : 전문성, 효율성, 수익성, 적시성
 - 수요자 측면 : 공공성, 운영안정성, **시민호응성**, **지역상생성**
-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은 부산에서 국내 최초 도입이 기대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호응성과 지역상생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방식에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가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부산교통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동시에 타 지역의 민간 기업이 아닌 부

산의 민간 대중교통 운영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부산교통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동시에 민간이 참여하여 주식회사로 공동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임
 - 공동 자회사의 설립에 자본금은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의 노선길이(1.9km) 및 차량 운영규모(5편성) 등을 토대로 산정(약 5억 원)이 가능
- 부산교통공사는 50% 이상을 출자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 지배력을 갖고 대중교통(트램)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당사자(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는 50% 미만을 출자하여 민간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

③ 부산형 최적 트램 운영 방안

- 오륙도선 트램 실증구간은 노선길이가 짧고(1.9km), C-Bay~Park선(1-1단계)도 소규모 트램시설(1.944km)에 불과하므로 부산교통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되는데 아래에서 운영방안을 검토함
 - 부산교통공사의 단독 자회사 운영 : 기존 자회사 활용 vs 자회사 신설
 -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 : 부산교통공사와 민간당사자가 공동 자회사 설립
- 부산교통공사의 단독 자회사 운영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부산 무가선트램 실증노선 운영사 선정방안 검토보고서(2020.11)'에서 산정된 결과와 비교할 때, 기존 자회사에 트램사업본부를 만들어 경영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인력 감축 및 운영비 절감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운행횟수 및 시격 : 253회/일 (05시~24시) 및 시격 RH 6분, NH 9~12분
 - 인력 감축 : 57명('검토보고서') → 55명(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신설) → 49명(기존 자회사 활용)
 - 연간 운영비 절감 : 66.04억 원('검토보고서') → 48.3억 원(기존 자회사 활용)
-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인 공동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면 내부 의사결정 상충 및 경영효율화 한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역 상생운영의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한데, 인력 감축은 기존 자회사 활용에 비해 크지 않음
 - 인력 감축 : 57명(철기연 '검토보고서') → 55명(공동 자회사) → 감축 2명
- 오륙도선 실증구간 및 C-Bay~Park선(1-1단계) 구간은 운영거리가 2.0km 미만으로 운영에 소요인력은 각 50~60명, 운영비는 각 50억 원 내외로 추정되어 부

산교통공사의 자회사 또는 공동 자회사를 통한 운영이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최적 운영방안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 실증사업은 철도차량의 배터리 성능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장래 운영비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배터리 성능에 대한 DOD 검증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래 무가선 트램의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함
- 장래 트램시설 규모가 크게 증가할 때(오륙도선 및 C-Bay~Park선 연장, 강서선/송도선/정관선 등 건설), 자회사 또는 공동 자회사에 의한 트램 운영방식은 한계에 부딪칠 수 있어 공공의 독립법인(공기업)으로 전환 필요함
- 2030년까지 개통이 기대되는 트램 노선들은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또는 공동 자회사)에 의해 운영이 가능하지만, 트램시설 규모가 크게 증대하는 2033년 이후에는 공동 자회사를 모태로 제2교통공사를 출범하여 부산 트램을 운영하는 것이 시민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최적 방안임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3) 연구의 흐름	3
3. 연구의 주요 내용	4
제2장 부산의 트램계획 현황 및 운영 고려사항	5
1. 부산광역시 트램계획 현황	5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의 트램 노선	5
2) 부산광역시 트램 추진 현황	8
2. 트램 운영의 고려사항	13
1) 운영의 효율성	13
2) 트램의 운영 기술 및 노하우(know-how)	14
3) 교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책임성	15
4)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16
제3장 도시철도 운영유형 검토 및 유사 운영(실용화사업) 사례	17
1. 도시철도의 운영유형	17
1) 운영유형에 따른 구분	17
2) 도시철도의 운영 관련 법령검토	19
3) 도시철도 운영유형에 법적근거 검토	25
2. 운영유형별 장·단점 검토	30
1) 법적근거에 의한 장단점	30
2)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에 대한 적용	31
3. 실용화사업 운영사례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35
1) 자기부상열차의 개발과 실용화사업의 추진	36
2)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개통과 운영	37

제4장 오륙도선 실증중간의 운영과 부산형 최적 트램 운영방안	43
1.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한 최적 운영	43
1) 설문조사 개요	43
2) 조사 결과	44
3) 시민의견 수렴에서 나타난 시사점	55
2. 무가선 트램의 성능과 오륙도선 트램의 최적 운영	56
1) 무가선 트램의 성능과 1회 충전 주행거리	56
2) DOD 적용과 안정적 운영조건	57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최적 운영사 선정방안’ 재검토	59
4)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방식	66
3. 부산형 최적 트램 운영 방안	69
1)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를 통한 운영	69
2)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 : 공동 자회사 설립	76
3) 장래 트램시설 규모에 따른 중장기 운영방식	79
제5장 맺음말 및 정책제언	81
1. 맺음말	81
2.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6
부록	87

[세계도시포럼\(WUF\) 유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전략 수립](#)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화제도 활용방안\(I\)](#)

[부산지역 지역안전지수 개선·관리체계 구축\(I\)](#)

[부산광역시장 관사 활용방안 연구](#)

[부산 스타일테크 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연구](#)

[부산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 연구](#)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산 생활권 재구축 방안](#)

[부산광역시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부산지역 해양치유자원 발굴에 따른 활용방안](#)

[부산여성회관 기능고도화를 위한 공간구상](#)

[부산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방안](#)

[부산지역 표면처리산업 육성방안](#)

[코로나19, 부산지역 노동의 미래와 과제](#)

[부산지역 자치구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부산, 15분 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부산시 관광진흥과\)](#)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부산시 중대재해 실태와 정책과제](#)

[부산시티투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도심지 소규모 필지 개발유도 방안 연구](#)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인구 유지 방안](#)

[동남권 중심철도역 추진전략](#)

[탄소중립\(넷제로\)기반 부산형 트라이포트 기본구상](#)

[부산시 융합방사선산업 육성 방안](#)

[부산광역시 산학협력 고도화 방안](#)

[부산지역 공영관광지 평가 지표 개발](#)

[도시 수용력 기반의 부산시 용도지역 관리 방향](#)

[부산지역 주요 산업부문 탄소배출 감축 지원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그린뉴딜 추진 방안](#)

[깨끗하고 안전한 영남권 물관리체계 구축방안](#)

[영남권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계획\(부산시 원자력안전과\)](#)

[기장군 2040 장기발전계획\(기장군 기획청렴실\)](#)

[부산광역시 통합물관리기본계획\(부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실태](#)

[초고령사회, ‘슈퍼시니어’를 맞이하는 부산의 준비](#)

[부산의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생활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

[포스트 시네마 시대 지속가능한 부산 영화·영상·미디어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연구](#)

[벨리카고 실태분석을 통한 가덕신공항 항공화물 확대방안](#)

[그린인프라 공간분석을 통한 부산시 기후변화 적응성 강화 방안](#)

[부산시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방안](#)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한 도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방안 연구](#)

[부산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부산기장해안마을](#)

[부산갈매기의 야구이야기](#)

[부산의 골목길](#)

[2021년 청년프론티어](#)

[2021 시민연구원](#)

[부산광역시 물산업융합연구단지 조성방안](#)

[외부충격 유형에 따른 영향과 부산경제 회복탄력성 제고방안](#)

[부산형 씨푸드테크산업 육성방안 연구](#)

[부산형 데이터 댐 기반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효율적 운영방안](#)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용역](#)

[부산발전 대선 공약과제 발굴](#)

[부산 영화·영상 클러스터화를 위한 연계 협력 방안](#)

[위성 영상을 이용한 도시모니터링 가능성 연구](#)

[한중일 분업구조를 통한 부산시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부산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동북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부산의 대응](#)

[부산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효과 확대방안](#)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제18차, 종합조사\)\(부산시 환경정책과\)](#)

[부산광역시 제4차 지역물류계획 수립\(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코로나 이후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사회적 가치 연구](#)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복합 리스크 극복방안](#)

[일본 \(지방\)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과 부산의 과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부산지역 도시관리 방향](#)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방안](#)

[부산 노인의 행복실태조사](#)

[철도 중심 도시의 특성과 베를린의 발전전략](#)

[서낙동강 비점오염 영향 평가 및 저감기술 연구](#)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국토교통부\)](#)

[낙동강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 방안](#)

[부산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방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평가를 통한 부산형 도시재생 방향](#)

[부산지역화폐의 경제효과와 발전방향](#)

[부산지역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

[부산업사이클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정기간행물

BDI포커스

대중교통 친화도시를 위한 일석삼조, 부산DRT

현안연구
2022-07-027

신교통수단(트램) 운영방안 연구

이상국·이동현·이원규·김선우

요약

■ 연구 개요

-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오륙도 실증노선 및 C-Bay~Park선(1-1단계)의 개통에 대비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이며 중장기적 트램 도입의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 운영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부산의 트램계획 현황 및 운영 고려사항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는 결국 사업주체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가선 트램 차량의 성능과 관련된 비용 증가 요인을 파악하여 장래 운영에 대비해야함
- 도시철도의 운영방식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 운영, 민간에 위탁운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합동운영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기관)는 4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운영자의 4대 요건 : 운영의 효율성(비용 효율 포함), 트램 운영 기술 및 노하우, 교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및 책임성,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 부산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운영자(기관)가 갖추어야 할 4대 요건 중 운영 효율(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책임을 다하는 운영자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음

■ 도시철도 운영유형 검토 및 유사 운영(실용화사업) 사례

- 도시철도의 세 가지 운영유형(지방자치단체 직·간접 운영, 민간위탁운영, 민관합동운영)은 각각 법적근거를 갖고 있으나, 법적 운영조직의 한시성(단점) 또는 지속가능성(장점)이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직접운영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 한시성
 - 지방자치단체 간접운영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속가능성

- 민간위탁운영 : 도시철도법 및 동법 시행령 → 한시성 & 지속가능성
 - 민관합동운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한시성 & 지속가능성
- 상기의 운영유형을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에 적용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고, 유형에 따라 장단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민관합동운영은 이론상 장점이 많지만 현실 적합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사례도 없음

구분	직·간접 운영		민간위탁 운영	민관합동 운영
	직영 (사업소 설치)	간접 운영 (부산교통공사)		
장점	공공성, 공익성, 책임성	공공성, 공익성, 책임성, 지역상생	창의성, 신속성	공공 장점 + 민간 장점
단점	한시성, 전문성 부족	조직 비대화, 비용효율 저하	책임한계, 수익성 추구	의견충돌, 비용효율 한계, 민간 책임한계

-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 실증구간에 참고하고자 조사한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 실용화사업 운영사례를 보면, 신기술 철도차량의 실증사업은 제반 여건(연장구간 건설, 수요확보, 차량성능 공개, 타 지자체 수요 등)이 수반되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줌

■ 오륙도선 실증구간의 운영과 부산형 최적 트램 운영방안

①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한 최적 운영

-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 운영에 관련하여 설문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시민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부산교통공사의 공공성과 안전성의 강점으로 민간 또는 민관합동보다 트램 운영을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하나, 높은 인건비(낮은 비용효율)가 우려됨
 - 둘째, 운영유형별 장단점과 운영자의 4대 요건을 고려할 때,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에 기대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민관합동 운영에 기대를 보임
 - 셋째, 대안적 운영방식(부산교통공사 자회사 or 시내버스사업자단체와의 공동 자회사)을 추가 포함할 때, 여전히 부산교통공사에 가장 큰 기대를 보이지만, 대안적 운영방식에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냄
 - 넷째, 시민들은 장래에도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또는 공동 자회사)에 의한 트램

- 운영을 선호하지만, 트램 전문운영(제2교통공사)의 출범에 기대를 나타냄
- 요약하면, 시민들은 공공(부산교통공사)에 의한 오륙도선 트램 운영을 희망하지만 낮은 비용효율을 우려하고 있어, 대안적 운영방식(공공의 책임성 + 지역의 민간 참여 ⇒ 상생운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② 무가선 트램의 성능과 오륙도선 트램의 최적 운영

- 신기술 철도차량으로 소개되는 배터리 탑재형 무가선 트램은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DOD(Death of Discharge)가 검증되어야 하며 실증사업뿐만 아니라 장래 확대 도입에 대비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함
- 부산광역시에는 오륙도선 실증사업, C-Bay~Park선(1-1단계)을 시작으로 장래 다수의 트램 노선 건설이 예상되는 바, 무가선 트램의 성능을 토대로 충전간격 운행 횟수와 차량소요편수를 산정하여 무가선 트램의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함
 - 배터리 탑재형 무가선 트램은 노선의 길이가 짧은 구간의 운영에서 차량소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가선의 장점이 돋보이지만, 노선이 많아지고 길어지면 차량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드러남
-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 실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최적 운영사 선정방안'은 평가요소의 편향성(개발자 또는 공급자 중심)이 나타나는데 특정 업체를 운영사 선정에 포함하기 위해 이론상 장점이 많지만 현실적 적용성이 낮은 민관합동운영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음
- 본 연구에서 공급자 측면과 수용자 측면의 형평성을 고려한 평가요소를 이용하여 운영방식 선정을 재평가한 결과, 가중치 미적용 시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가중치 적용 시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운영이 가장 높게 평가됨
 - 공급자 측면 : 전문성, 효율성, 수익성, 적시성
 - 수요자 측면 : 공공성, 운영안정성, **시민호응성, 지역상생성**
-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은 부산에서 국내 최초 도입이 기대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호응성과 지역상생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방식에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가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부산교통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동시에 타 지역의 민간 기업이 아닌 부

산의 민간 대중교통 운영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부산교통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동시에 민간이 참여하여 주식회사로 공동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임
 - 공동 자회사의 설립에 자본금은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의 노선길이(1.9km) 및 차량 운영규모(5편성) 등을 토대로 산정(약 5억 원)이 가능
- 부산교통공사는 50% 이상을 출자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 지배력을 갖고 대중교통(트램)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당사자(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는 50% 미만을 출자하여 민간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

③ 부산형 최적 트램 운영 방안

- 오륙도선 트램 실증구간은 노선길이가 짧고(1.9km), C-Bay~Park선(1-1단계)도 소규모 트램시설(1.944km)에 불과하므로 부산교통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되는데 아래에서 운영방안을 검토함
 - 부산교통공사의 단독 자회사 운영 : 기존 자회사 활용 vs 자회사 신설
 -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 : 부산교통공사와 민간당사자가 공동 자회사 설립
- 부산교통공사의 단독 자회사 운영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부산 무가선트램 실증노선 운영사 선정방안 검토보고서(2020.11)'에서 산정된 결과와 비교할 때, 기존 자회사에 트램사업본부를 만들어 경영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인력 감축 및 운영비 절감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운행횟수 및 시격 : 253회/일 (05시~24시) 및 시격 RH 6분, NH 9~12분
 - 인력 감축 : 57명('검토보고서') → 55명(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신설) → 49명(기존 자회사 활용)
 - 연간 운영비 절감 : 66.04억 원('검토보고서') → 48.3억 원(기존 자회사 활용)
-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인 공동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면 내부 의사결정 상충 및 경영효율화 한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역 상생운영의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한데, 인력 감축은 기존 자회사 활용에 비해 크지 않음
 - 인력 감축 : 57명(철기연 '검토보고서') → 55명(공동 자회사) → 감축 2명
- 오륙도선 실증구간 및 C-Bay~Park선(1-1단계) 구간은 운영거리가 2.0km 미만으로 운영에 소요인력은 각 50~60명, 운영비는 각 50억 원 내외로 추정되어 부

산교통공사의 자회사 또는 공동 자회사를 통한 운영이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최적 운영방안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 실증사업은 철도차량의 배터리 성능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장래 운영비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배터리 성능에 대한 DOD 검증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래 무가선 트램의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함
- 장래 트램시설 규모가 크게 증가할 때(오륙도선 및 C-Bay~Park선 연장, 강서선/송도선/정관선 등 건설), 자회사 또는 공동 자회사에 의한 트램 운영방식은 한계에 부딪칠 수 있어 공공의 독립법인(공기업)으로 전환 필요함
- 2030년까지 개통이 기대되는 트램 노선들은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또는 공동 자회사)에 의해 운영이 가능하지만, 트램시설 규모가 크게 증대하는 2033년 이후에는 공동 자회사를 모태로 제2교통공사를 출범하여 부산 트램을 운영하는 것이 시민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최적 방안임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3) 연구의 흐름	3
3. 연구의 주요 내용	4
제2장 부산의 트램계획 현황 및 운영 고려사항	5
1. 부산광역시 트램계획 현황	5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의 트램 노선	5
2) 부산광역시 트램 추진 현황	8
2. 트램 운영의 고려사항	13
1) 운영의 효율성	13
2) 트램의 운영 기술 및 노하우(know-how)	14
3) 교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책임성	15
4)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16
제3장 도시철도 운영유형 검토 및 유사 운영(실용화사업) 사례	17
1. 도시철도의 운영유형	17
1) 운영유형에 따른 구분	17
2) 도시철도의 운영 관련 법령검토	19
3) 도시철도 운영유형에 법적근거 검토	25
2. 운영유형별 장·단점 검토	30
1) 법적근거에 의한 장단점	30
2)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에 대한 적용	31
3. 실용화사업 운영사례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35
1) 자기부상열차의 개발과 실용화사업의 추진	36
2)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개통과 운영	37

제4장 오륙도선 실증중간의 운영과 부산형 최적 트램 운영방안	43
1.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한 최적 운영	43
1) 설문조사 개요	43
2) 조사 결과	44
3) 시민의견 수렴에서 나타난 시사점	55
2. 무가선 트램의 성능과 오륙도선 트램의 최적 운영	56
1) 무가선 트램의 성능과 1회 충전 주행거리	56
2) DOD 적용과 안정적 운영조건	57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최적 운영사 선정방안’ 재검토	59
4)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방식	66
3. 부산형 최적 트램 운영 방안	69
1)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를 통한 운영	69
2) 대안적 민관합동 운영 : 공동 자회사 설립	76
3) 장래 트램시설 규모에 따른 중장기 운영방식	79
제5장 맺음말 및 정책제언	81
1. 맺음말	81
2.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6
부록	87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 도시디자인 통합추진 과제

한중수교 30주년, 부산의 대중국 경제협력, 메가시티를 지

부산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서부산 '사이언스 파크' 조성

동남권 중심철도역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부산RCE(부산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국제 인증 필요성과 획

두바이 사례로 본 부산 트라이포트 완성 전략

부산형 15분 도시 세계 선도를 위한 조성 방식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의 가능성과 대전환

2021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생활SOC에 집중해야

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부산의 주요 과제

부산 재난안전산업, 연계와 집적으로 활성화해야

'15분 도시 부산'시민 문화권 보장이 핵심

자율주행 선도도시를 위한 부산의 과제

오시리아(OSIRIA),세계적 관광단지 되려면

부산, 환경보건 정책 적극 대응해야

호국보훈의 달 6월, 평화도시 부산의 과제

효과적 재난관리 위해 도시 회복력 강화해야

일자리 여건 변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부산,무장애\(Barrier-Free\)도시로 전환 시급](#)

[중대재해 제로\(ZERO\)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 제언](#)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부산시 도시계획 전환](#)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무역구조 평가와 대응 방안](#)

['2050 탄소중립 도시'전화를 위한 부산의 대응 과제](#)

[부산지역 항만 미세먼지 이슈와 저감 방안](#)

[2020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코로나19 시대 부산의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방안](#)

[혁신적 진화 중인 미래 모빌리티 부산의 운영 방안](#)

[EBPM, 市政 운영 효과 제고의 새로운 전략\(증거 기반](#)

[부산시민 주거실태와 정책 방향](#)

[미래 부산의 중심지 체계, '넷툼 시티' 제안](#)

[부산 글로벌 전자상거래 해상물류 허브 구축](#)

[부산울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미래 먹거리 창출](#)

['지구\(地球\)보행의 신\(新\)문명도시', 부산이 되려면](#)

[AI\(인공지능\) 중심도시 부산, AI생태계 조성에서 시작](#)

[해양수도 부산, 해양플라스틱 관리 로드맵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국·홍콩·대만의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과 시사점](#)

[부산 디지털 산업의 新성장동력, 블록체인 생태계](#)

[코로나19 부산관광 위기 극복 방안](#)

[중국 조선기자재산업의 성장과 부산의 대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시 정책 대응](#)

[플랫폼 노동 확산과 부산시의 대응](#)

[부산 제조업 혁신플랫폼, 스마트산업단지](#)

[해양신산업,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의 신성장동력](#)

[2019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왜 필요한가?](#)

[도시 수용력, 부산시 도시계획의 새로운 접근](#)

[부산지역 라이프스타일 기반 스포츠산업 육성 전략](#)

[디지털전환으로 부산 첨단 해양일자리 창출](#)

[부산의 신제조업 기반,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이정석\)](#)

[도시의 안전·방재시스템의 질이 시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대](#)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과제\(여운상\)](#)

[오사카의 월드엑스포 유치가 부산에 주는 시사점](#)

[환동해 경제권 활성화의 大동맥, 북방물류 루트 개척](#)

[‘부산노동권익센터’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

[부산관광의 새로운 기획,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

[다목적 보행공간 조성을 통한 부산 원도심 활성화\(윤지영\)](#)

[부산시 수출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황영순\)](#)

[부산의 남북경제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권태상\)](#)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될 수 없다\(이은진\)](#)

[2018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부산 뷰티서비스업의 새로운 기회와 도약과제\(장정재\)](#)

[新 라이프스타일 시대 부산 도시정책의 전환](#)

[부산 스마트시티로 남북협력의 기회 선점](#)

["수소 바닷길\(Sea Way\)" 선언, 수소경제사회 진입의](#)

[우수정책 수출을 통한 부산 도시외교 강화\(윤지영\)](#)

[부산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을 방지](#)

부산발전포럼

부산발전포럼제197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정보지

부산발전포럼

BUSAN DEVELOPMENT FORUM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제197호)
 발행인 허문수 원장 직무대행
 발행처 (재)부산연구원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시입본부 8, 9F
 051 860 8650, www.bdi.re.kr
 등 록 부산 마-23, 1994년 10월 28일



총론	04
특집 I 15분 도시 부산	
15분 도시 정책과 부산 / 한영숙	10
건강한 살터를 일구는 15분 도시 / 박성필	18
15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 / 강필현	28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현 / 원향미	40
해외정책동향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노쿠니 사이타마 인재를들이 광역연합' / 이창석	48
BDI 연구보고서	
문화콘텐츠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부산시 주요 정책 방향 / 윤지영	68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실태조사 및 시사점 / 김도관·주수현·구윤호·정찬민	76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 방안 연구 / 권태상·김민경·이동현·이한나	82
부울경 중심도시 부산 도시공간 구축방안 - 철도인프라를 중심으로 / 이동현	90
BDI 소식	96

총론



“보행 등으로 일상생활 가능한 15분 도시 건강하고 편안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추구”

- 부산연구원 편집위원회



파리·오타와·포틀랜드·멜버른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15분 도시 개념에 기반한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5분 도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안적 도시 모델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5분 도시는 보행과 자전거 등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사람이 걸어서 약 15분인 1km가 이루는 공간 범위가 기본적인 시민 삶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도시 기초생활시설의 근거리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거리 단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15분 도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적 공약이다. 부산 전체를 60여 개 생활권으로 나눠 의료, 교육, 문화, 여가 등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부산발전포럼 9, 10월호는 부산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15분 도시를 주제로 다뤘다. 특집은 '15분 도시 정책과 부산', '건강한 살터를 일구는 15분 도시', '15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현'의 4개 소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15분 도시 정책과 부산'에서는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만들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아젠다에 함께 참여하며 시민 살터 등 시민을 중심에 두는 정책이라고 15분 도시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 15분 도시 부산의 기본 지향으로 접근성·연대성·생태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행, 건강·돌봄, 일자리, 주거, 공동체, 교육·문화, 에코라이프, 제3의공간, 그린을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실천 목표로는 걷기 중심의 삶, 가까이 일하고, 즐겁게 배우며, 편안하게 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살터 만들기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한 살터를 일구는 15분 도시'에서는 지난해 14개 정도에 불과했던 15분 도시 채택 세계 도시가 지금은 더 많아졌다고 세계 동향을 알려준다. 이어 15분 도시 추진 도시의 증가는 코로나 사태처럼 사람 간에 접촉할 수 없는 사회생활의 위기가 찾아 왔을 때도 개인 삶을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세계의 15분 도시 추진 도시 중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와 중국 광저우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두 도시는 15분 도시 개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파리는 '모두의 파리'라는 큰 방향 속에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도시를 가로지를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15분 생활권 구축, 가까운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 중심의 상향식 접근이 뚜렷하다. 팡저우 시는 신체 단련 시설, 문화교류 시설 등 기반 서비스 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15분 커뮤니티 라이프 서클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파리와 달리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하향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자인 분야는 15분 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15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디자인 접목'에서는 디자인 주도의 15분 도시 정책이 다양한 15분 도시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15분 도시정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지자는 15분 도시 정책모델과 구조가 디자인 되면 사회서비스 분야별 세부실행과 필요한 역량 강화 모델을 디자인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실행단계에서 디자인분야의 역할을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그리고 과정으로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모델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5분 도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화권 보장과 문화서비스 거리 단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에서는 15분 도시의 실천 전략으로 문화환경이 시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부산지역 문화환경의 불균형을 개선해 생활권 근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산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은 생활권과 가까운 제3의 장소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며 정서적 감응을 경험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며, 부산이라는 도시와 내가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특집

15분 도시 부산

15분 도시 정책과 부산 / 한영숙	10
건강한 삶을 일구는 15분 도시 / 박상필	18
15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디자인 접목 / 강필현	28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 / 원향미	40

1 15분 도시 정책과 부산¹⁾

‘부산 15분 도시’ 기본적 지향 접근성·연대성·생태성에 중점

·한영숙 씨아트플래닝 대표
uahahn@naver.com



· 동네에서 실천하는 그린스마트 도시정책

부산시는 2021년 민선 7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걸어서 다양한 살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편하여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만들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아젠다에 함께 참여하며 지역을 바꾸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터에서의 활동 방식(activity lifestyle)에 바탕을 둔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특히 탄소중립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구를 위한 시민의 공동과제(UN-SDGs)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활성화하고 전 지구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²⁾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제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도시공간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우리는 공공시설이 부족할까?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관리체계의 경직성은 아닐까?

1) 본 원고는 부산시 15분 도시기본구상 보고서와 건축과 시위 2022 통권 제35호에 실린 본문의 글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2) UN-SDGs의 기본 골격, <http://ncsd.go.kr/unsdgs>

지금은 공간을 짓던 시대에서 우리 주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 그동안 컴퓨터 사용과 휴대폰 사용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은 역행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되었다. 산업은 물론 도시건축과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된다.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자. 플랫폼 정보사회에서 생활의 중심은 스마트폰과 네카(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험은 반복 학습을 통해 우리의 생각까지 바꾸어 놓았다. 공간적으로 ‘멀리 있지만 함께 일하는 세상’이 되어 내가 있는 주변을 둘러보는 데 메타공간을 활용하고, 이동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백신예약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의 스마트플랫폼과 혁신은 이제 기술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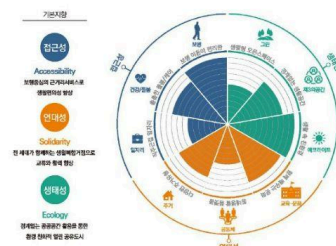
하지만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다. 여전히 몸을 중심으로 감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간을 지각하는 주체로 성장한다. 건강을 위해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 산책하고, 공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당근마켓을 통해 물품교환을 하는 시대다. 동네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에서 연대를 확보했을 때, 우리는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동네는 돌아다닐 만한가? 우리의 동네는 스마트폰처럼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곳이 많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건축물과 감응을 주지 못하는 경계가 많다.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건축도 인구변화, 기후변화,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활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제디자인과 활력 프로그램 등을 중히 여기는 공간조성 방식의 혁신적 진화가 필요한 때이다.

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동네다.

· 15분 도시의 기본지향

걸을 수 있는 거리의 동네와 이웃에서 출발한 부산시 15분 도시의 기본 지향은 접근성·연대성·생태성에 두고 보행, 건강·돌봄, 일자리, 주거, 공동체, 문화, 에코라이프, 제3의 공간, 그들을 9개의 관리지표를 설정했다. 또 거리중심의 삶, 가까이 일하고, 즐겁게 배우며, 편안하게 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살터 만들기를 실천 목표로 두었다. 돌봄, 의료, 공원, 문화 등 16개 지표로 접근성 지표를 분석했을 때 약 90%의 인구가 도보 15분 내 생활서비스 시설 접근이 가능했다. 그동안 다양한 생활SOC 등을 추진한 결과로 본다. 문제는 운영프로그램과 공간의 질 등 질적 활용과 접근하는 과정의 불편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접근 과정이다. 현재는 구축된 데이터가 없지만,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참여율, 만족도, 접근경로를 관리해서 접근성 지표를 접근 활용 지표로 관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공데이터가 더욱 정교해진다면 개인맞춤형 도시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 부산시 15분 도시 기본지향 및 관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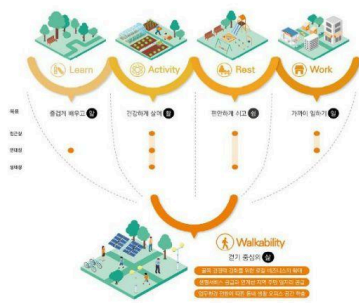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에게 시간은 과거-현재-미래로 흐르는 연속이며 공간은 물리적 실체였지만,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졌다. 5G·DT·AI가 만든 세상에서 시간은 순간이고 공간은 초공간이다. 우리는 현실과 메타현실 사이에서 순간의 삶이 중요해진 일일일생(一日一生)을 살아가고 있다. 일상적인 삶과 교류가 일어나는 초공간의 경험인 현실의 공간을 변화(역디지탈화)시키고 있다. 협력이 풍요로운 삶의 수단이자 도구로 등장하고 있고, 그 변화의 욕구를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역디지탈화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현실의 공간 기능을 바꾸고, 디지털도구를 통해 공간을 접속하는 방법, 함께 연대하는 방법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전환의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다. 세계의 정수마을을 조사해보면 많이 걷고, 이웃을 만나고, 노닥거리며, 서로 돕는 문화가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동네를 걸어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을 만든다.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협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개인이 살터의 시간을 어떤 것으로 채우는지가 무척 중요하다. 생존을 위한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집합적 행동실천이 요구되고 있

· 왜 시간으로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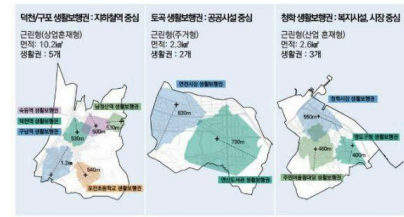
최근 공간의 혁신적 진화를 위해 도시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파리에서 시작한 ‘15분 도시’다. 동네에서 15분 안에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일하고, 살고, 배우고, 교류하는 살터로 바꾸어 나가자 하는 정책이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왜 우리는 시간으로 공간을 이야기 하는가?’였다. 한국사회에서 워라벨(work life balance)로 확보된 생활(life)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 일하는(Work) 시간이 줄면서 생전 생활의 시간은 여전히 소비활동(쇼핑·콘서트 등)으로 쓰이면서 다시 개인의 일(Work)로 변질되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라이프가 정착했고, 교육·행정·금융·시장 그리고 사회적 교류까지 빅테크가 동네살이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동네를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고 개인의 외로움은 쌓여가고 있다.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일터와 아파트(우리집)만 남았다. 그렇다고 불편한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림2 - '건강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15분 도시 목표체계>



부산은 경사지고 길고 좁은 선형 시가지의 도시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동생활권 하나만 보더라도 장산역세권, 청사포마을, 달맞이고개, 해운대신시가지가 혼재되어 소생활권의 특징만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생활권 안에 생활보행권'으로 세분화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비스 시설의 공급수준과 경사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15분 동안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보행이동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생활보행권을 설정하고, 생활보행권과 공동체 특성, 인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산시 전역에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곳, 제3의 공간이 다양한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프로슈머를 넘어 퍼블릭슈머시대에 맞춘 제3의 공간을 발굴하고, 기부채납/공개공지를 시민과 공유하는 공간공유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는 새로운 동네를 만들기 위한 답란의 장으로 바꾸고, 모든 공공건물은 저녁과 주말에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그림3 - 15분 도시의 공간적 실천단위인 생활보행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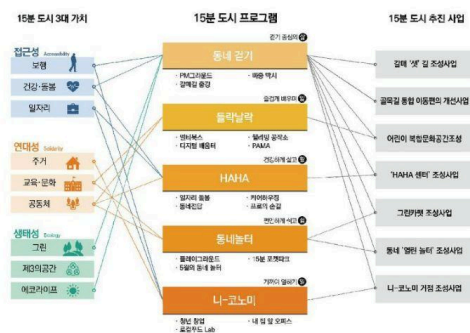


15분 도시의 주요프로그램

보행생활권별 특성에 따라서 15분 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계획 수립 과정에서 15분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메개프로그램 7개를 제시하였다. 특히 갈매 '셋'길 사업은 바닷길, 숲길, 강길, 도심길 등 부산의 아름다운 갈매길 1,000리와 소생활권에서의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한 보행 중심의 생활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Haha 센터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들기의 약자(Health Aging, Happy Aging)로서 고령자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교류 활성화 사업이다. 하하센터는 부산시의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살던 곳에서 나이들어가기, 건강한 노화, 행복한 노화 등 고령인구들의 삶의 질 제고 및 노인 건강 돌봄체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열린 놀터'의 경우 제3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의 단순 공급 중심 공공공간 조성에서 벗어나 저활용 되고 있는 민간 소유의 공개공지를 여가, 취미, 공익 등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 공유공간으로 전환해 부산시민을 위한 사회적 공간이자 매개체로서 실질적인 공공공간의 이용자인 시민이 다양한 참여의 형태로 주도해 나가기 위한 시민 중심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공공서비스가 시민 눈높이에 맞춘 거점, 연계망, 자원의 배분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형의 모델이 아닌, 아예비행태의 리종 확산형 모델로 추진되는 모형이다. 특히, 들락날락(어린이복합시설)과 하하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예산 집행, 운영, 인적네트워크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패키지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추진하고, 가급적 공공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4 - 15분 도시의 주요 메개프로그램>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 시작

이럴 때는 실천이 중요하다. 만들어가면서 수정하고, 해보면서 바꾸어 나가며 축적의 시간을 쌓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맹목적인 경험치 쌓기가 아닌 실천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공간 관리와 계획을 위해서도 스마트한 공공플랫폼이 요구된다. 당근마켓처럼 사람들이 물품거래를 통해 연결되듯이, 서로 플랫폼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리적 치유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연대와 참여기업을 고민해야 하며,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벤치마킹하여 협치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건축과 공간, 그리고 시민의 시간 자산을 좀 더 나은 공유재로 바꿔 활용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작이 필요하고, 시민 기획자와 조정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에게 시스템을 정비할 새로운 기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구축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를 시각화된 형태로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간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도시가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도시로 진화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똑똑한 생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간은 살고, 삶은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미하엘 엔데, 『모모』에서)

<한영숙>

도시를 잊지 않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 건축사로 건축공학, 디자인학,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2006년 씨이트 플레닝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경관계획, 도시설계, 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감성모험마을 보전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산시 가로구역별 높이계획, 복합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용역, 인천계양지구 입체적 도시건축계획 등을 수행했다.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의지를 작품시킴이 한다고 믿으며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② → 건강한 삶을 일구는 15분 도시¹⁾

15분 도시의 실체가 잘 이루어진다면 시민 삶 안녕에 중요한 지원장치 될 것

· 박상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sphil@b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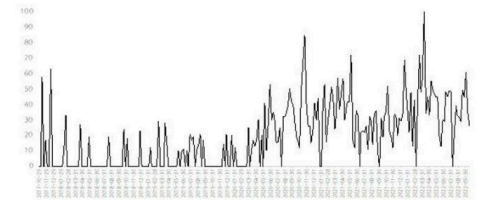


1. 15분 도시의 뜻과 가리키는 대상 : 1km 근접 생활 세계

언제부터였는가? 곳곳에서 '15분 도시' 말고도 '1분 도시', '20분 도시', '45분 도시'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소위 'n분 도시'라고 불리는 이 짧다면 짧은 시간 단위의 도시 개념은 시간도시주의(Chrono-urbanism)라고 불리는 시공간적 질서의 바탕 위에서 있다. 이 시간도시주의의 생각을 드러낸 대표 예가 바로 '15분 도시(15-minute City)'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대안적 도시 모델로 '15분 도시'를 세계의 각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채택하면서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중이다. 2021년 7월에 조사했을 때, 14개 정도에 불과했던 그 채택 도시 수가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아졌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추세, 세계 시민들의 공간적 민

주주의 요구 강화,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실용적인 테크네(Techné)²⁾ 회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 흐름에 따른 '15분 도시'의 관심도 변화 양상(2022.10.24)>



주 1: 이 그래프는 구글 검색 트렌드 검색 창에서 '15-minute City'를 입력한 결과임. 그래프를 보면 2020년 3월 이후 '15분 도시'가 유행하기 시작해 2022년 4월 10일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15분 도시'는 코로나 사태의 발발 및 진행과 관계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주 2: 이 그래프는 수치는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가늠한 것으로 가늠 높은 지역 대비 검색 관심도를 나타낸, 같은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어의 경우 100, 검색 빈도가 그 절반 정도인 검색어의 경우 50, 해당 검색어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나타냄. (<https://trends.google.co.kr/>)

무엇보다도 '15분 도시'가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사람 간 접촉할 수 없는 사회생활의 위기가 찾아 왔을 때에도 개인 삶을 건강하게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에 몸을 멀리 움직이지 않아도 건강하고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시공간적 질서 속에 개인 및 사회의 생활 세계를 재검열(Retrofitting)하는 것이 관건이다. 비유컨대 '15분 도시'는 건강한 한 생명체를 이루는 무수히 많은 작은 세포처럼 건강한 도시를 이루는 건강한 마을들이 잘 이어진 도시를 뜻한다. 사람이 걸어서 약 15분인 1km가 이루는 공간 범위가 기본적인 삶의 영역이 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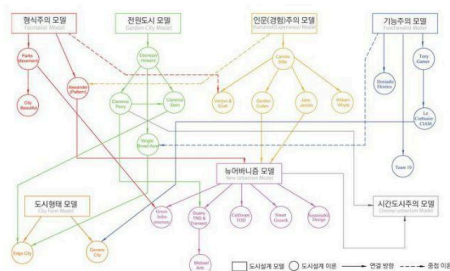
→ 1) 이 글은 부산연구원서 2022년에 수행한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 구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박상필(2022)의 '15분 도시와 공공보건의료의 상보적 의미' 내용에서 사례를 보태어 썼다.

→ 2)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이다. 이는 고대 로마시대를 거쳐 예술을 뜻하는 '아트(art)'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로 그 뜻과 지시 대상이 나뉘었다. 보다 넓게 보면 고대 시구에서는 손수 지식이 이루는 전체 인식을 뜻하는 '에피스테메(Episteme)'와 이의 실천을 뜻하는 '테크네(Techné)'를 서로 혼용해 생각했다(<https://plato.stanford.edu/entries/episteme-techné>). 최근에 들어서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 움직임에 이 고대의 '테크네'가 종종 언급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The greatest of follies is to sacrifice health for any other kind of happiness). 아서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The Wisdom of Life: Being The First Part Of Arthur Schopenhauer's Aphorismen Zur Lebensweisheit*, (2010.10: first ed. 1897))

'15분 도시'라는 말이 낯설지만 실제 그 공간 범위를 찾아보면 완전히 낯설지는 않다. 친숙한 부분이 있다. 비록 그 크기와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공통분모가 있다. 서양에서는 네이버후드(Neighborhood) 이론을 비롯하여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어반 빌리지(Urban Village)',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등의 이름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을, 동네와 같은 개념이 예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고대 부족사회에서 사람이 모여 사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더욱 뚜렷하다. 아마도 이는 시대가 변해도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인간성 척도 덕분이다. 시대에 따라 도시 문제가 바뀌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조선 후기의 동래읍성 지역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도시주의 이론과 서구권에서 발달한 여러 도시설계 이론의 관계>



주: Suhah Aryal(2008:55)의 도시설계이론의 상호연관성에서 시간도시주의 모델을 추가해 정리

2. 15분 도시 접근의 공통점 : 시민 삶의 지속적인 안녕(Wellbeing)

오래된 미제인가? 시민 삶의 안녕(Wellbeing)에 대한 기본 생각은 어디나 비슷하다. 다만 처한 시대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에 '15분 도시'에 대한 여러 참조 사례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서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파리 시와 광저우 시의 공통점을 정리했다. 프랑스 파리 시는 '15분 도시'를 강하게 추진 중이다. 시민 사회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접근(Bottom-up Process)이 강하게 나타난다. 파리 시에서는 '모두의 파리(Paris en Commun)'의 큰 방향 속에서 걸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15분 안에 도시를 가로지를 수 있는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를 목표로 삼아 다양한 시책을 접목하고 있다. 15분 생활권 구축, 가까운 서비스 강화, 시민의 창구(Kiosque Citoyen)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2020년에 제선에 성공한 사회당 소속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재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15분 도시' 만들기를 도시 비전의 핵심으로 삼았다. 식료품점, 공원, 카페, 스포츠 시설, 건강 센터, 학교, 심지어 직장도 있는 프랑스 수도의 각 구역 내에서 보행 또는 자전거로 가까운 거리에서 자급자족하는 커뮤니티를 장려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집 근처에서 제공하고자 했다. 현재 파리는 이것이 공해와 스트레스를 줄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합된 지역을 만들어 거주자와 방문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광저우 시는 '15분 커뮤니티 라이프 서클 프로그램(15-Minute CLC: Community Life Circle Program)'을 추진 중이다. 파리 시와 달리 중앙 정부가 강력하게 하향식(Top-down Process)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5년에 중국 중앙경제 업무회의(The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 매년 경제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결회의)에서는 15분 커뮤니티 라이프서클(CLC)의 개념을 처음 제안했다. 이 개념은 중국에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도시에서 빠르게 추진되었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도시계획 패러다임과는 다른 것이었다. 15분 CLC는 하향식, 합리적, 자원 할당적 사고가 아닌 거주자 요구를 핵심으로 고려한 개념이다(Dailin Zhou, 2019). 현재 중국에서는 광저우를 비롯하여 상해, 류저우, 바오딩 등에서 15분 CLC 계획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저우의 15분 CLC는 도시계획국에서 수행한 여러 계획 연구에 따라 2016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관련 프로그램 내용은 공공 시설

및 공간 개선, 주민들의 출퇴근 및 근로 패턴 개선 등이다. 공공시설 개선은 도보 15분 이내 거리에 5개 유형의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저우에서는 현재 산유리, 지안쉬, 우이, 유안후아 등의 지역에서 CLC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있다. 생활권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9+X' 생활권 시설 구성 표준을 작성 및 적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건강 관련 지원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의 건강 커뮤니티 표준은 점차 이루어져 왔는데, 15분 CLC에 대한 기본 서비스 시설의 구축은 지역 사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요구 사항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도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15분 CLC에서 신체단련(Fitness) 관련 시설(예: 커뮤니티 피트니스 공간) 및 문화 교류 시설(예: 커뮤니티 전시관, 커뮤니티 극장 등)과 같은 기반 시설 서비스 시설을 지원하는 데 정신적 추구(Spiritual Pursuit)도 포함해 나가고 있다(Haoyuan Wu, Liangxu Wang, Zhonghao Zhang, Jun Gao, 2021).

◀중국의 15분 커뮤니티 라이프 바블(15-minute CLC) 건강 커뮤니티 평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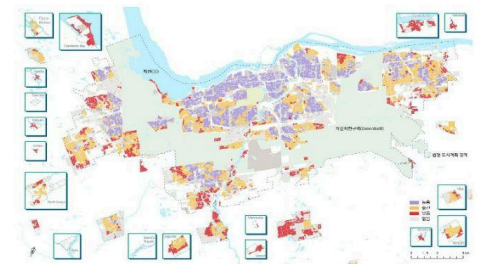
자료 : Haoyuan Wu, Liangxu Wang, Zhonghao Zhang, Jun Gao(2021)

◀'15분 도시' 관련 도시 모델에서 건강관리(Health Care) 서비스 항목 사례▶

도시(국가)	구분	시간도시주의 이름	설명	비고
광저우 (중국)	15분 커뮤니티 라이프 바블 (15-minute CLC)	'9+X' 생활권 시설 표준에서 의료와 노인 요양 포함	-	-
파리 (프랑스)	15분 도시 (15-minute City)	일상 생활의 필요 시설 및 서비스의 일환으로 건강(Health)을 다룸	-	프랑스 첫 사례
헬싱키 (핀란드)	20분 동네 (20-minute Neighborhood)	지역건강(Local Health) 시설 및 서비스 구축 포함	-	호주 첫 사례
보스턴 (미국)	15분 도시 (15-minute City)	커뮤니티 웰빙 플랜(Community Wellbeing Plan)에서 심신 관리	-	-
오타와 (캐나다)	15분 동네 (15-minute Neighborhood)	건강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전략 구시	-	-
포트랜드 (미국)	20분 동네 (20-minute Neighborhood)	'완전한 네이바후드' 구축을 위해 지역 내 건강 시설 및 서비스 구축 포함	-	미국 첫 사례
왕싱치 (영국)	15분 마을 (15-minute Town)	기본 중심지에 밀집한 의료시설과 온·오프라인 연결성 강화	-	영국 첫 사례

주 : 각 국별 첫 사례는 2022년 온라인 조사에 따른 추정치
 자료 : 박상철 외(2022), <https://www.citiesforum.org/news/15-minute-city-등-사례>

◀오타와 시 15분 동네(Neighborhood)의 서비스와 쾌적성 접근성 분석도▶



자료 : <https://engage.ottawa.ca/오타와-시에서-수입한-법정-도시계획-중-북은-북은-접근성이-높은-지역/>

3. 15분 도시가 건강한 삶에 주는 의미 : 모두의 건강한 삶의 조건 실현

이차피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인가? 그래도 별 수 없다.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속적으로 중요하거나 무엇인가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 동안 산업계의 사고방식을 지배했던 도시계획 및 설계 유형과 반대로 '15분 도시'는 신선한 시료품에서 교육, 의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반경 15분 이내, 즉 집 주변에 있는 도시디자인을 상상하고 있다.

과연 세계 곳곳에서 추구하고 있는 '15분 도시'는 그저 실체 없는 도시 브랜드로 전락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머지않은 미래에 '15분 도시'의 실체가 잘 이루어진다면, 시민 삶의 지속적인 안녕에 중요한 지원 장치가 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생각의 바탕은 현대적 공리주의와 맞닿는다. 건강하고 넉넉한 인간 삶의 안녕을 추구하는 후생(厚生, Welfare)의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살펴보자. 현대적 공리주의는 행복을 쾌락과 고통으로 단순화한 고전적 공리주의와 다르다. 현대적 공리주의는 후생을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도록 돕는 무엇'이라고 본다. 후생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듯, 모두의 건강을 다루는 '공공보건의료'와 '15분 도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일맥상통한다. 이런 맥락에서 '15분 도시' 속에 모두의 건강을 고려하는 공공보건의료가 보다 더 의미 있게 작동하게 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타와(캐나다)의 '15분 동네(15-minute Neighborhood)' 모델▶



자료 : [https://engage.ottawa.ca/오타와-시에서-수입한-법정-도시\(가\)계획-중-북은-북은-접근성이-높은-지역/](https://engage.ottawa.ca/오타와-시에서-수입한-법정-도시(가)계획-중-북은-북은-접근성이-높은-지역/)

첫 번째는 건강한 생활 서비스로의 '근접성(近接性, Proximity)'이다. '15분 도시'는 집 가까운 곳에서 기본 생활조건을 갖춘 상태를 뜻한다. 즉, 멀리 이동하지 않기에 생활이 여유롭다. 주로 몸을 직접 이용해 걸어서 움직이므로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개인의 지속건강성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도록 그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는 시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트 방역 대응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 보여 준 공공보건의료의 공적 역할과 기여를 '15분 도시' 만들기에 적용 및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건강 취약계층을 품는 '다양성(多様性, Diversity)'이다. 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 받으며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공생공락(共生共樂, Conviviality)'의 상태를 뜻한다. 미지의 세계를 품은 도시는 우리가 모르는 취약계층이 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예측 범주 밖에서 힘겹게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건강취약계층을 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생활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15분 도시'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취약계층의 생활과 함께 작동한다면, 인권적 감수성을 구체화 하는 '15분 도시' 만들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곳에서 건강한 생활 서비스를 누리는 '편재성(遍在性, Ubiquity)'이다. 이는 모두가 어느 곳에 있거나 살더라도 기본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편재성을 도시 전체에서 이루려면 앞맛은 인구 밀도를 고려해야 하며, 의료 취약지역에는 원격공공보건의료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도 제기된다. 요컨대 '15분 도시'는 인간 삶과 관계있는 다양한 것들이 집 가까운 곳에 고르게 있어야 한다는 생

각종지인 바, 첨단 IT 원격의료기술의 활용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도시에서 좋은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큰 병원 혹은 고급 의료 서비스 시설을 애써 찾아야 했다. 이에 도시 외곽에 살고 있거나 도시계획 및 도시 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우리는 '15분 도시'의 모델이 의료 서비스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산시키려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분산된 의료 서비스 체계가 '15분 도시'를 중심으로 실현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보다 더 쉽고 친근하게 이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보다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비록 의료 서비스의 고른 분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해결 과제를 풀어야 하지만, 15분 근린 생활권 단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다른 공공 생활 서비스와 함께 의료 서비스를 넉넉하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고문헌>

- 박상필, 보다 더 좋은 근린생활세계 형성을 위한 시민 협치 구축방안, 제2회 협치의 날 심포지엄 발표자료, 2022.10.14.
- 박상필, 15분 도시와 공공보건의료의 상보적 의미,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산 건강 인사이트 V21, 2022.09.
- 박상필 외,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산 생활권 재구축 방안, 부산연구원, 2022.
- 박상필, 시간도시주의(Chronotourism), 판올림과 내다봄, 부산연구원, 부산발전포럼 V194, 2022.03+04.
- 박상필 외,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 구상, 부산연구원, 2022.
- 박상필, 낯선 공간 느낌, 부딪고, 2021.
- Arthur Schopenhauer, The Wisdom of Life : Being The First Part Of Arthur Schopenhauer's Aphorismen Zur Lebensweisheit, (2010.10 : first ed. 1897).
- East Anglia's Connected Waterfront, Town Centre (2021).
- Haoyuan Wu, Liangxu Wang, Zhonghao Zhang, Jun Gao, Analysis and Optimization of 15-minute Community Life Circle based on Supply and Demand Matching : A Case Study of Shanghai, PLoS One(2021).
- Ipswich Central-Suffolk County Council-University of Suffolk, Ipswich Vision : Zaher Alham, Carlos Mereno, Didier Chaboud, Proximity-Based Planning and the 15-minute City : A Sustainable Model for the City of the Future, Publisher : Springer Nature, In book :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Sustainability (2021 : 1-20).
- Sulabh Aryal, Evolution of Urban Design in Practice : Case studies of Chicago, Detroit and Cleveland through Time,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VCU Scholars Compass (2008).
- <https://commonedge.org/the-surprising-stickiness-of-the-15-minute-city> (2022.10.17).
- <https://www.re-thinkingthefuture.com/city-and-architecture/a5181-what-is-a-15-minute-city> (2022.10.18).
- <https://engage.ottawa.ca> (2022, 10.21).
- <https://www.greshamsmith.com/blog/15-minute-city-healthcare>(2022, 10.23).
- <https://www.travelvision.jp/news/detail/photo-news-101414> (2022.10.24).
- <https://trends.google.co.kr>(2022.10.24).
- <https://piato.stanford.edu/entries/episteme-technique> (2022.10.25).

③ 15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디자인 접목

15분 도시 정책은 전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디자인도시 시스템 되어야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joseph99@dcdb.or.kr



15분 도시 부산의 실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이 글을 읽을 것으로 생각한다. 15분 도시 부산 정책에서 디자인 분야는 정책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인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공동의 유익을 위한 역할과 역량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분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디자인, 사회구성원 행복 추구에 없으면 안 되는 역할

과거 디자인은 심미적 아름다움이나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형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의 역할과 대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특히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는 사회구성원과 사회체계, 시스템 등이 디자인 분야가 다루게 되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디자인 분야의 역할과 주체는 가치를 제공하는 공급자 즉 기업이나 정부 등에서 점점 바뀌어 디자인을 소비하는 소비자, 주민, 시민, 국민이 되었다. 이렇게 디자인분야가 변해온 원인

은 인간에게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간과 사회를 관찰하고 요구를 발견하는 역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덴마크, 영국, 독일 등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될수록 디자인 분야는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가 인류를 위해 진화하는 모든 노력과 과정에서 사회운영체계 즉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집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행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례(영국)>

[이동] Move Me 주관 : Design Council • 대중교통접근성 개선 • 이동서비스Toolkit 디자인	[일자리] Make it work 주관 : Livework • 런던랜드(영국)시 일자리 매칭서비스모형 디자인	[건강] Health Connect 주관 : Engine • 커뮤니티 의료, 건강 지원 서비스모형 디자인	[에너지] Low Carb Lane 주관 : Livework • CO2에너지 감축서비스 및 보상모형 디자인

디자인, 15분 도시정책을 성공적으로 준비·실행하는 조건

과거 디자인분야는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 활용되어 외관이나 사용성, 심미성 등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세기말부터 유럽의 선진 국가와 사회에서 디자인 분야는 정책이나 사업을 만드는 단계부터 사회구성원과 고객의 요구를 수요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5분 도시 정책에서 디자인의 중요한 역할은 부산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진보시키는 시스템모델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이해 그리고 참여에 필요한 역량과 자원들이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디자인 분야는 15분 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조건이 된다.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 즉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정책 중 많은 부분이 시민의 참여나 요구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특정 공급 집단과 지역사회운영체계 공무원들 및 일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사회의 지속 가능한 진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사

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누리는 상호 의존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은 불확실해진다. 특히 선별된 특정 지역에 대한 사회시설과 서비스 기반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제공된다면 일시적인 전이행정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편향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전문가 집단이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었다면, 그 정책을 실행하는 사회운영체계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진행하고, 집단별로 체계적인 정책실행을 사회구성원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정책으로 보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없고 정책집행 운영체계가 하나의 지원단위의 사업으로 공모하고 수요 집단이 스스로 제안한 내용을 평가하여 선정된 집단에게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당초 기획한 정책목표와 그 성과에 대한 연계성과 성과 창출에 대하여 매우 불확실하게 되며, 일시적 사업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생긴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 또한 이러한 과정과 상황에 대하여 고민하며 추진되어야 한다.

파리 15분 도시, 여가 즐기고 소통하는 공간 조성 전략

15분 도시 정책을 살펴보면 전문가인 파리 1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기획했고, 2020년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제안한 주체가 어떤 과정에서 15분 도시정책 추진의 방법론이 만들어지고, 그 도시의 사회구성원이 어떤 체제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에서 제공하는 지식서비스 c40knowledgehub.org 에서는 파리의 15분 도시 전략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가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하나의 시작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컨설팅 그룹 델로이트에서 2021년 발표한 보고서 'Urban Future With a Purpose'에는 15분 도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시민의 지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하며 "Place Management Organization"이라는 거버넌스 구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15분 도시 파리를 추진하는 세부내용 중에서도 '더 많은 상호가치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민 권한'(De nouveaux pouvoirs citoyens pour plus d'entraide)을 위한 '시민의 창구(des kiosques citoyens)'를 마련하고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요를

발견하고, 필요한 교육과 협의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5분 도시 파리의 정책을 사회의 구성원이 요구하는 명목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고민에 대하여 어떤 철학적 사변이나 엘리트집단의 고도화된 정교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재 파리는 도시의 정주환경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아이디어와 논리로 15분 도시정책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사회구성원이 주도하며 진보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 사회, 국가들은 단기간의 특정 효과보다 사회구성원이 지속 가능하게 참여하는 시스템과 다양한 요구들을 상호 의존하는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 강화에 장시간 투자하고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서 유럽 국가들은 Social Design 산업에 투자를 하여 사회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소통시스템과 사회증진에 요구되는 가치를 실증하고 도입하고 있다. 유럽지역 국가의 디자인산업은 산업과 사회적 가치창출 모델을 디자인하고 있다. 핀란드는 2013년부터 총리실이 주관하여 '정부를 위한 디자인(the Design for Government)' 모델을 연구하며 2025년까지 세계 사회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란드의 정부를 위한 디자인을 통한 정책수립의 핵심목표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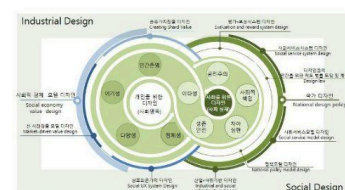
회구성원인 사람 중심과 행동 기반의 정책서비스모델을 디자인하는 방법론을 정립하여 디자인을 핀란드 사회행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영국은 2004년부터 디자인 주도의 사회, 경제문제 혁신을 위한 RE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RED 프로젝트는 주거, 이동, 안전, 건강, 교육, 에너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문제해결과 혁신모델 디자인을 실증하며 세계사회가 따라하는 혁신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갖는 시민행복을 위한 디자인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디자인(Social Design)의 최종 목표는 사회혁신 가치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된다.

한국의 경우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가 국민 참여 디자인 정책을 도입하여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와 국민, 공무원, 전문가가 디자인팀이 되어 사회문제를 발견하거나,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사회구성원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사회구성원이 상호 이해하고 의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모델을 디자인하는 시스템이다. '국민디자인단' 정책 또한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이해 그리고 참여과정을 체계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참여디자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2014년에는 10개미만의 과제를 운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범성과와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참여방법인 매뉴얼 개발을 선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2017년에는 240여개의 우리나라 지방·기초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며,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정책개발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포함되었다. 즉 '국민디자인단'은 하나의 제도가 된 것이다. 2022년 현재에도 '국민정책디자인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모델을 디자인하고 있다. 특히 '국민디자인단' 모델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 디자인 모델로서 세계 최초로 독일 이디자인어워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여, 세계 각국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 수단으로 참고하는 사례가 되었다.



'국민디자인단' 모델과 같이 15분 도시 파리의 '더 많은 상호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민 권한'(De nouveaux pouvoirs citoyens pour plus d'entraide)을 위한 '시민의 창구(des kiosques citoyens)' 마련은 파리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명목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인간과 사회를 위한 디자인 분야의 역할을 사회학 이론에서 설명하는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재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설명하는 사회의 유형은 자본민주주의사회와 자본사회주의사회를 중심으로 이해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사회명목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디자인 분야는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다양성 그리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로부터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이상에 대하여 디자인 분야는 다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상호 의존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유형의 집단과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고 기존 사회구조를 바꾸기도 한다. 우리가 속해 있거나 선택한 사회에 개인이 누려야 하는 가치를 요구하거나 양보 또는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회가 존립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명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관련된 사례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마추소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자료 : Research on social design structure and ecosystem creation, 강민원 2020

◆ 인천시가 추진 중인 '마주소 정책'

2016년 인천시는 과거 산업단지 일대의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우리나라 공통의 사회문제와 대면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선 제강하게 되는 문제는 빈 집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범지대로 바뀌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빈 집이 우범(虞犯)환경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문제해결 과제로 고민하는 것이었다. 보통 빈 집의 외관을 벽화 등으로 다시 정비하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잠금장치와 보안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정주환경에 어울리고 범죄유발 방지를 준비하도록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으로 해당 지역 사회구성원 삶의 맥락을 관찰조사했을 때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다. 해당 지역은 어르신과 맞벌이 부부가 주요 사회구성원으로 많이 존재하며 해당 사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어르신은 원주민으로 젊은 시절에는 해당 지역에서 업(業)을 영위하며 가정을 일구었고 자녀들은 대부분 성장하여 해당 지역을 떠난 상태였다. 다음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가 있는 것은 신혼초기에 경제행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지에 생활터전을 준비하기 힘든 여건을 극복하고자 해당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구성원 각각의 행편에 따라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여 상호 의존하는 사회가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증진하고 디자인한 결과, '마을주택관리소'라는 상호존 사회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우범(虞犯)환경이 되는 빈 집을 젊은 맞벌이 부부가 출근할 때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거점으로 바꾸고, 지역에 남아 있는 어르신들은 그 곳에서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함께 식사와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모델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이 사회의 역할에 대한 명목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가 된다. 이러한 성과는 결국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발전하여 인천시에서 '마을주택관리소'라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하나의 정책브랜드로서 '마주소'사업이 관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급되었다. 여기서 사회구성원이 제공한 상호 의존하는 명목적 가치를, 이를 경험하지 못한 다른 집단에 사회운영시스템의 공급자 입장에서 보급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사회실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사회의 명목적 가치를 디자인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필연 조건이고, 이러한 요구와 성과들이 모여, 사회운영체계가 관여하고 공급을 주도하는 사회의 실체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15분 도시 실현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사회구성의 생존의 욕구로 시작해서 안전, 자아실현, 성공 등의 욕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모델을 시민들과 함께 디자인하고 실행하며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과 참여 없이 특정 영역의 편향된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결코 부산 사회 진보에 지속 가능한 역할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현실과 괴리된 편향적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향후에 또 다른 사회문제로 변형될 수 있게 된다.

디자인 분야는 도시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회나 집단에서 지금 이야기한 인간과 사회구성원의 편향적 가치 추구를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분야이다. 아마도 앞에 사례로 설명한 '국민디자인단'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가 3번 바뀌면서 계속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때 디자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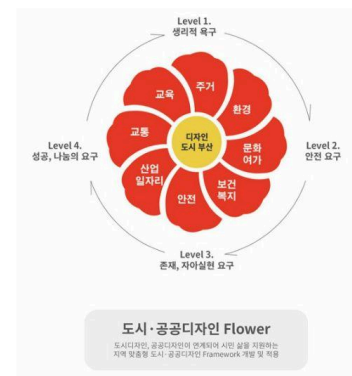
15분 도시 정책은 사회실체론 시각에서는 부산사회를 위한 사회운영체계가 제안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디자인 주도의 15분 도시 정책으로 연계한다면 사회구성원이 15분 도시를 요구하는 명목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며, 사회운영체계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15분 도시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15분 도시정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다.



◆ 15분 도시 정책,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15분 도시 정책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유형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유형별 시민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집단(동·읍·면 등)과 마을에 맞는 구체적인 서비스모델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사회기반과 거버넌스 시스템 수준에서의 15분 도시 서비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에너지제공, 치안, 재난안전 등에 대한 영역은 시민과 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방문객, 종사자, 관련 산업 참여기관, 기업 등)들이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검증하는 구조를 먼저 디자인하고 실증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사회기반과 시스템의 기본적 지식과 참여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부산 사회구성원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부산공공서비스디자인 구조를 개발하였다. 부산사회가 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모델을 디자인하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본구조가 되며, 향후 15분 도시정책을 포괄할 수 있고,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실행방향과 그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산 시민이 누려야 하는 사회서비스와 경제활동에 대한 디자인분야의 기본적인 역할과 주요 유형들을 공공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공유가치 창출, 지역산업 가치 창출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정의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16개 구·군 맞춤형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을 준비할 때 기반이 되며, 완성해 나가야 하는 기본 지도가 된다. 7월부터 부산시 16개 구·군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 자본민주주의사회 시스템의 장점이 단점은 사회운영체제는 지속 가능하게 존재하고, 이를 운영하는 책임자는 사회구성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 반영할 수 있고 새로운 도는 지속 가능한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단점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은 사회운영체계 책임자가 바뀌면서 그 동안 사회구성원들이 소모하며 발전시켜온 정책들이 증진되지 않거나 중단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요인은 담당 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도 항상 존재한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부산시 16개 구·군의 기초단체장이 6월에 발표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전과 정책공약사항들을 분석하며,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과 부산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위한 불균형 실태분석 지표개발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부산시 16개 구·군의 공공디자인 기회와 위험요소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8월까지 부산

디자인진흥원은 부산시 16개 구·군의 기초단체장과 논의하기 시작하며 구민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추진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남구의 경우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공공디자인조례 등을 준비하며 구민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추진체계를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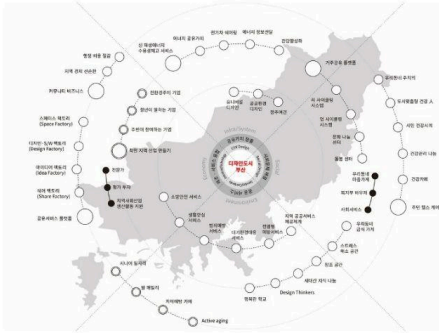


◆ 15분 도시 부산 정책은 지속 가능성 담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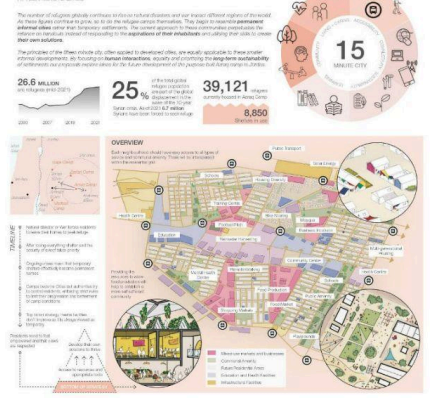
15분 도시 정책모델과 구조가 디자인되면, 사회서비스 분야별 세부실행과 필요한 역량강화 모델을 디자인하고 실행해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디자인분야의 역할을 도시디자인(Urban design)과 공공디자인(Public design) 그리고 과정으로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모델 디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올해 초 연구자료와 통계 등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부산시의 공공기반, 서비스 분야의 주요 약점과 디자인연구 과정을 정의하였다.

부산시 공공기반,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정을 기반으로 16개 구군에 맞는 15분 도시 부산 정책을 시민과 함께 진행하면, 새로운 요구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 시민을 위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증진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5분 도시 부산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2022년 the Charette에서 15분 도시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우승 결과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난민을 위한 도시' 공공 공간과 그들을 위한 서비스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구성원 즉 시민과 주민의 개념을 다소 차이가 있다. 주민은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단어이다. the Charette에서 15분 도시 디자인 공모전 당선사례를 통해 15분 도시 정책은 지속 가능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을 포용하며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5분 도시 부산 정책은 당면한 시급성의 문제를 해결하며, 부산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디자인도시 부산 시스템과 제도가 되어야 한다.

<부산의 디자인 대상 정의(정주환경, 공공서비스, 공공기반, 경제 단위 등)>



INFORMAL REFUGEE CITIES



자료 : <https://thecharette.org/15-minute-city-2022-results/>

4 →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유기적 연결·협력 필수

· 원형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hnmwon@bscf.or.kr



●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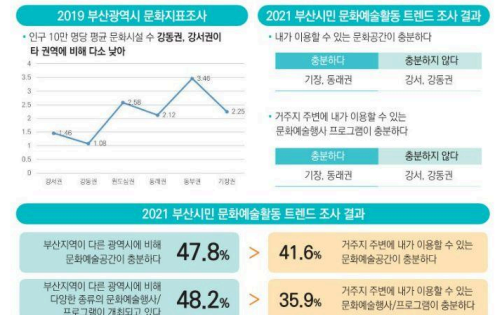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 주창자인 파리1대학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15분 도시의 주요 개념으로 '시간도시주의(chrono-urbanism)', '다목적 장소(chronotopia)', '장소에 (Topophilia)'를 언급한다. 15분 도시는 단순히 삶의 여러 기능들을 15분 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을 초월한다. 발중앙화이자 지역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수단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인 도시의 생명을 연장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전환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15분 도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평등, 연대, 근접성을 추구한다. 특히 도시라는 장소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정서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문화적 교류와 감응이 15분 도시에서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울 초 부산문화재단에서는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을 구상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부산문화재단 15분 도시 실천 전략을 소개하면서 도시의 문화환경이 시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 부산형 15분 도시의 문화적 전략을 위한 문제의식

15분 도시를 구현하기에 앞서 부산의 문화환경은 어떠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으로서 기초 단위 공간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기초 생활권 단위의 인프라들이 우리의 삶에 문화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실제로 부산지역 생활권 기반 문화 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2021년 조사된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문화환경 평가에서는 부산시 전체 문화환경보다 거주지 주변 문화환경 평가 점수가 낮았다. 부산지역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해서는 48% 내외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거주지 주변의 문화환경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 미만에 머문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의 동서 권역간 문화시설 분포의 불균형은 시민들의 문화환경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2020년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에서 부산지역의 인구 10만 명 당 평균 문화시설(공공 및 민간) 수를 조사한 결과 강동권과 강서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선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에서 거주지 주변의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충분성을 질문한 결과, 강서·강동권 거주자들의 응답이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결과

부산지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예술공간이 충분하다	47.8%	>	41.6%	가정주 주변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충분하다
부산지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문화예술행사/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다	48.2%	>	35.9%	가정주 주변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프로그램이 충분하다

부산형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전략(안)

이러한 부산지역 문화환경의 불균형을 개선하여 생활권 근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산형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전략의 핵심일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앞선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15분으로 연결되는 문화적 전환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하에 총 3개의 목표와 9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초 단위 문화예술활동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여 소위 하이퍼로컬 단위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초단위 공간들의 문화예술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예술활동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표인 '탄소중립 문화예술활동환경 구축'에서는 탄소중립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ESG경영을 강화하면서 도시술과 같은 하이퍼로컬 단위의 생태보행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포용 기반 문화로돌봄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세대별, 소외계층 대상 예술치유허용과 공동체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초 단위의 문화생태계 종사 주체들의 연대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기초단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기초단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아이피로컬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동네공간인 문화예술가능성 강화	기초단위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역문화예술정보 스마트 확산	우리동네 유니크베뉴 어린이책방문화공간 콘텐츠 공동 개발 서부산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조성
탄소중립 문화예술활동 환경 구축	탄소중립 문화예술활동 및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문화예술정보 전달 강화 아이피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연계 확산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부산문화재단 ESG경영 강화	신분문화재단 ESG경영 선언 부울경 기후정의 실천 네트워크 운영
	생태보행환경 활용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관기 좋은 예술길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연대와 포용 기반 문화로돌봄 구조 구축	문화로돌봄 구조 마련	맞춤형 예술교육 및 예술로 치유 활성화
	공동체 예술 활성화 기반 마련	반도돌이 문화공간 활성화
	문화생태계 연대 기반 조성	커뮤니티 아트 활성화 양성 이웃집 예술가 POOL 조성 민간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환경 구축

목표 1 - 기초단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먼저 기초단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목표 추진을 위해서 기초단위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 생활문화센터, 기초문화재단, 기초지자체 등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주체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공동 홍보, 프로그램 고도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생활권 기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네 공간의 문화예술기능을 강화하는 '우리동네 유니크베뉴(unique venue)' 캠페인을 제안하였는데, 지역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면서 장소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는 사업이다. 또한 부산지역 문화공간의 동시 권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부산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조성 전략도 제안하였다.

생활권 단위 문화프로그램은 시민의 삶과 근접하지만 정보 전달이 쉽지 않다. 기초 단위 문화예술활동 정보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체, 주변 인물 등 홍보 루트를 개발해서 정보 전달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하이퍼로컬 콘텐츠크리에이터 양성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오며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 버그는 제1의 장소인 가정, 제2의 장소인 일터나 학교 외에 목적 없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제3의 장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3의 장소란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 밖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격식 없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사람들은 가정과 학교가 아닌 다른 교류의 장에서 '비공식적인 공공생활'을 함으로써 사회적·능동적 활동을 통해 경험의 질이 높아짐을 지적한다. 제3의 장소의 기능으로는 일상 시간 중 일 여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알 수 있는 것, 구성원들에게 동화되거나 새로운 도모를 할 수 있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위 흥반장과 같은 공적 인물을 만나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즉 제3의 장소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숨들이는 시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만날 수 있다.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은 결국 생활권 가까이 제3의 장소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정서적 감응을 경험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며, 부산이라는 도시와 내가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정책은 과거 예술 지원 중심 기능에서 확장하여 지역문제의 문화적 해결, 예술의 사회적 역할 실천 등으로 도시영역과의 결합의 면을 넓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은 부산시민에 대한 문화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장, 사회적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만드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이 필수적인 선행과제이다. 향후 다양한 장에서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2020.
- 부산문화재단,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2021.
- 부산문화재단, 상반기 통합리포트 「15분으로 연결되는 문화적 전환도시 부산의 실천 전략」, 2022.

목표 2 - 탄소중립 문화예술활동 환경 구축

15분 도시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문화예술활동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유기체인 도시의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분 도시 문화적 실천 전략에도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문화예술계 탄소중립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비치코밍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활동 확산을 제안하였다. 재단 자체적으로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부울경지역의 기후정의 예술 실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생활권 생태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술과 같은 생활권 기반 생태보행환경을 활용한 '걷기 좋은 예술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022 비치코밍 투게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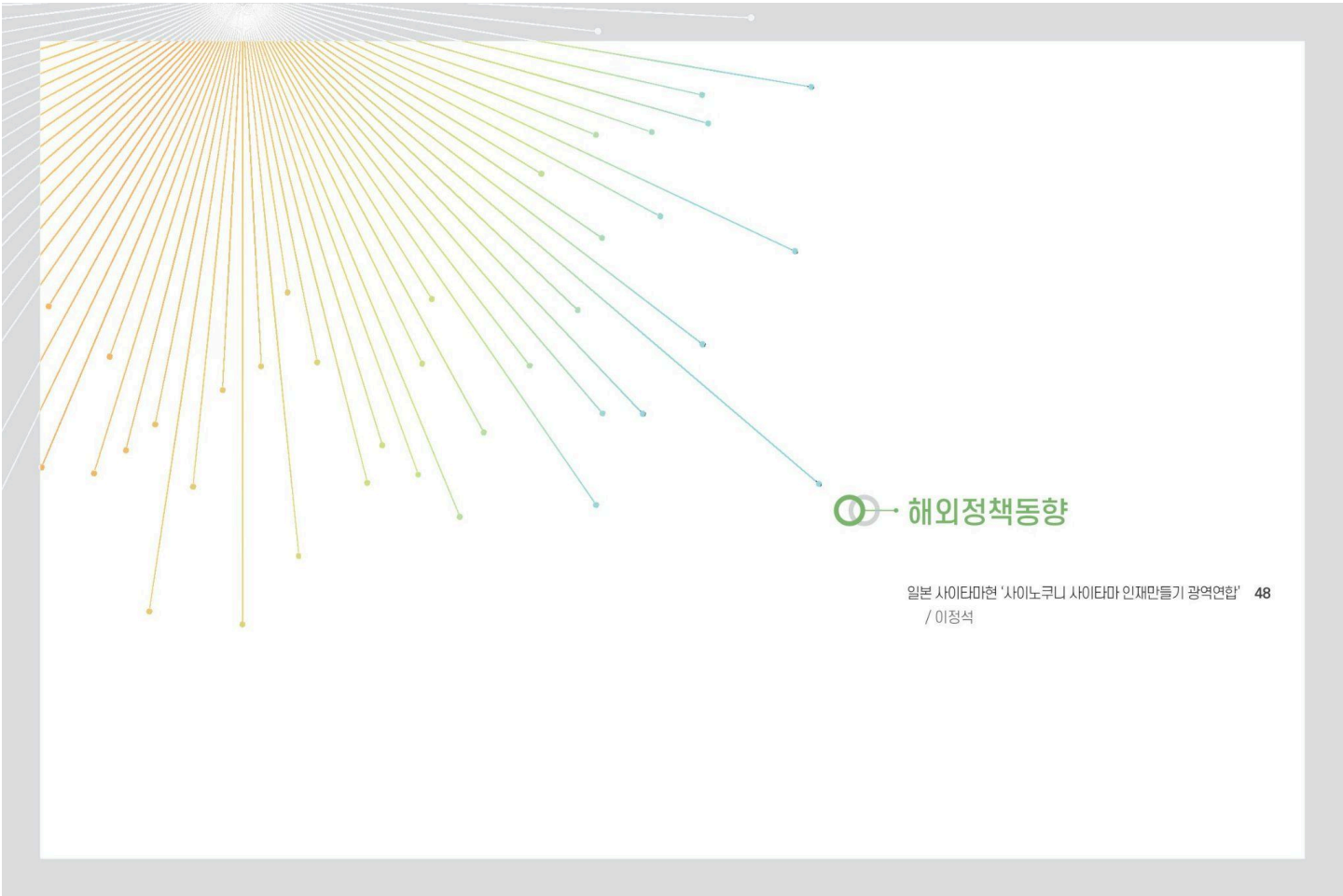
자료 : 부산문화재단 페이스북

<2022 생활문화홀어 프렌즈>



목표 3 - 연대와 포용 기반 문화로돌봄 구조 구축

마지막 목표인 연대와 포용 기반 문화로돌봄 구조 구축은 15분 도시 문화환경에서 소외되는 계층, 세대가 없도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세대, 계층뿐 아니라 감성노동 등으로 소진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소외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술가 레지던시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술가와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사업인 반도돌이 창작공간도 부산 전역으로 확장하여 지역 예술가들과 시민을 이어주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생활권 문화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자로서 커뮤니티 활동가를 양성하고, 책방, 소공연장, 공방 등 생활권 단위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연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해외정책동향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 인재만들기 광역연합 48
/ 이정석

BDi 해외정책동향 |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 인재만들기 광역연합

BUSAN DEVELOPMENT FORUM

1

일본 '사이타마' 인재만들기 광역연합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많은 시사점

이정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jslee@bdi.re.kr



<그림1 - '사이타마' 광역연합' 사무소의 위치 및 64개 구성 자치단(현 포함)>



자료: 맵·잇(http://map-it.azurewebsites.net/Map)에서 '埼玉県'을 검색

동 협의회는 1996년 1월에 「사이타마현 시정촌 직원 연수 센터(가칭) 기본 구상(초안)」을 책정했다. 이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1998년 3월에 책정위원회(현, 시장회장, 정촌회장, 전문가 등)에서 '자치인재개발교류센터(가칭) 비전'이 정리되어 현내 지자체 직원의 인재개발 종합거점 개설이 제안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사이타마' 인재육성·인재확보 지원체제 등 연구회(현, 시정촌)를 설치해 인재개발·교류·확보에 대한 사업내용과 대응체제에 대해 검토했다. 이때 광역연합이 적당하다는 방향성이 처음 나왔다. 동년 6월에는 자치인재개발교류센터(가칭) 개설 준비 협의회(현 부지사, 시장회장, 정촌회장 등)에서 센터의 운영 형태를 광역연합으로 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그 후 같은 해 9월에는 실무회의에 해당하는 시장촌 인사담당 과장회의에서 광역연합의 규약, 사업계획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 이때 광역연합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대부분 합의되어 있었다.

한편, 사이타마현과 현 내 모든 시정촌이 광역연합 참여를 최종 결정할 때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어땠을까? 주목할 만한 점은 현 내 시정촌으로부터의 특기할 만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 I. '사이타마' 인재만들기 광역연합'의 개요

1. 설치 경위¹⁾

도쿄도(東京都)의 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기타구(北區)에 독특한 광역연합이 설치돼 있다. 바로 '사이타마' 인재만들기 광역연합(彩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이하 '사이타마' 광역연합)이라 함)으로, 그 설치 경위는 19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시정촌 직원의 광역연수기관 설치 구상에 대해 시장회, 정촌회 및 사이타마현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출발 계기이다. 1992년에는 시장회 및 정촌회의 총회에서 이 구상이 승낙되었다. 이에 1993년 시장회의장 및 정촌회의장 연명으로 지사에게 시정촌 직원 연수기관 설치에 관한 요청서가 제출되었다. 그 후 시정촌 직원 연수의 향후 기본방향에 대해 협의하여 연수시설의 구체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이타마현 시정촌 직원 연수 검토 협의회」 및 그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 1) 埼玉県(1998)을 참고해 작성.

이러하여 2009년 3월에 현 및 현 내 전 70개(현재 63개) 시정촌 의회에서 광역연합 설치에 관한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5월 14일에 마침내 자치대신(현 총무대신)의 설립 허가가 났다. 그 결과 7월 1일부터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사이타마시에 위치한 자치인재개발센터(自治人材開発センター)(구 사이타마현의 연수시설) 내에 있다.

2. 설치 목적·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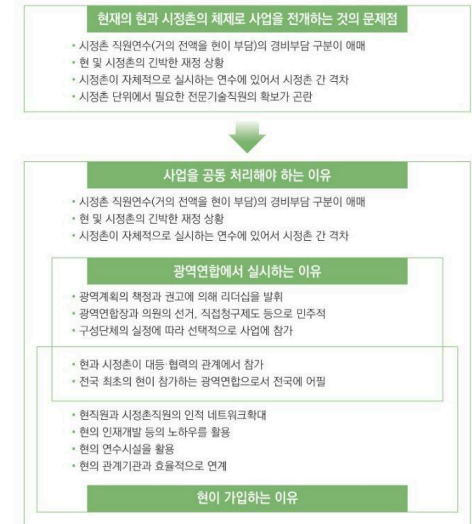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공공단체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의 정비는 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사이타마현 내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직원연수와 관련하여 실시 시간수의 부족, 재정적 이유로 인한 단독 운영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어 왔고, 시정촌 단독의 모집활동으로 필요한 전문기술직원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埼玉県, 1998).

사이타마현과 현 내 모든 시정촌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연수 외에 시정촌 간 직원 교류, 민간기업 직원 파견, 전문기술직원 등의 인재 확보 등 지방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정비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러한 광역연계 구상에서 떠오른 수법이 바로 광역연합제도이다. 그 이유로는 제도가 가지는 매력 내지 장점과 사이타마현의 역할에 대한 시정촌의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은 지방분권 시대의 인재 정비에 현과 시정촌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한편,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설치 이유를 4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림 2>이다. 우선, 현재의 현과 시정촌의 체제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음은 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지적한다. 그리고 몇 개의 광역 제휴 방법(공동처리 제도) 중에서 왜 광역연합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광역연합 설치 시 사이타마현 가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에 대한 기대감이나 '현이 참가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홍보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장점으로는 '교류 확대'와 '직원 연수체계 보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이타마시의 경우 사이타마시만의 부담금 지출 문제, 직원 파견 요구, 인재육성과의 사무 증가 등에 관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림 2 - '사이노쿠니 사이타마 인재만들기 광역연합'의 설치 이유>



자료 : 埼玉県(1998)

3. 사무²⁾

지자체 직원의 「인재만들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과 시정촌이 공동으로 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은 직원의 연수를 비롯한 인재개발, 인재교류, 인재확보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전개 중이다.

우선 소개할 것은 인재개발 사업이다. 현 직원 연수 및 시정촌 직원 광역연수를 비롯해 정책연구의 실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연수사업이다. 2021년도 인재개발체제는 현 직원 연수(계층별 기본연수·계층별 선택연수·강사양성연수·특별연수), 시정촌 직원 광역연수(현 직원 연수와 동일하게 4대 구분), 공동연수(계층별 선택연수·특별연수)로 크게 나뉜다. 이들 직원연수를 통해 대응력 육성, 과제 해결 능력 향상, 전체 체력 향상, 새로운 연수 방법 실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연합은 이러한 인재개발체제의 유지와 인재개발사업의 실시방향을 갖추도록 각 시정촌의 인재육성 방침에 대한 대응, 강의 형식의 획일적인 내용의 커리큘럼 탈피, 공동연수를 통한 시정촌 직원의 시야 확대, 인적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진척 등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 정책연구의 실시 및 지원이다. 기업·NPO·대학 등 다양한 주체와 협동하여 구체적인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 실천적인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구성단체나 직원이 실시하는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의 존재 의의는 이것을 통해 확실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연구 추진사업」에서는 산민관학·정책과제 공동연구와 그 성과를 선보이는 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실시하고 있다. 덧붙여 「정책연구 지원사업」에서는 정책연구의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연구 만사 상담소의 운영, 정책 정보지 「Think-ing」의 발행(연 1회), SNS 등을 통한 정보발신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재교류 사업이다. 민간기업으로의 직원 파견을 비롯해 전문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정보교류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정촌 직원의 의식개혁 및 시야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민간기업으로의 직원 파견은 시정촌과 민간기업 사이에서 광역연합이 조정을 도모하여 현재에 있는 민간기업에 파견을 의뢰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처음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시정촌이라도

전체 시정촌이 참가하는 광역연합에는 지금까지 축적한 실적이 있으므로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이야기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 연수 후 연수 효과 정착, 연수생 간의 교류·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한 후속조치도 실시 중이다.

마지막으로 인재 확보 사업이다. 시정촌 직원 채용 합동 설명회, 시정촌 직원 채용 정보의 공동 발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 채용정보 일괄의 발행이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각 시정촌의 채용계획 등을 적시에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설명회에 나가는 '배달강좌'에서, 시정촌 직원의 업무 매력을 홍보하고 있다. 이벤트로써 각 시정촌이 공동 출전하는 「시정촌 직원 채용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면 설명회 개최는 중지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정촌 채용 담당자가 직접 질문에 답하는 온라인 상담회를 실시했다. 온라인 상담회는 시정촌, 공무원 지원자로부터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대면 실시와 함께 실시했다고 한다.

4. 조직³⁾

'사이노쿠니 광역연합' 조직은 크게 광역연합의회, 광역연합장, 행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 '사이노쿠니 사이타마 인재만들기 광역연합'의 조직도>



자료 : 「彩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事務局(이하)와 광역연합의 「規約(規約)」, 「規約(規約)」을 참고해 작성

2) 彩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2019), 市町村アカデミー(2021)과 「規約(規約)」을 참고해 작성.

3) 彩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2019), 광역연합의 「規約(規約)」, 「規約(規約)」을 참고해 작성.

우선 광역연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연합 의회 의원은 현의회와 시정촌의회에서의 선거로 선출된다. 그 구성은 현의회 의원 2명, 시장 5명, 정촌장 5명, 시의회 의원 2명, 정의회 의원 2명으로 되어 있다. 현재 각 시정촌의 단체장이 광역연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는 구조는 다른 광역연합의회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점이다.

또한, 사이타마현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광역연합의회 의원이 되고자 하는 각 구성 단체의 장(지사 제외) 및 의원(이하 '의원 후보자'라 함)은 전술한 각 구분에 따라 사이타마현 시장회, 사이타마현 정촌장회, 사이타마현 시의회회장의 추천 또는 구성 단체의 장 총수의 일정 수(장의 경우 1/8, 의원의 경우 1/2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규약 제8조 제3항). 광역연합의회의 임기는 구성 단체의 장 또는 의원으로서의 임기에 의하되 광역연합의회의 구성 단체의 장 또는 의원이 아닌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규약 제9조 제1·2조). 광역연합의회는 광역연합의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1명을 선거하되, 그 임기는 광역연합의원으로서의 임기에 따른다.

다음으로 광역연합장은 의회와 행정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체 집행기관을 관장한다. 광역연합장은 구성 단체의 장이 투표에 의하여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후보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때문에, 규약상으로는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는 구조다. 선거는 사무소 또는 광역연합장이 따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성 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취임할 사례는 없으며, 구성 단체의 장이 출마하여 구성 단체의 장인 현 지사 및 전 시정촌장에 의한 투표(우편투표)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부광역연합장은 광역연합장이 광역연합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또한 광역연합장 및 부광역연합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구성 단체의 장이 취임한 경우에는 그 구성 단체의 장으로서의 임기가 된다. 집행 기관에는 회계관리자 및 그 밖의 직원을 두되 광역연합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광역연합의 사무를 총괄경리하고,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광역연합 직원들은 현 및 시정촌 파견직원으로 구성하므로 전임직원은 현 명도 없다.

마지막으로,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에는 선거관리위원회(4명, 임기 4년), 감사위원(2명, 임기 4년) 등 2개의 행정위원회가 존재한다(규약 제15~17조). 광역위원회(3명, 임기 4년)는 사이타마현 인사위원회에 사무위탁 방식으로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광역연합장과 광역연합의회 의원의 특성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광역연합장과 광역연합의회원의 특성>

구분	광역연합장	광역연합의회의원
1. 정수	- 1명	16명(규약 제8조) ① 사이타마현 의회의원 중 2인 ② 40명의 시장 중 5인 ③ 23명의 정촌장 중 5인 ④ 시의회의원 중 2인 ⑤ 정촌의회의원 중 2인
2. 피선거권자(후보자)	- 자격요건 없음 - 추천도 필요 없음 - 폐임없이 사이타마현시장회의 회장이 광역연합장으로서 당선되는 구조(공직)	(위 정수의 해당번호에 맞춰 설명) ① 사이타마현 의회의원 ② ①~⑤은 각 구성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 ③ 40명의 시장의 1/8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④ 23명의 정촌장의 1/8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⑤ 40개 시의 의회의원 정수(965명)의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⑥ 23개 정촌의 의회의원 정수(303명)의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선거권자	- 구성 단체의 장(사이타마현 지사, 현내 전 40개 시장 23개 정촌장, 총 64인) * 광역연합의회 의원은 선거권 없음	-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 ①의 경우 사이타마현 의회의원 - ②와 ④의 경우 40개 시의 의회의원 - ③과 ⑤의 경우 23개 정촌의 의회의원 * 구성 단체의 장은 선거권 없음
4. 선거방법	- 구성 단체의 장에 의한 투표(광역연합의 사무소에서 선거, 이적이 곤란한 경우, 광역연합장이 별도로 규정 가능) * 우편투표도 가능	- 구성 단체 의회에서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각 선거 실시 - 사이타마현 의회에서는 1명 추천하는 방법도 가능 (현행 동의 없음)
5. 당선자의 확정	- 창립투표	- 각 정수에 기초하여 특정정수가 많은 자를 순차적으로 결정
6. 임기	- 4년(규약 제13조) (단, 구성 단체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직을 겸하고 있는 자는 해당 임기)	- 구성 단체의 장 또는 의원의 임기
7. 보수	-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상근의 직을 겸하고 있는 자: 미지급 - 겸비정상은 있음	- 의회의원 15,000엔/1월 - 의회의원 10,000엔/1월 - 겸비정상은 있음

주 1: 광역연합의회는 광역연합 의회의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1명을 각각 선출
주 2: 부광역연합장은 광역연합장이 광역연합 의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

6. 광역계획⁴⁾

여기에서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제5차 광역계획을 중심으로 그 개요를 고찰하기로 한다.

1) 계획의 취지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이 제5차 광역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한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291조의7에 따라 광역계획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4차 광역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을 맞아 지자체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행정수요가 고도화·복합화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구성 단체가 요구하는 시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효율적이고 유효성 높게 실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향후 '인제만들기'에 대해 광역연합 및 구성 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광역연합에서 실시하는 직원의 인재개발, 인재 교류 및 인재확보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2) 기간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다.

3) 기본 이념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은 각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가운데, 3가지의 인재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넓은 시야와 유연한 발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재만들기이다. 둘째, 시대의 조류를 파악하여 미래를 개척하고 성과를 내는 인재만들기이다. 셋째, 다양한 주제와 적극적으로 관계하면서 지역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인재만들기이다.

4) 광역연합과 구성 단체의 기본 역할

사이타마현과 현재 모든 시정촌이 인재만들기를 공동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고 해도, 현이 지금까지 해 온 연수를 전부 중지한 것은 아니고, 시정촌에서도 사정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광역연합과 구성 단체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광역연합 및 구성 단체는 다음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본이념으로 제시하는 '인제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광역연합은 구성 단체와 밀접한 연락조정을 도모하면서 인재개발, 인재교류 및 인재확보에 관한 광역적인 대응을 실시하는 동시에 구성 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인재개발을 지원한다. 구성 단체는 각각의 인재육성 기본방침에 따라 각종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광역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원의 인재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5) 사업 실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각

광역연합의 '인제만들기'는 구성 단체의 요구를 중시한 효율적인 시책의 전개. 광역적인 대응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실시, 다양한 주제(주민·NPO·민간기업·대학 등)와의 교류 기회의 충실화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6) 각 사업의 실시 방침

첫째, 직원의 인재개발과 관련된 실시 방침은 2가지로, 기본이념으로 제시하는 '인제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과 직원의 정책형성 능력 향상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직원의 인재교류와 관련하여 직원의 의식 개혁과 시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정촌 간 직원교류를 비롯하여 민간기업 등에 직원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직원의 인재 확보와 관련하여 시정촌을 대상으로 기본이념에서 제시하는 '인제만들기'에 적합한 인재 확보를 위해 직원 모집에 관한 합동설명회 개최 및 공무원의 일이나 매력에 대한 소개를 실시하는 등 우수한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7) 광역계획 추진 시 유의사항

광역계획으로 자리매김한 '인제만들기'의 추진을 위해 우선 사업 실시시 필요한 정보수집, 조사연구 실시 및 각 사업으로의 반영을 도모한다. 또한, 구성 단체와의 충분한 연락조정을 도모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구성 단체가 요구하는 시책을 전개하여 효율적이고 유효성이 높은 사업을 실시해 나가기 위해 광역연합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를 실시한다.

4) 影の国はいたまんづくり広域連合(2019)를 참고해 정리.

7. 제원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제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단체의 부담금과 기 타로 되어 있다(규약 제18조 제1항). 덧붙여 부담금의 금액은 광역연합의 예산에 있 어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담 비율은 <표 2>와 같다(규약 제18조의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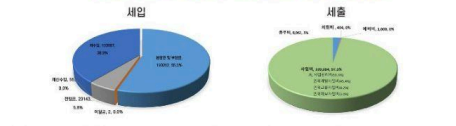
<표 2 - '사이노쿠니 사이타마 인재만들이 광역연합' 구성단체의 부담금 부담 비율>

구분		부담 비율	
의회비 및 총무비		현	1/2
		시정촌	1/2의 각각의 군동할
사업비	인재개발사업	현	10분의 10
	현 직원 연수	현	연수 참가 인원 수에 의한 실적할
	시정촌 직원 연수	시정촌	
	인재교류사업 및 인재확보사업	시정촌	각각 군동할

자료: 「影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 규약 제18조 제2항 관계의 발표

그러나 광역연합 관계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초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일절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재단법인 사이타마현 시정촌진흥협회'라는 단체가 조성사업을 통해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시정촌 부담분을 지출해 오고 있 었기 때문이다. 즉, 규약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의 수입 중 구성단체가 부담 해야 할 금액에 충당해야 할 별도의 수입(=전술한 협회의 복권 조성금)이 있었기 때 문에, 시정촌의 부담금의 금액은 이 금액에서 전부 공제되게 된 것이다(규약 제18조 의 제3항 참조). 이처럼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제원은 상당히 복잡하다. 즉, ①현 부담금, ②시정촌 진흥협회 조성금, ③사이타마시 부담금, ④시정촌 사업 추진 기금 이입금, ⑤정책연구 기금 전입금, ⑥기타 등이 있다(影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 連合, 2019).

<그림 4 -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일반회계예산(세입·세출)>



주: 세입의 '분담금' 및 부담금' 중에서 시정촌분은 '공익재단법인 사이타마현 시정촌진흥협회'의 복권 조성금에 의한 것이다. 시정촌은 전혀 내지 않음.

자료: 「影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 홈페이지(<http://www.hibokuni.or.jp>)를 참조해 작성

<그림 4>를 통해 2021년도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광역연합 경비지원을 위해 각 구성단체가 내는 '분담금 및 부담금'이 가장 많았고(전체의 54.5%), 제수입(잡입·예금이자) 39.8%, 전입금 5.8% 순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97.3%로 예 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사업관리비(51.5%)가 과반을 차 지했고, 인재개발사업비 45.4%, 인력확보사업비 3.0%, 인력교류사업비 0.2% 순으 로 많았다.

8. 특징

첫째,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은 현이 구성단체로 참여하는 광역연합으로는 일본 최 초의 사례로 현과 시정촌이 대등한 입장에서 인재 정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 다. 사이타마현과 현내 시정촌이 인재육성의 거점 만들기를 광역연합 설치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광역연합 사업을 인재개발, 인재교류, 인재확보 등 간접하고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 다. 이것은 '인재만들기' 관련 사무로 사무를 집중함으로써 인재육성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광역연합의 장(집행기관)이 모든 부 서를 관장하는 집중형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효율성 — 의사결정의 신속성, 업무추진 효율성,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등 — 이 증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규약」 이외에 매규집에 정리되어 있는 조례 규 칙·규정이 있는데,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은 사이타마현과 연결이 매우 강한 조직이 므로 대부분 사이타마현의 제 규정을 준용하거나 참고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배달 강화'와 같은 설명의 개회 등을 비롯한 공공부문 채용행사 활동을 지원하는 인재화 보사업을 통해서, 시정촌 직원이 담당하는 일의 매력을 PR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 다. 이러한 활동이 행사에 입접하는 지자체 쪽과 정보를 요구하고 참여하는 분들에 게 평판이 좋아서('사이노쿠니 광역연합' 사무국 관계자) 계속 실시되고 있다. 여섯 째,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에는 전임직원이 한명도 없고 현과 시·정촌의 파견직원이 2 년 정도 근무 후 복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당분간 현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앞 으로 전임 직원 자리를 두느냐의 문제는 사무 범위의 확대 여부, 재원(자체 수입) 확

충 가능성, 업무의 연속성·장래성의 증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를 고려하여 총 합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일곱째, 광역연합의 사무소이면서 연수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자치인재개발센터'는 사이타마현의 남부에 치우쳐 있어서 현의 북부 지역에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었다. 연수 시설의 근접성과 교통편 등을 고 려한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는 측면과 함께, 위성 교육시설의 확보나 원격연수 같은 대책 마련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II. '사이노쿠니 사이타마 인재만들이 광역연합'의 과제

지금까지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도 살펴보았 다. 이후에는 동 광역연합이 안고 있는 과제와 관련해 '사이노쿠니 광역연합' 사무 국 관계자 인터뷰와 문헌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사무국에 근무하는 일정 비율의 전임직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광역연합 사 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의 파견직원으로부터 '사업이 확대되면 전임직원이 필요하 다'는 견해가 있지만 책임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직원 인사에 관 해 현과 시정촌 간에 조속히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노쿠니 광역연 합'은 국가의 사무·권한 이양 등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지방분권개혁에 관한 '제안 모집 방식'의 활용(향후 계획을 포함한다) 실적도 전무하다. '인재만들기' 사무의 특 성상 국가(현)로부터의 권한이양과는 관계가 약할지 모르지만, 이양 사무의 적극적 인 발굴과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제안 모집 방식'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1인 복역'의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광역연합 이 '인재 확보' 활동, 즉 구성단체끼리 공동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게 될 것이므로 라이벌 관계를 벗어나기 는 쉽지 않다. 따라서 광역연합이 처음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직원을 한꺼번에 채용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 여러 지자체를 동시에 담당하 게 하는 '1인 복역'이라는 선진적인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조 직의 장기발전 구성과의 관계에서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은 새로운 광역사무를 발 굴하여 사무의 범위를 확대 조정해 나갈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2040년의 인구

감소·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지방행정의 과제와 연계하여 사무방향을 추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문기술직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인재뱅크'의 설치 운영 구상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보인다. 다섯째, '사이노쿠니 광역연합'과 구성단체가 '스마트 지자체'로의 전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AI-RPA 등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수 시스템을 보다 선진화하고 새로운 '인재만들 기'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이노쿠니 광역연합' 사무국의 후쿠카와 씨 는 '스마트 지자체'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역점을 두 고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섯째, 총무성의 연구회 보고서나 지방제 도조사회에 답신에 대한 성명서 발표, 광역계획의 수정 작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 견을 개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의 인수태세로서의 역할이 기대 되고 있는 광역연합으로서 2040년경을 내다본 지방행정의 과제 혹은 지방행정체제 의 기본방향과 공공사(公共性)의 연계, 스마트 지자체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이 앞서 언급한 지 방행정 과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맨파워(전 임직원) 확충이 선결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III.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주는 시사점

최근의 세계화·지방화·광역화의 영향, 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의 영향 등 에 의해 일본에서는 자치단체간의 제휴·협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생활권·경제 권이 광역화되면서 지자체 간 행정서비스 격차 해결, 광역적 과제 해결의 필요성 등 이 중요해지면서 중소규모 지자체는 물론 정령지정도시와 같은 대도시나 부현도 광 역연계에 주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광역연계 및 지방분권개혁의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됨에 따라 사이타마현의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의 사례를 가지고 광역 거버넌스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에 향후 부현이 광역 거버넌스를 전개함에 있어 광역 연합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전방해 보고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점 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의 대도시권 내지 광역권 거버넌스 측면에서 생각하면 광역권 내에서, 혹은 일정

한 구역 내에서 지자체가 광역연합제도를 채택해 설치 운용해 나가는 것은 방법론에 서나 방향성에서나 바람직한 것이다. 광역통합과 같은 '행정통합형'의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네트워크 구축으로 비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계협력형'을 넘어 관계 자치단체가 합의를 통해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무-기능에 관한 권한을 신설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대폭 이전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제도적 접근법인 '적극적 기능이전형'을 활용하는 정당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李政範, 2017: 205-207). 그런 점에서 광역연합제도의 전망과 향방을 고려해 본다면 미래 전망은 어둡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그 활용가능성,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본에서는 헤이세이(平成) 시정촌합병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그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자체 간 행정통합의 가능성은 희박해져 가고 있다. 정부도 축진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나의 지자체가 행정환경 변화와 복잡다양한 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오히려 주변 지자체와의 광역행정 혹은 광역연계 수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접근방식에 있어 견해차나 속도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어느 지자체든 협력하려는 생각과 의지는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광역연합은 구성과 동시에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자율적인 자치가 가능하며 국가나 부현에 대해 권한이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면 보다 큰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채택·활용과 함께 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부현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 실제 당장 부현이 광역합병의 주체 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도도부현은 시정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여러 시정촌에 걸친 광역적인 사무를 해결해야 하며 시정촌에 관한 연력조정 업무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부현이 그 역할을 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사이노쿠니 광역연합'은 사이타마현 내의 많은 시정촌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제육성(인제개발·정책연구·인제교류·인제확보) 업무의 선도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광역연합제도를 활용했다. 이 광역연합은 당분간 인제만들기에 초점을 맞춰 광역연합과 현 및 시정촌의 역할분담 및 각자의 충실한 집행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광역연합의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광역적 문제해결 방향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광역연합은 그 제도적 한계로 인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일부 제약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광역연합의 운영방향에 대해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광역연합제도를 활용한 광역연계나 부현 등에 의한 광역 거버넌스가 보다 원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유효한 측면이 있다.

첫째, 재정 자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역연합은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구성단체의 분담금으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법인으로서의 자유도를 충분히 살려 나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광역연합이 설립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재정 자주권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사이노쿠니 광역연합' 사례에서 나타난 '복된 조성금'처럼 광역연합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나 보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 다만 이 자금은 특별회계에 별도로 편성에 특정 목적성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단체가 분담하는 재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고향 납세'와 '기립관 고향 납세'를 기부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격(현재는 도도부현, 시구정촌만 해당)에 광역연합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고향 납세의 실현으로 납세자와 광역연합 사이에 서로를 함상시키는 상호 윈윈(Win-Win) 관계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향납세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격차 시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고향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ふさと納税研究会, 2007: 1-3). 이 기부금은 재난대책(인프라 복구, 인력 양성), 코로나19 대책(영양의료), 디지털 지자체 대책(DX, AIRPA 도입) 등에 활용하고, 구성단체나 내는 분담금 등은 공통의 광역과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지역 공통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광역연합의 존재감과 신뢰감 향상에 정부와 광역연합이 모두 나서야 한다. 인건구조 문제 대책, 대규모 재해 대책, 지방분권 인수태세 만들기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연합' 단위의 대책 및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광역연합 설치 유인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현 주도의 광역연합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재해·감염병 대책

등에서 정부와 기존 광역연합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계 이상의 부현이 관여하는 기존 여섯개의 광역연합을 포함하여 광역 실시 체계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광역연합 출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눈에 띄는 증가세는 아니다. 게다가 후기 고행자의료나 개호보험 등 국가 시책 도입에 따라 설립된 것을 제외하면, 부현이 참여하고 있는 광역연합은 적은 편이며, 이 중 부현의 구역을 넘어 부현 간에 설립된 광역연합은 간사이광역연합이 유일하다.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를 지방공공단체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광역연합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성공사례 소개와 함께 광역행정의 책임주체가 되도록 광역연합에 맞춘 이양사무와 시책 발굴에 힘을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연합은 광역권을 기반으로 출현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주민통제를 통한 민주주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 대외적인 기획력과 협상력을 갖추어야 한다. 광역연합은 기관대립형(집행기관·의결기관)으로 조직되며, 그 대표자는 모두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임되며 구성단체의 장을 비롯한 의회 의원이 결집하도록 되어 있다. 또 광역연합은 각 구성단체의 공동실시 사무에만 권한을 갖는다는 제약이 있어 이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도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지역에 있어서의 광역연계와 지방분권 개혁의 책임주체라는 인식 아래 집행기관 및 본부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광역연합의 역할과 주민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주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직접적인 주민참여와 주민통제가 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부-울-경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사무 개시를 목전에 두고 지자체 간 이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최종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면서 일본 광역연합에 유사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지만, 구성 자치단체의 소지역역의 결집들로 작용해 실현을 못 보게 될까 우려하는 사도민이 많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 그렇게 정비되고 바뀌어 가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의 이익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 때문에 양보와 배려를 하지 않는 문화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인 인건구조조치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 시도-시·군·구의 자치계층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물론 수도권 일극집중의 배해를 시정해 나가기 어렵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생활권·경제권이 인접한 지자체끼리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발출하는 데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시정촌합병과 같은 시군 통합 사례가 많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시도 통합 사례는 전무해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광역 거버넌스의 수단으로 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구성단체의 이관사무에 대해 처리 권한을 이전시키는 '적극적 기능이전형'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국가사무의 위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양을 요구해 나가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터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자치모형의 실험이다. 그런 점에서 1996년에 창설되어 117개까지 사례를 만들어 낸 일본의 광역연합에 의한 광역연계, 특히 부현에 의한 광역 거버넌스 전개는 앞으로 한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운용해 나가는 가운데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埼玉県, 1998. 「影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仮称)」設立の趣旨. 設立許可申請書に自治体提出資料(県庁 자료).
- ・影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 2019. 影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第5次広域計画.
- ・市町村アカデミー, 2021. 人こそ自治体の貴重な財産. 埼玉県内の自治体の人づくりを担って22年(研修の現場を行く影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 アカデミア, vol.138.
- ・李政範, 2017. 「大都市圏ガバナンスの類型・再考」. 釜山大都市圏を事例にして / 重森輝・松原誠・桑原武志. 大都市圏ガバナンスの検証: 大阪・アジアにある統治システムと住民生活. 三栄学館.
- ・ふさと納税研究会, 2007. ふ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
- ・影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ホームページ. 令和3年度影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一般会計予算 [http://www.hitozukuni.or.jp/yosan.pdf] (검색일: 2021.11.30.).
- ・総務省ホームページ [https://www.soumu.go.jp/kouiki/pdf/rengo_H20.pdf] (검색일: 2021.11.30.).
- ・影の国さいたまづくり広域連合ホームページ [http://www.hitozukuni.or.jp/] (검색일: 2021.9.30.).

[부산발전포럼제196호](#)

[부산발전포럼제195호](#)

[부산발전포럼제194호](#)

[부산발전포럼제193호](#)

[부산발전포럼제192호](#)

[부산발전포럼제191호](#)

[부산발전포럼제190호](#)

[부산발전포럼제189호](#)

[부산발전포럼제188호](#)

BDI경제동향브리프

BDI경제동향브리프제28호

BDI

경제동향브리프

최근 부산지역 소비자물가의 품목별 기여도 분석

- I. 최근 소비자물가 추이
- II. 부산의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분석
- III. 정책적 시사점

부산연구원
홈페이지



※ 이 보고서는 BDI 연구책임자의 견해로 부산광역시의 정책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22년 10월 기준 부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4%로 전국의 5.7%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 ☑ '22년 10월 기준 부산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5.4% 중 상품부문의 기여도는 3.29%p, 서비스부문 기여도는 2.12%p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전국은 5.7%로 상품부문이 3.43%p, 서비스부문이 2.23%p임
- ☑ 최근 물가 급등세의 원인은 공업제품 가격 상승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중 공업제품이 2.06%p, 개인서비스가 1.89%p의 기여도를 나타냄
- ☑ 10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21.1% 증가율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전가가스수도의 기여도는 0.69%p
- ☑ 전국대비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은 품목은 축산물, 수산물,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로 나타났고 이들 품목의 가중치는 전국대비 높은 수준임

최근 소비자물가 시사점

- 최근 물가 급등세는 공업제품 가격 상승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중 공업제품이 2.06%p, 개인서비스가 1.89%p의 기여도를 나타냄

- 전국대비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은 품목은 축산물, 수산물,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로 나타남

부산시 지원 정책 방향

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물가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주요 관광지 및
전통시장 등의 바가
지 요금을 단속하고
착한 가게 등을 선정
해서 지원을 강화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필요

서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품목들
을 선정해 수급 관리
를 강화하고 유통구
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 유도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 등 물가 상방
요인 대비책 마련

우유 가격 인상, 곡물
가 인상으로 라면, 빵
등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부문 물가
동반 상승 가능성

전기, 가스, 수도 등 공
공요금이 원자재 가
격 상승요인을 반영
하여 인상되고 있어
타부문으로의 물가
상승 효과 확산 가능
성 유의

I 최근 소비자물가 추이

1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 2022년 10월 기준 부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4%
 -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7%)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 7월 5.9%로 고점을 기록한 후 상승률이 2달 연속 둔화되었으나 10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확대

〈최근 부산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 ▶ 부산은 품목별로 상품부문은 7.1%, 서비스부문은 4.0% 상승률 기록
 - 전국은 상품과 서비스가 각각 7.3%와 4.2% 상승률을 보이며 부산보다 더 큰 상승세를 나타냄

〈부산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국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2 시도별 소비자물가 현황

- ▶ 17개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부산은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임
 - 대부분의 광역시는 5%대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 강원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단위 지역은 6%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나타냄

〈시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현황(%)〉

	2019	2020	2021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0.4	0.5	2.5	3.6	3.7	4.1	4.8	5.4	6.0	6.3	5.7	5.6	5.7
서울	0.6	0.6	2.1	3.1	3.3	3.5	4.0	4.5	5.1	5.5	5.1	5.0	5.1
부산	0.5	0.2	2.5	3.4	3.3	3.9	4.4	5.0	5.7	5.9	5.5	5.1	5.4
대구	0.7	0.3	2.6	3.7	4.0	4.3	4.9	5.6	6.1	6.5	5.9	5.8	5.8
인천	0.3	0.8	2.6	3.9	3.9	4.4	5.0	5.6	6.2	6.4	5.6	5.5	5.7
광주	0.2	0.4	2.6	3.4	3.5	4.0	4.7	5.5	6.3	6.6	5.8	5.6	5.8
대전	0.2	0.4	2.5	3.5	3.7	4.1	4.5	5.2	5.9	5.9	5.4	5.3	5.5
울산	-0.3	0.3	2.5	3.6	3.5	3.9	4.8	5.3	5.9	6.1	5.5	5.3	5.8
세종	-	-	2.7	3.9	3.8	4.4	5.0	5.8	6.4	6.5	6.1	6.0	6.1
경기	0.4	0.6	2.6	3.7	3.6	4.2	4.8	5.4	5.9	6.2	5.6	5.5	5.5
강원	0.8	0.6	2.8	4.3	4.3	4.9	5.9	6.7	7.3	7.6	6.7	6.5	6.5
충북	0.4	0.5	2.7	3.6	3.9	4.5	5.3	6.0	6.7	7.2	6.6	6.6	6.5
충남	-0.1	0.7	2.8	4.0	4.2	4.8	5.6	6.0	6.9	7.5	6.7	6.6	6.4
전북	0.3	0.5	2.6	3.6	3.6	4.3	5.1	5.8	6.5	6.8	6.0	5.8	6.0
전남	0.3	0.7	2.6	3.8	4.0	4.6	5.5	6.2	7.1	7.3	6.6	6.3	6.1
경북	0.2	0.1	2.7	4.2	4.1	4.9	5.8	6.4	7.2	7.4	6.5	6.3	6.4
경남	0.1	0.6	2.5	3.7	3.8	4.5	5.1	5.6	6.5	6.8	6.0	5.8	5.9
제주	0.3	0.4	2.6	4.6	4.5	5.1	5.5	6.3	7.4	7.4	6.8	6.7	6.5

자료 : 통계청

- ▶ 시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차이는 가중치의 차이로 설명되어짐
 - 최근 광역시보다 도단위 지역의 물가상승률이 더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석유류의 가중치가 광역시보다 도단위 지역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석유류의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석유가격이 똑같이 오르더라도 지역별로 물가에 석유가격이 반영되는 비율(가중치)이 달라 해당 지역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17개 시도의 소비자물가지수 석유류 가중치 현황〉



자료 : 통계청

- ▶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의 품목성질별 가중치 현황을 이용하여 전국과 부산의 품목별 기여도 분석을 통해 각 품목이 물가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

II

부산의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분석

1 부산과 전국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 ▶ 부산의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상품이 461.7이고 서비스가 538.3을 차지
- 전국은 상품이 466.6이고, 서비스가 533.4로 부산이 전국에 비해 서비스의 가중치가 조금 더 높음
 - '22년 10월 기준 부산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4%로 이중 상품부문의 기여도가 3.29%p, 서비스 부문 기여도는 2.12%p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전국은 5.7%로 상품부문이 3.43%p, 서비스부문이 2.23%p의 기여도를 보임
 - 특히 부산과 전국 모두 상품부문에서는 공업제품, 서비스부문에서는 개인서비스가 물가 상승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2022.10월 기준 부산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기여도〉

(단위 : 2020=100,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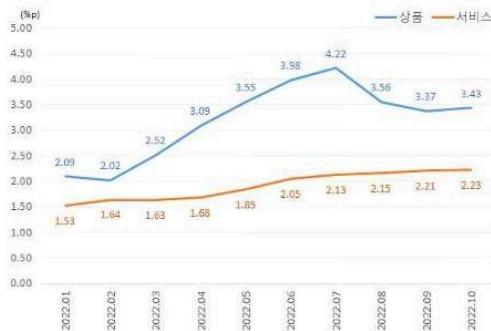
구분	부산				전국				(A-B)
	가중치	2022.10월			가중치	2022.10월			
		지수	증감률	기여도(A)		지수	증감률	기여도(B)	
총 지 수	1000.0	108.81	5.4	5.42	1000.0	109.21	5.7	5.67	-0.25
• 상 품	461.7	111.40	7.1	3.29	466.6	111.98	7.3	3.43	-0.14
(농·축·수산물)	88.3	114.98	5.9	0.55	83.8	114.68	5.2	0.46	0.09
(농산물)	45.9	114.37	6.5	0.31	43.8	113.46	7.3	0.33	-0.02
(축산물)	27.7	119.95	4.0	0.12	27.6	120.16	1.8	0.06	0.06
(수산물)	14.7	107.50	8.1	0.11	12.4	106.83	6.5	0.08	0.03
(공업제품)	339.8	109.46	6.1	2.06	348.4	110.15	6.3	2.20	-0.14
(가공식품)	87.0	112.56	9.1	0.79	86.8	113.18	9.5	0.83	-0.04
(석유류)	33.0	135.00	10.1	0.40	39.4	135.37	10.7	0.50	-0.1
(전기·가스·수도)	33.6	121.68	21.1	0.69	34.4	123.94	23.1	0.77	-0.08
• 서 비 스	538.3	106.58	4.0	2.12	533.4	106.78	4.2	2.23	-0.11
(집 세)	75.0	102.53	1.2	0.09	98.3	103.65	1.7	0.16	-0.07
(공공서비스)	139.8	101.67	1.0	0.14	127.3	101.71	0.8	0.10	0.04
(개인서비스)	323.5	109.64	5.8	1.89	307.8	109.88	6.4	1.97	-0.08

주 : 증감율과 기여도는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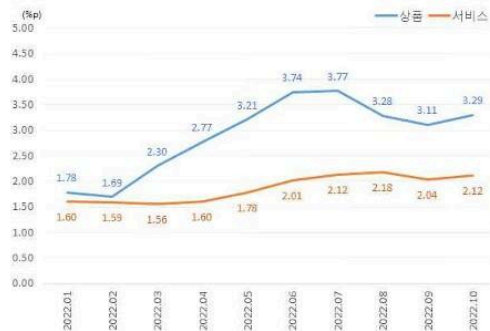
▶ 부산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추이를 보면 상품부문이 서비스부문보다 더 큰 영향을 줌

- 상품부문 기여도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7월에는 4.22%p를 기록하다 2달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었으나 10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어 전체 부산 소비자물가 상승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 반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서비스부문 기여도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부산 물가상승률의 상품과 서비스 기여도 추이〉 〈전국 물가상승률의 상품과 서비스의 기여도 추이〉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참고] 물가지수의 가중치와 기여도 (출처 : 통계청)

- ▶ **(가중치)**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품목별로 각기 가중치를 부여하고 품목별 상승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
 -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대표품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할 때 단순평균하게 되면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마다 서로 다른 점이 반영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쌀가격이 10% 상승했을 때와 전기료가 10% 상승했을 때 가계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각 품목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평균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에 소비지출규모와 비례하는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역별 가중치는 지역의 소비 지출액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데, 도시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품목은 큰 값을 가지며, 적게 지출하는 품목은 작은 값을 갖게 됨
 - 부산은 전국에 비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의 가중치가 더 크고, 그 외 석유류, 전기·가스·수도, 집세 등은 전국 평균이 더 큼

- ▶ **(기여도)** 개별 품목의 변동이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text{기여도} = \frac{(\text{비교시점 품목지수} - \text{기준시점 품목지수})}{\text{기준시점 총지수}} \times \frac{\text{품목 가중치}}{\text{전체 가중치}} \times 100$$

II 상품 부문

- ▶ 태풍 등 기후영향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부문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7%대를 기록
 - 상품부문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이 두드러지고, 공업제품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최근에는 전기가스수도가 큰 폭의 상승세 보이며 10월 기준 부산은 21.1%, 전국은 23.1%의 상승률을 기록

〈부산의 상품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의 상품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1) 농축수산물

- ▶ 한남노, 난마돌 등의 태풍과 잦은 호우로 인한 기상 악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 지속
 - 태풍과 호우 등으로 인해 농산물 공급 차질 발생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축산물 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폭은 크게 줄어드는 모습
 - 갈치, 고등어 등의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수산물 가격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

〈전국의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부산의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 ▶ 10월 기준 부산의 농축수산물 소비지출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55%p로 전국을 0.09%p 상회
 - 10월 부산의 소비지출가 상승률은 전국에 비해 0.3%p 낮지만 농축수산물의 기여도는 전국에 비해 높음
 -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의 기여도는 각각 0.12%p, 0.11%p로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산물은 10월 부산 소비지출가 상승률 5.4% 중 0.31%p 기여하였음

〈농축수산물 가중치 및 기여도〉

		가중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총지출 증감률	1000.0	3.6	3.7	4.1	4.8	5.4	6.0	6.3	5.7	5.6	5.7
	농축수산물	83.8	0.55	0.14	0.04	0.17	0.37	0.42	0.62	0.63	0.57	0.46
	농산물	43.8	0.21	-0.11	-0.18	-0.07	-0.03	0.07	0.38	0.47	0.41	0.33
	축산물	27.6	0.33	0.26	0.22	0.21	0.37	0.32	0.20	0.12	0.10	0.06
	수산물	12.4	0.01	0.00	0.01	0.03	0.03	0.04	0.04	0.04	0.05	0.08
부산	총지출 증감률	1000.0	3.4	3.3	3.9	4.4	5.0	5.7	5.9	5.5	5.1	5.4
	농축수산물	88.3	0.44	0.04	0.11	0.15	0.37	0.49	0.55	0.62	0.56	0.55
		(4.5)	(-0.11)	(-0.10)	(0.07)	(-0.02)	(0.00)	(0.07)	(-0.07)	(-0.01)	(-0.01)	(0.09)
	농산물	45.9	0.20	-0.18	-0.05	-0.07	-0.04	0.12	0.31	0.45	0.40	0.31
		(2.1)	(-0.01)	(-0.07)	(0.13)	(0.00)	(-0.01)	(0.05)	(-0.07)	(-0.02)	(-0.01)	(-0.02)
	축산물	27.7	0.26	0.24	0.18	0.21	0.36	0.32	0.20	0.15	0.09	0.12
		(0.1)	(-0.07)	(-0.02)	(-0.04)	(0.00)	(-0.01)	(0.00)	(0.00)	(0.03)	(-0.01)	(0.06)
	수산물	14.7	-0.02	-0.02	-0.02	0.01	0.05	0.05	0.04	0.02	0.07	0.11
		(2.3)	(-0.03)	(-0.02)	(-0.03)	(-0.02)	(0.02)	(0.01)	(0.00)	(-0.02)	(0.02)	(0.03)

주 : ()는 전국과의 차이(부산-전국)
자료 : 통계청

2) 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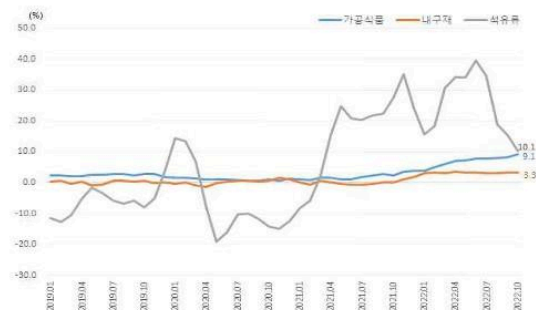
- ▶ 원유 등 석유류 가격 상승과 원자재 및 곡물가 상승으로 공업제품 가격도 상승세 지속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원자재 및 곡물가 상승 등으로 가공식품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류는 최근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로 유가가 하락하며 상승폭이 크게 줄어듦
 -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내구재의 가격상승세도 꾸준히 지속되는 모습

〈전국의 공업제품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부산의 공업제품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 ▶ 10월 기준 부산 공업제품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0월 부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에 비해 0.3%p 낮음에도 공업제품의 기여도는 전국에 비해 0.14%p 더 낮음
 - 10월 공업제품의 부산지역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대한 기여도는 2.06%p이고, 세부적으로 가공식품은 0.79%p, 석유류는 0.40%p, 내구재는 0.25%p임
 - 가공식품보다 석유류의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에도 가중치 차이 때문에 석유류보다 가공식품의 기여도가 더 크게 나타남

〈공업제품 가중치 및 기여도〉

		가중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총지수 증감률	1000.0	3.6	3.7	4.1	4.8	5.4	6.0	6.3	5.7	5.6	5.7
	공업제품	348.4	1.44	1.78	2.38	2.70	2.86	3.24	3.11	2.44	2.32	2.20
	가공식품	86.8	0.36	0.47	0.55	0.62	0.65	0.68	0.70	0.72	0.75	0.83
	내구재	84.9	0.23	0.25	0.24	0.27	0.28	0.27	0.26	0.25	0.26	0.28
	석유류	39.4	0.66	0.79	1.32	1.48	1.50	1.74	1.59	0.90	0.75	0.50
부산	총지수 증감률	1000.0	3.4	3.3	3.9	4.4	5.0	5.7	5.9	5.5	5.1	5.4
	공업제품	339.8	1.26	1.58	2.12	2.41	2.55	2.96	2.79	2.23	2.12	2.06
			(-8.6)	(-0.18)	(-0.20)	(-0.26)	(-0.29)	(-0.31)	(-0.28)	(-0.32)	(-0.21)	(-0.20)
	가공식품	87.0	0.34	0.44	0.52	0.60	0.62	0.66	0.67	0.69	0.71	0.79
			(0.2)	(-0.02)	(-0.03)	(-0.03)	(-0.02)	(-0.03)	(-0.02)	(-0.03)	(-0.03)	(-0.04)
	내구재	76.8	0.22	0.24	0.23	0.26	0.26	0.25	0.24	0.23	0.24	0.25
			(-8.1)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2)	(-0.03)
	석유류	33.0	0.53	0.63	1.10	1.23	1.24	1.46	1.32	0.73	0.59	0.40
			(-6.4)	(-0.13)	(-0.16)	(-0.22)	(-0.25)	(-0.26)	(-0.28)	(-0.27)	(-0.17)	(-0.16)

주 : ()는 전국과의 차이(부산-전국)
자료 : 통계청

3) 전가·가스·수도

- ▶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가·가스·수도는 10월 기준 21.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 물가상승률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크게 높지만 10월 부산 물가상승률 5.4%에 대한 기여도는 0.69%p로 농축수산물 0.55%p보다 높고, 공업제품 2.06%p보다 기여도가 낮음
 - 전가·가스·수도 부문의 전국 기여도와 비교해보면 0.0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가·가스·수도 가중치 및 기여도〉

		가중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총지수 증감률	1000.0	3.6	3.7	4.1	4.8	5.4	6.0	6.3	5.7	5.6	5.7
	전가·가스·수도	34.4	0.10	0.10	0.10	0.23	0.32	0.32	0.49	0.49	0.48	0.77
부산	총지수 증감률	1000.0	3.4	3.3	3.9	4.4	5.0	5.7	5.9	5.5	5.1	5.4
	전가·가스·수도	33.6	0.08	0.08	0.08	0.20	0.28	0.28	0.43	0.43	0.43	0.69
			(-0.8)	(-0.02)	(-0.02)	(-0.02)	(-0.03)	(-0.04)	(-0.04)	(-0.06)	(-0.06)	(-0.08)

주 : ()는 전국과의 차이(부산-전국)
자료 : 통계청

Ⅲ 서비스 부문

- ▶ 10월 서비스 부문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개인서비스가 6.4%로 가장 큰 증가를 보임
 - 서비스부문에서 외식물가 상승에 따른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세의 상승세는 둔화되는 모습이고, 택시료, 항공료 등의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지속되는 모습

〈전국의 서비스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부산의 서비스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 ▶ **〔집세〕** 10월 기준 집세의 부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대한 기여도는 0.09%p로 전국을 0.07%p 하회
 - 집값 하락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
 - 전국은 집세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가 0.16%p로 부산지역에 비해 집세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의 부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14%p로 전국보다 0.04%p 높음
 - 국제항공료, 택시료, 진료비 등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전국 전체 물가상승률 5.7%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기여도는 0.10%p인 반면, 부산 전체 물가상승률 5.4%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기여도는 0.14%p로 부산이 전국에 비해 공공서비스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전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의 10월 부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1.89%p로 전국에 비해 0.08%p 낮은 수준
- 차진, 생선회, 보험서비스료 등 외식 및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개인서비스의 부산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큰 비중을 차지
 - 전국 전체 물가상승률 5.7%에 대한 개인서비스의 기여도는 1.97%p이고, 부산 전체 물가상승률 5.4%에 대한 개인서비스의 기여도는 1.89%p로, 부산이 전국에 비해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전국 5.7%에 대한 1.97%p는 34.6% 비중, 부산 5.4%에 대한 1.89%p는 35.0%의 비중)

〈서비스 가중치 및 기여도〉

		가중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총지수 증감률	1000.0	3.6	3.7	4.1	4.8	5.4	6.0	6.3	5.7	5.6	5.7
	서비스	533.4	1.53	1.64	1.63	1.68	1.85	2.05	2.13	2.15	2.21	2.23
	집세	98.3	0.21	0.20	0.20	0.19	0.19	0.19	0.19	0.18	0.17	0.16
	공공서비스	127.3	0.12	0.12	0.07	0.08	0.08	0.09	0.09	0.10	0.09	0.10
	개인서비스	307.8	1.20	1.32	1.36	1.40	1.57	1.78	1.85	1.88	1.95	1.97
부산	총지수 증감률	1000.0	3.4	3.3	3.9	4.4	5.0	5.7	5.9	5.5	5.1	5.4
	서비스	538.3	1.60	1.59	1.56	1.60	1.78	2.01	2.12	2.18	2.04	2.12
		(4.9)	(0.07)	(-0.05)	(-0.07)	(-0.08)	(-0.07)	(-0.04)	(-0.01)	(0.03)	(-0.17)	(-0.11)
	집세	75.0	0.12	0.12	0.12	0.12	0.11	0.11	0.10	0.09	0.10	0.09
		(-23.3)	(-0.09)	(-0.08)	(-0.08)	(-0.07)	(-0.08)	(-0.08)	(-0.09)	(-0.09)	(-0.07)	(-0.07)
	공공서비스	139.8	0.15	0.15	0.09	0.11	0.12	0.13	0.14	0.13	0.12	0.14
		(12.5)	(0.03)	(0.03)	(0.02)	(0.03)	(0.04)	(0.04)	(0.05)	(0.03)	(0.03)	(0.04)
	개인서비스	323.5	1.32	1.32	1.35	1.37	1.54	1.77	1.88	1.95	1.83	1.89
		(15.7)	(0.12)	(0.00)	(-0.01)	(-0.03)	(-0.03)	(-0.01)	(0.03)	(0.07)	(-0.12)	(-0.08)

주 : ()는 전국과의 차이(부산-전국)
자료 : 통계청

III

정책적 시사점

1 최근 소비자물가 시사점

- ▶ 최근 물가 급등세는 공업제품 가격 상승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하였고, 그 중 공업제품이 2.06%p, 개인서비스가 1.89%p의 기여도를 나타냄

- 전년동월대비 21.1% 증가율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전가가스수도의 기여도는 0.69%p
- 원자재가격과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공식품 가격상승 및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공업제품 가격과 외식물가 등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

▶ 전국대비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은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로 나타남

〈2022년 10월 부산의 품목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및 기여도〉

	총 지 수	상 품				서 비 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가가스수도)		(집 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가중치)	(1000.0)	(461.7)	(88.3)	(339.8)	(33.6)	(538.3)	(75.0)	(139.8)	(323.5)
지수	108.81	111.4	114.98	109.46	121.68	106.58	102.53	101.67	109.64
증감률	5.4	7.1	5.9	6.1	21.1	4.0	1.2	1.0	5.8
기여도	5.42	3.29	0.55	2.06	0.69	2.12	0.09	0.14	1.89

2 부산시 지원 정책 방향

- ▶ 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농축수산물 가격, 원자재 가격, 기타 수입물가 등의 상승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물가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주요 관광지 및 전통시장 등의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착한가게 등을 선정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요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등을 통한 물가 안정 대책 마련도 필요
- ▶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필요
 - 배추, 과일, 돼지고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품목들을 선정해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 유도
- ▶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 등 물가 상방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비책 마련
 - 정부의 인상자제 요청에도 원가 부담 가중으로 우유 가격이 인상되었고, 곡물가 인상으로 라면, 빵 등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예상되므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대비책 마련 필요
- ▶ 전가가스수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부문 물가 상승 효과도 발생 가능성에 유의
 - 코로나19로 동결되어 오던 전가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고, 향후에도 추가 인상가능성이 있어 타부문으로의 물가 상승 효과 확산 가능성도 상존

[BDI경제동향브리프제27호](#)

[BDI경제동향브리프제26호](#)

[BDI경제동향브리프제25호](#)

[BDI경제동향브리프제24호](#)

[BDI경제동향브리프제23호](#)

[BDI경제동향브리프제22호](#)

[BDI경제동향브리프제21호](#)

[BDI경제동향브리프제20호](#)

[BDI경제동향브리프제19호](#)

BDI산업동향

BDI산업동향10호

BDi 산업동향

9월 주요산업 동향

- I. 자동차
- II. 조선
- III. 철강
- IV. 해운

부산연구원
홈페이지



※ 이 보고서는 BDI 연구책임자의 견해로 부산광역시의 정책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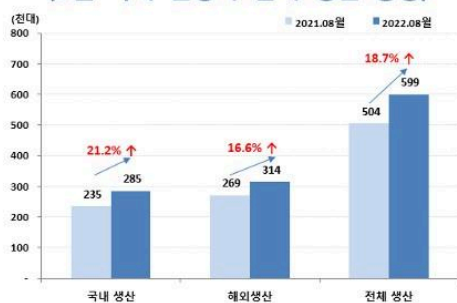
1 자동차 산업 동향

■ (생산) 2022년 8월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7% 증가

▶ 국내 완성차 업계 생산은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이 모두 호조를 보이며 증가를 기록

-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국내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21.2% 증가하였고, 해외생산도 16.6% 증가

〈8월 국내 완성차 업계 생산 동향〉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월별 국내 완성차 업계 생산 동향〉

(단위 : 천대, %)

	국내생산		해외생산		전체생산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22. 1월	271	-13.7	273	-5.2	544	-9.6
2월	264	1.2	282	4.8	546	3.0
3월	302	-9.5	304	-8.3	606	-8.9
4월	306	-5.3	284	-3.6	591	-4.5
5월	307	19.8	276	5.2	583	12.4
6월	328	0.8	310	12.7	639	6.3
7월	324	9.0	277	12.3	601	10.5
8월	285	21.2	314	16.6	599	18.7

▶ 8월 완성차 업체별 국내 생산동향을 보면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코리아 모두 생산이 증가

-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공급 애로로 인한 생산 차질이 소폭 완화되면서 완성차 업체 5개사 모두 생산이 증가한 모습

〈8월 업체별 국내 생산 동향〉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월별 업체별 국내 생산 동향(%)〉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22. 1월	-16.7	-0.5	-65.0	-21.7	121.1
2월	2.4	-8.7	0.5	3620.6	30.4
3월	-14.2	-11.6	-6.6	11.0	92.4
4월	2.5	-17.3	-14.0	95.0	36.5
5월	23.9	15.0	23.4	-10.4	56.6
6월	-0.4	2.3	2.5	-2.6	-1.1
7월	3.5	8.7	17.4	34.0	39.7
8월	17.4	15.5	43.3	62.7	57.1

■ (내수)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 ▶ 8월 완성차 업계 내수는 국내생산분 내수는 감소하였지만 수입분 내수는 증가하여 전체 내수 판매는 2월 이후 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8월 국내 완성차 업계 내수 동향〉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월별 국내 완성차 업계 내수 동향〉

(단위 : 천대, %)

	내수(국내생산분)		내수(수입분)		내수 전체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22. 1월	94	-19.0	19	-1.4	113	-16.5
2월	104	2.0	25	26.0	129	5.9
3월	112	-21.2	25	-23.2	137	-21.6
4월	120	-11.6	25	-13.2	145	-11.9
5월	120	-3.5	32	3.3	152	-2.1
6월	122	-10.1	27	-9.9	149	-10.0
7월	123	-0.9	24	-9.6	147	-2.5
8월	106	-1.0	34	28.9	140	5.0

- ▶ 8월 완성차 업체별 내수 동향을 보면 현대와 르노코리아는 수출물량 확대로 상대적으로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 기아, 쌍용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신차 출시 효과로 내수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한국지엠은 스파크, 트레일블레이저 등 주요 모델의 판매 감소로 내수 감소세가 이어짐

〈8월 업체별 내수 동향〉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월별 업체별 내수 동향(%)〉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22. 1월	-22.3	-10.7	-78.0	-14.4	26.7
2월	1.7	5.3	-52.0	69.8	-4.7
3월	-28.4	-11.7	-41.3	18.5	-21.6
4월	-15.4	-2.0	-46.1	45.8	-57.4
5월	2.1	-4.7	-39.8	-13.7	-19.6
6월	-13.0	-8.5	-22.8	-19.9	34.0
7월	-5.9	6.6	-15.7	7.9	-14.1
8월	-3.5	1.0	-24.3	42.4	-14.2

■ (수출·해외현지판매) 전체 해외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

- ▶ 8월 완성차 업체 수출은 지난해 저조했던 수출의 기저효과와 고환율 효과 활용을 위한 수출비중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27.9% 증가, 해외현지 판매도 11.4% 증가한 모습

〈8월 국내 완성차 업계 해외판매 동향〉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월별 국내 완성차 업계 해외판매 동향〉

(단위 : 천대, %)

	수출		해외현지판매		전체 해외판매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22. 1월	180	-6.1	255	-11.9	435	-9.6
2월	165	3.6	299	4.6	464	4.3
3월	177	-8.9	320	-6.2	497	-7.2
4월	197	12.8	267	-18.5	464	-7.6
5월	181	17.8	290	-11.2	471	-1.9
6월	172	-6.4	353	4.0	525	0.4
7월	223	22.5	293	2.9	515	10.5
8월	167	27.9	344	11.4	510	16.3

- ▶ 완성차 업체별 수출동향을 보면 현대차가 소나타, G70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기아차도 신형 SUV 모델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수출이 증가
- 한국지엠은 스파크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고, 쌍용은 코란도, 티볼리 등의 해외판매 증가로 32.3% 증가하였으며, 르노코리아는 XM3, QM6 수출 물량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증가한 모습

〈8월 업체별 수출 동향〉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월별 업체별 수출 동향(%)〉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22. 1월	-5.5	7.0	-61.5	-9.9	237.5
2월	13.1	-15.4	6.5	2,065.5	126.3
3월	-15.2	-7.0	-9.7	24.1	106.6
4월	12.5	-6.0	5.1	219.6	363.9
5월	27.8	12.8	11.2	5.6	-14.9
6월	-1.0	-13.8	13.7	23.4	-47.5
7월	9.6	25.2	36.8	88.0	104.4
8월	26.2	27.1	20.4	32.3	80.9

2 자동차 산업 관련 이슈

- ▶ “글로벌 자동차 3강 간다”...2030년 전기차 점유율 12% 목표(머니투데이, 2022.09.28.)
 - 정부가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30년 전기차 부문에서 330만대 생산과 세계 시장 점유율 12% 달성이란 목표를 제시
 - 산업부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모빌리티 신산업으로의 자동차 산업 경계 확장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3강으로 자리잡겠다는 구상
 -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top-tier) 도약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등 4대 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330만대 생산 및 세계 시장 점유율 12% 달성 △향후 5년간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원+α △2030년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명 포함 미래차 전문인력 3만명 양성 등 목표를 세움
- ▶ 부산 ‘수소 첨단도시’ 추진...2025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연합뉴스, 2022.09.19.)
 - 부산시는 9월 19일 부산시청에서 환경부, 부산항만공사, SK E&S, 현대자동차,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테크노파크와 ‘친환경 수소 첨단도시 부산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 환경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민간 투자 등으로 2025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를 조기에 전환하고 수소충전소 10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
 - 또한 조선 기자재, 기계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203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함
 - SK E&S는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과 수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1천100억원을 투자할 계획

3 시사점

- ▶ 미래차로의 전환 전략에 맞춰 지역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수립
 - 정부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점유율 12% 목표를 세우는 등 미래차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추진
 - 지역 자동차업계도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사업재편·사업전환 프로그램을 연계해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산업 생태계 전환 시 필요한 전략 등을 수립하여 사업화할 필요
- ▶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자동차 영업 환경 악화 가능성
 - 금리인상 여파 및 인플레이션 여파로 자동차 소비 위축 가능성이 크게 증가
 -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 증가로 자동차 업계는 물류적체, 수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영업 환경 악화에 대비할 필요

II

조선

1 조선 산업 동향

- ▶ 8월 국내 조선업 신규수주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의 40.7%를 차지
- 8월 글로벌 신규 수주는 1,879천CGT로 전년동월대비 47.4% 감소, 국내 신규 수주는 764천CGT로 1.9% 감소

〈8월 글로벌 · 한국 수주량〉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클락슨(Clarksons)

〈글로벌 · 한국 월별 수주량〉

(단위 : 천CGT, %)

	글로벌 수주		한국 수주	
	수주량	증감률	수주량	증감률
'22. 1월	4,754	52.2	1,948	105.9
2월	2,620	-52.3	1,017	-37.1
3월	4,593	-39.6	2,054	-36.8
4월	4,142	-7.9	1,152	-10.1
5월	2,954	-35.2	1,240	-29.2
6월	4,451	-21.6	2,579	14.5
7월	2,286	-54.2	1,165	-34.6
8월	1,879	-47.4	764	-1.9

- ▶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2척, 가스운반선 10척 등 총 12척 수주, 조선사별로는 현대울산 7척, 현대미포 조선 4척, 대우 1척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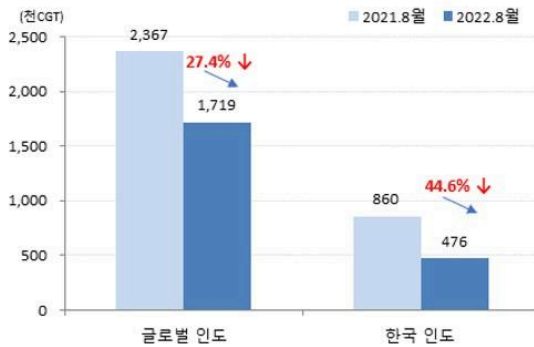
〈8월 조선사별 수주 내역(척수)〉

	대선	한진	대우	대한	현대미포	현대삼호	현대울산	삼성	이케이중공업	케이조선	삼강M&T	기타	합계
가스운반선			1		2		7						10
탱커													
컨테이너					2								2
기타													
합계			1		4		7						12

자료 : 클락슨(Clarksons)

- ▶ 국내 조선사의 선박 인도량은 '21년 8월 860천CGT에서 '22년 8월 476천CGT로 44.6% 감소

〈8월 글로벌 · 한국 인도량〉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클락슨(Clarksons)

〈글로벌 · 한국 월별 인도량〉

(단위 : 천CGT, %)

	글로벌 인도량		한국 인도량	
	인도량	증감률	인도량	증감률
'22. 1월	3,413	-18.0	802	-51.5
2월	1,393	-38.5	443	-37.3
3월	2,564	-21.8	860	-26.9
4월	2,015	-21.8	536	-37.4
5월	2,262	-14.9	674	-25.8
6월	3,376	4.6	980	-4.4
7월	2,180	-22.4	516	-27.2
8월	1,719	-27.4	476	-44.6

- ▶ 국내 선박 수주잔량은 '21년 8월 28,603천CGT에서 '22년 8월 35,683천CGT로 24.8% 증가

〈8월 글로벌 · 한국 수주잔량〉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클락슨(Clarksons)

〈글로벌 · 한국 월별 수주잔량〉

(단위 : 천CGT, %)

	글로벌 수주잔량		한국 수주잔량	
	수주잔량	증감률	수주잔량	증감률
'22. 1월	96,003	21.9	29,900	28.8
2월	97,296	25.3	31,045	38.1
3월	97,590	21.4	31,619	37.7
4월	99,617	17.6	32,813	31.1
5월	101,491	17.2	33,211	30.4
6월	102,007	15.2	33,692	28.1
7월	102,743	12.9	35,034	27.3
8월	102,732	10.4	35,683	24.8

- ▶ 8월 국내 조선업 수주 MS는 40.7%로 지난해 8월 21.8%에 비해 18.9%p 증가

- 수주잔량 MS는 국내 조선업이 34.7%, 중국은 42.5%

〈한국과 중국 조선업 MS(%)〉

	수주잔량		인도량		수주잔량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21. 8월	21.8	56.8	25.2	38.6	30.7	40.8
'22. 8월	40.7	54.2	23.7	41.5	34.7	42.5

자료 : 클락슨(Clarksons)

2 조선 산업 관련 이슈

- ▶ 해운·조선업 2022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2.07.28.)
 - 상반기 세계 신조선 시장은 일부 선종의 잠재수요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
 - 금리상승, 신조선 가격상승이 하반기 신조선 시장에 영향을 미쳐 다소간 수요 위축 전망
 - 하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과 한국 수주량은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상반기 양호한 실적으로 연간 발주 및 수주량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전망
- ▶ KRISO, '중소 조선산업 재도약' 위한 '친환경 기술지원' 나섰다(부산일보, 2022.09.04.)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8월 30일 '친환경 중소형선박 기술역량 강화사업 발대식', '대·중형 조선 상생협력 업무협약식' 개최
 - '친환경 중소형선박 기술역량 강화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친환경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 조선산업의 재도약 계기로 삼기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와 지속 성장을 목표
 - '대·중형조선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은 중소형 조선소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여 국내 중소 조선산업의 지속 성장과 기반 강화를 위해, 대형 조선소와의 상생협력을 도모
- ▶ "세계 수주 1위지만 위기 공존"...제19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연합뉴스, 2022.09.15.)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공동주최로 9월 15일 '제19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 개최
 -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생산 인력 부족 심화, 중국의 기술추격 본격화 등 위기 공존,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형태로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
 - 조선5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산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 체결

3 시사점

- ▶ 지역 중형조선사의 경쟁력 유지 및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 친환경 변화 요구 대응 연구개발의 효과적 파급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필요
 -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활용도 제고, 인력 양성 및 고용노동 정책을 통한 지원책 강구
- ▶ 지역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 디지털 전환,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지원, 시스템 단위 제품 공급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 초격차 경쟁력 확보 노력 필요
 - 글로벌 주요 조선 지역에 거점을 확보·운영, 해외 신시장 진출 지원정책 지속 추진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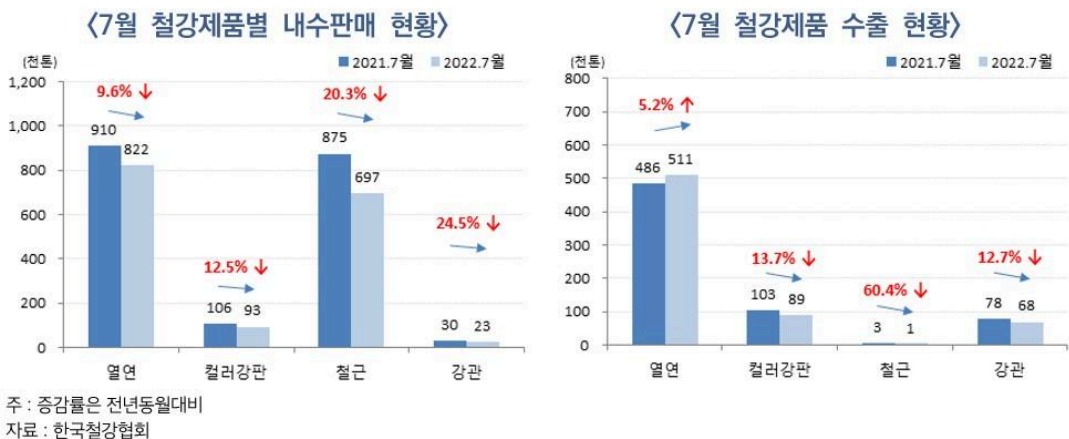
철강

1 철강 산업 동향

- ▶ 포항지역 태풍 피해, 노조 파업 예고, 고환율 등 대내외 이슈로 주요 품목 가격 인상 예상
 - 열연은 태풍 '힌남노' 포항지역 수해 복구 속도 문제로 혼조세, 컬러강판은 적자 판매 지속으로 10월 가격인상안 검토, 철근은 철스크랩 가격 반등에도 일부 제강사 마감 할인으로 가격 유지, 강관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10월 가격 인상 검토



- ▶ 주요 철강제품 7월 내수는 감소, 열연을 제외한 품목 수출은 감소
 - 내수판매는 수요 산업 성장세 둔화, 재고량 증가 등으로 감소, 수출은 아시아 주요국 계절적 비수기 진입, 유럽 에너지 대란 심화, 미국 경기 둔화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열연의 경우 수출 다변화 등으로 증가



2 철강 산업 관련 이슈

- ▶ KIAF “韓 배출권거래제 규제 세계에서 가장 강해…기술혁신 저해”(연합뉴스, 2022.08.02.)
 - 한국산업연합포럼, 8월 2일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제27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 KIAF 정만기 회장, “한국을 포함한 34개 지역·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중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
 - “철강업의 경우 2018년 배출량 1억1백만t 대비 약 1억t인 90.8%의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아무리 현존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교체를 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
 - “기후대응기금을 소규모 사업 지원 위주에서 기술혁신 지원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 R&D 지원도 수소환원제철, 수소스택,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의 탄소중립 R&D에 대해서는 해당액만큼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고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
- ▶ 하반기 철강 수요 더욱 줄어든다(철강금속신문, 2022.09.16.)
 - 한국철강협회, ‘2022년 하반기 철강 수요 전망’에서 전반적 감소세 예상
 - 세계적인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철강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 하반기 불확실성 확대로 철강업계 수요 상황 예의 주시

3 시사점

- ▶ 지역 철강업계 저탄소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점차 증가하므로 관련 관계부처, 연구기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적극적인 재정·금융 지원 필요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 지역 철강업계 의견 전달
- ▶ 하반기 불확실성 확대 대응 노력 지속
 - 하반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요 위축 가능성 증대, 환율 상승 지속 시 원자재 수입 부담 증가 등 지역 철강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구조 개편, 제조부문 혁신, 고부가가치 제품 R&D 투자 확대 등 지역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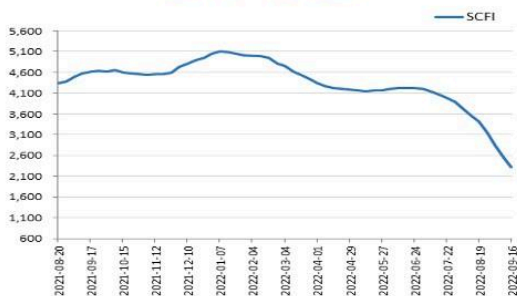
IV

해운

1 해운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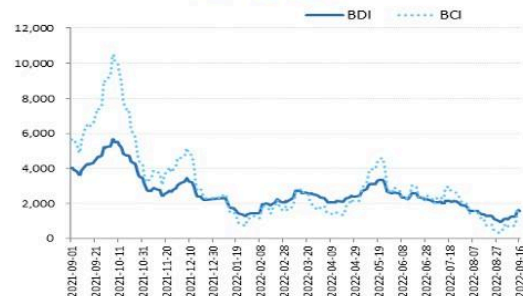
- ▶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은 경기침체 우려로 세계 상품 수요가 줄어들어 해운업체간 화물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급락하고 있음
 - 벌크선은 최근 북미와 남미발 곡물 관련 신규 물동량 증가로 운임이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생산 축소 등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중동산 원유 물동량이 증가하여 유조선 운임은 급등세를 나타냄
- ▶ 8월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은 환적화물(-3.9%)은 감소하였으나, 수출화물(6.2%)과 수입화물(7.9%)이 증가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컨테이너선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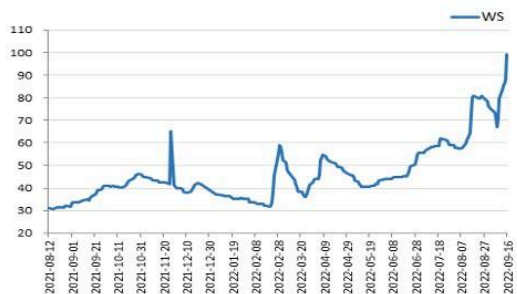
주 :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자료 : 클락슨(Clarksons)

〈벌크선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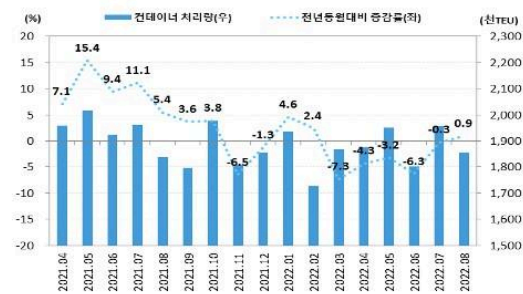
주 : BDI(건화물선운임지수), BCI(케이프운임지수)
자료 : 클락슨(Clarksons)

〈유조선 운임〉



주 : WS(유조선운임지수, 27만톤 초대형유조선(VLCC)기준)
자료 : 클락슨(Clarksons)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통합 PORT-MIS)

2 해운 산업 관련 이슈

▶ 해운업계, '친환경 전환' 바람 분다(물류신문, 2022.09.28.)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2022~2026)'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산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해운 물류망을 구축할 예정
-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지속하고 LPG·하이브리드를 연료로 하는 저탄소 어선 등 친환경 어선 기술을 개발해 2026년부터 보급할 예정
- 또한 높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으로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지원하고 수소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울산항 신항·부산항 신항·광양항 등 주요 무역항을 수소의 생산·유통·활용 거점으로 사용하는 수소 기반 탄소중립 항만, 즉 '수소 항만'을 조성할 계획

▶ BPA, 이라크항만공사와 손잡고 항만 협력 확대 기반 마련(코리아슈핑가제트, 2022.09.28.)

-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5일 이라크 바스라에서 이라크항만공사(GCPI)와 양 항만공사간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
- 이번 협력 협약으로 BPA와 GCPI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운영 정보 교류 ▲경험 공유를 위한 인적 교류 등 교육 프로그램 개설 ▲환경 및 안전, 보안 관련 공동 연구 등을 상호 추진할 예정
- 이번 협력 협약 체결은 국내 민간기업들의 이라크 건설 및 항만사업 진출을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3 시사점

▶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운업 불확실성 크게 증가

- 상반기 고운임 기조로 실적 강세를 보이던 해운업이 최근 운임료가 급감하는 등 조정기에 들어섬
- 통상적으로는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11월 블랙 프라이데이와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늘면서 9월부터는 해운업이 성수기에 들어가지만 최근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정책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며 운임이 급락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

▶ 해운시장 친환경규제 대응책 마련 시급

- 국제해사기구(IMO) 내년부터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환경규제인 탄소집약도 등급제(CII)를 실시
- 선박들은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A(높은등급)부터 E까지 등급을 부여받고,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한번이라도 받으면 선주는 탄소배출량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환경규제에도 선주들은 최소한의 선박 부품 교체 투자만을 실행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BDI산업동향 9호](#)

[BDI산업동향 8호](#)

[BDI산업동향 7호](#)

[BDI산업동향 6호](#)

[BDI산업동향 5호](#)

[BDI산업동향 4호](#)

[BDI산업동향 3호](#)

[BDI산업동향 2호](#)

[BDI산업동향 1호](#)

부산고용동향

BDI국내정책연구동향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63호

BDI

국내 정책연구 동향

금주의 정책연구 동향

■ 시·도연구원

- ❶ 비대면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소외(경기연구원)
- ❷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서울연구원)
- ❸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전략(서울연구원)
- ❹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여부 검토(인천연구원)

■ 국책연구원

- ❶ 이용자 중심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국토연구원)
- ❷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국토연구원)
- ❸ 청년유인형 일자리 특성 연구(한국노동연구원)
- ❹ 위험사회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위험'과 불평등(국토연구원)
- ❺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국토연구원)
- ❻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전략과 시사점(산업연구원)

■ 민간연구원

- ❶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 상존하는 기회와 위협(현대경제연구원)



I. 시·도연구원 정책동향 및 시사점

1

비대면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소외

(배영임, 경기연구원, 2021.3)

<https://www.gri.re.kr/이슈-진단/?brno=14672&prno=20210114>

-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사람 간의 소통과 거래를 디지털 서비스가 대신하는 트렌드(인터넷 쇼핑, 배달서비스, 인터넷 뱅킹 등)가 일반화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반면 디지털화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심화
- 디지털 소외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
 - 온라인 쇼핑 활용 능력이 능숙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평균 89.5%이지만, 60대 이상은 69.0%로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활용 능력은 낮은 수준
 - 온라인 학습 측면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스마트기기와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었으며(38.9%),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은 학습지도가 어려웠다고(24.5%) 응답
- 디지털 뉴딜 정책과 함께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가치 실현을 위해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통합 모델을 제시할 필요
 - 포용적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온·오프라인 디지털 교육·체험 서비스 지원 거점 조성,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지원 등

시사점

- ① 디지털 소외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은 부산에서 향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
 - 부산 시민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 결과에 따른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
- ② 부산의 지역적 특성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유형(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고려한 부산형 디지털 포용정책 수립이 필요
 -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체험 서비스, AI 기반 돌봄서비스 등

검토 : 구윤모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ymkooh@bdi.re.kr

2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황인창 외, 서울연구원, 2021.2)
<https://www.si.re.kr/node/64442>

- 기후변화·미세먼지는 단순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 사회문제
 - 2019년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됨
 - 2020년 우리 사회 중장기 발전과제로 한국판 그린뉴딜 제시 및 탄소중립 선언
 - 시민 인식 향상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해결해야 하는 주요 사회문제이자 공공정책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명령통제 방식이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시민과 기업이 행동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필요
-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는 경제적 수단(또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온실가스과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60개의 탄소가격제가 시행 중
- 온실가스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건물·수송부문의 배출권거래제도 등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사례를 제시
 - 건물부문: 비주거용 중대형 건물 대상 배출권거래 기반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 수송부문: 탄소·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등급에 따라 자동차세 차등 부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통행료와 과태료의 차등 부과
 - 비용부담완화 방안 마련, 총량제 효과성 홍보로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 유도

시사점

- ① 시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주도형 공공정책의 활성화가 필요
- ② 수송(교통, 항만, 선박 등)·에너지부문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부산은 배출권거래 기반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과 오염물질 배출 기반 자동차세 도입이 필요
 - 오염물질 배출 기반 자동차세제 개편,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대형화물차량 통행료와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의 논의가 필요
 - 선박 배출량 저감을 위해 탄소배출 기반 컨테이너세 부과와 배출권거래 도입이 필요

검토 : 허종배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jbheo@bdi.re.kr

3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전략

(조항문 외 서울연구원, 2021.1)

<https://www.si.re.kr/node/64334>

- 2040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열에너지 확대가 필요
 - 상수도 시설, 하수처리 방류수, 하천수 등 미활용 에너지인 수열을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 수열에너지 범위에 하천수를 추가
 - 2019년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범위가 기존의 해수 표층수에서 하천수까지 확대
- 수열에너지 적용은 주택 난방 수요, 상업건물 냉·난방에 초점
 - 수열에너지는 에너지원과 수요처가 인접한 지역이 적합
 - 즉, 에너지원과 수요처 간의 적합관계를 고려한 수열에너지 활용이 타당

시사점

- ① 필요 에너지는 스스로 생산하는 에너지 활용 방향이 타당하다면 다양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열도 사용 가치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는 대부분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생산해 조달
 - 특히 부산은 원전발전량이 부산시 소비량의 약 1.8 배에 달해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타 지역에 수출하는 수출도시임
- ② 수열에너지는 미활용 에너지의 한 분야로, 과거부터 지속적인 연구와 활용이 되고 있음
 - 부산 해안가 건물에 해수열 냉·난방 활용 시스템을 적용 중
- ③ 에너지시설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매우 중요
 - 에너지시설은 건설 후 수십년간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잘못된 선택일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에너지 생산의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도 발생(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지열발전)
- ④ 수열에너지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가 적절
 - 과거 지열에너지 사례를 고려하면 수열은 소규모로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검토 :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yc2001@bdi.re.kr

4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여부 검토

(배광빈 외, 인천연구원, 2020.12)
<https://www.ii.re.kr/>

-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적정성 분석기준을 제안
 -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기초로 두 가지 안 제시: 1안(경기), 2안(충남)
- 적정성 검토는 2단계로 진행(1안 기준): 개념적 적정성 → 실질적 적정성
- 1단계: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검토
 - 지방공공기관 사무와의 구분, 책임과 명의의 수탁 적절성, 법적 성격 부합성 등
- 2단계: 실질적인 적정성 분석 진행, 공공성과 효율성 두 측면의 세부 기준 활용

<적정성 분석 기준>

공공성	효율성
- 서비스 중요성 - 서비스 수혜 대상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 서비스 중단 파급효과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관리 운영의 투명성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 여건

시사점

- ①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적극적인 직영화 추진을 전제로 적정성 분석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
 -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존중을 강조하는 행정 방향에 역행
 - 아직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시행 착오 발생이 불가피
- ②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은 현재 상태뿐 아니라 업계 변화 흐름,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됐을 때 예상되는 개선 수준 등 미래 전망까지 감안해 진행
 - 당장은 시장의 경쟁적 여건이 미흡하더라도 시장 구조의 변화나 행정 당국의 노력으로 앞으로 형성이 가능하다면 긍정적 평가가 바람직

검토 :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chpark@bdi.re.kr

II. 국책연구원 정책동향 및 시사점

1

이용자 중심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윤서연, 국토연구원, 2021.3)
<https://www.krihs.re.kr>

- 충전소 보급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 공공부지 충전소 우선 공급이 친환경차 활성화에 기여한 반면 낮은 이용률 충전소가 다수 발생
- 전기자동차는 거주지 또는 직장에서 완속 충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장거리 통행 이용자는 거주지 완속 충전과 공용 급·완속 충전을 활용
 - 충전기 추가 설치 순위는 주거지, 직장, 고속도로 휴게소 순으로 나타나며 장시간 머무는 곳에 우선적으로 충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 대도시권(수도권 외곽)에서는 수소차 수요가 높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과 고압충전소의 잦은 고장 및 고장안내 시스템 미흡으로 이용자의 어려움이 존재
 - 도심보다는 도로변 유희부지, 공공차고지 등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특성에 따라 고압·중압 충전 수요를 고려한 보급 정책이 필요
- 충전인프라 분포가 국내 친환경차의 공간적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충전인프라 보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이 중요

시사점

- ① 친환경차 충전소는 부산의 장소 특성에 맞춰 설치가 필요
 - 완속충전소는 거주지 및 해운대 등의 숙박업체에 설치가 유리하고, 급속충전소는 공용시설에 적합하며, 전기차 충전기 회전율을 고려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수소차 충전소는 빠른 보급을 위해 도시고속 및 통근 구간 중 부산 외곽지 우선으로 고려
- ②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부산시 재정 확보와 동시에 민간투자 확대 방안이 필요

검토 : 남호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namhs85@bdi.re.kr

2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

(김정화 외, 국토연구원, 2021.2)

<https://www.krihs.re.kr/issue/cbriefView2.do?seq=34777>

- ‘수소경제’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경제,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해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미
-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가 연합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본격 전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승용차) 81만대 보급,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의 수소전기차(승용차) 생산과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을 추진할 계획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치가 달성된다는 전제 아래 도로환경의 개선효과를 평가한 결과, 2040년 기준 해당년도의 화폐가치로 총 2,686.1억원/년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
- 향후 도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수소에너지의 효과를 편익항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시사점

- ① 정부의 수소경제사회 전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수소전기차 보급에 따른 지역별 도로환경 개선편익을 분석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부산시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
 - 수소전기차 1대 보급으로 발생하는 도로환경 개선 효과 및 관련 편익이 지역에 따라 달라짐
- ②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환경 개선편익이 높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소충전소 구축이나 추가 구매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방향을 설정

검토 : 이은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slee@bdi.re.kr

3

청년유인형 일자리 특성 연구

(윤윤규 외, 한국노동연구원, 2020.12)
<https://www.kli.re.kr/kli>

- 직종, 규모, 산업,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층 취업을 유인하고 이탈 없이 오래 유지되는 일자리 특성을 규명
- 청년유인형 일자리 특성 열 가지 중 핵심 내용을 제시
 - 청년층이 신규 입직해 일단 1년간 직장을 유지하면 추가로 1, 2, 3년을 근속할 확률이 높아지며, 특히 20대 중반 이후 청년층은 추가 근속 확률이 70~90%로 높음
 - 전문가관련직, 사무직, 기계조작조립원은 직장유지율이 높은 직업군이고, 기능원은 중간 정도이며,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직장유지율이 낮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직장유지율이 높고,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은 낮음
 - 제조업은 청년 취업자 비중이 약 20%로 높고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직장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년층을 유인하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주목할 필요
 -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학력이 높은 신규 취업자일수록 직장유지율이 높음

시사점

- ① 신규 입직 부산 청년층의 일자리 매칭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매칭된 일자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청년들의 초기 근속 및 직장 정착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할 필요
 - 신규 입직 청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
- ② 부산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등의 종사자 수가 많고 제조업 취업자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 산업의 청년층 직장유지율 제고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작업환경·근로복지 개선이 절실

검토 : 서옥순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osseo@bdi.re.kr

4

위험사회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위험'과 불평등

(김수진, 국토연구원, 2021.2)

<https://www.krihs.re.kr/issue/issueReportView.do?&seq=780>

-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
 -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를 조망하면 벡이 규정한 위험사회와 일정 부분, 즉 '위험의 전지구화', '전문가와 국가 역할 강조', '개인이 위험책임의 몫을 짐' 등의 공통점이 발견
- 코로나19 위험은 노출-취약성 관계 측면에서 기존 재난위험과 차별적
 - 체계의 위험의 유사성은 있으나 코로나19는 장기간 비물리적인 일상적 위험으로 확장해 나타나는 차별성이 있음
 - 주거취약지역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장기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코로나19 위험을 감소하려면 기존 불평등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
 - 거주민 일상생활 패턴을 반영한 핫스팟(집중 발병 지역) 찾기 방법론 개발
 - 코로나19 민감 집단과 기존 취약 집단 간 교차 여부 검증
 - 마을단위 공동체 리더 주도로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데이터 구축 필요

시사점

- ① 의료 및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위험-불평등 체계를 점검
 - 위험 노출의 상대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
- ② 부산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마을단위 사회적 취약성을 검토
 - 도시결핍지수, 균형지수 등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불평등구조를 살펴보고, 위험노출과의 연관성 실태 파악을 추진
- ③ 일상적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
 - 생활권계획에 생활안전, 감염 취약성 공간구조 개선 등을 적극 반영해 불평등에 따른 위험도 저감 정책을 마련

검토 : 오재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j302@bdi.re.kr

5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이태리 외, 국토연구원, 2021.3)

<https://www.krihs.re.kr/issue/cbriefView2.do?seq=34777>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은 임대료가 69.9%로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대출이자(11.8%), 인건비(8.0%)의 순(소상공인연합회, 2020)
 - 소상공인은 영업손실을 매출손실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을 요구
- 해외 사례를 보면 자영업자 지원으로 소득지원, 임금지원, 대출지원을 제공
 - 영국: 자영업자소득보조¹⁾ 세 차례 시행(3개월 평균 영업이익의 80% 지급)
 -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²⁾(임금 및 임대료 지불을 위한 자금 대출 후 상환면제)
- 국내는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이 있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심각한 어려움인 임대료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점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
- 고정비용 중 특히 임대료 부분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 자영업자의 고정비용을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정보를 축적해 관리할 필요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으로 경제적 격차를 해소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상생가능한 지원이 필요

시사점

- ① 이 연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고정비용 문제 해소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
- ② 자영업자의 고정비용을 신고해 관리하는 체계는 현황 진단과 합리적인 보상, 유효한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
-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은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부분과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

검토 : 황영순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ysh@bdi.re.kr

1)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2) Paycheck Protection Program

6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 전략과 시사점

(조은교, 산업연구원, 2021.2)
<https://www.kiet.re.kr>

- 미국의 對중국 기술제재, 통상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으로 대응
- 디지털 실크로드에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확대
 - 중국은 5G 등 통신네트워크, AI,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를 연선국(36개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여국)을 중심으로 구축
 -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
- ‘중국제조 2025’ 후속의 ‘중국표준 2035’ 전략과 연계해 기술표준분야에서도 일대일로 참여국과 협력을 강화

시사점

- 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의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중국 디지털 기업은 관련 비즈니스에 적극적
 - AI 챗봇 이용 건강상담, AI 기반 코로나 CT 진단, 동남아 전자상거래 등 코로나19 이슈 관련 비즈니스에 적극 대응
- ② 디지털 인프라 기업,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관련 비즈니스에 적극 동참하는 통상 촉진이 필요
 - 아시아지역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산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협력,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 판촉활동 지원이 필요
 - 코로나19 영향 지속 아래 주요 수출국(미국·중국·일본)의 자국 중심 무역정책 전개에 따라 통상 리스크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 해외 마케팅이 필요

검토 : 장정재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jangjj@bdi.re.kr

Ⅲ. 민간연구원 정책동향 및 시사점

1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 상존하는 기회와 위협

(오준범 외, 현대경제연구원, 2021.1)
<http://www.hri.co.kr/>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위축됐던 글로벌 수출시장이 2020년 3분기부터 반등해 최근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수출도 개선 가능성이 확대
-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5가지를 제시
 - 글로벌 통상 레짐의 변화 : 메가 FTA 체결, 미국의 다자체제 복귀 등 기존 보호무역주의 완화가 기대되면서 글로벌 통상 레짐 변화 가능성이 대두
 - 친환경 그린경제의 부상 : 2021년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가 통상환경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 국내 수출 기업에 기회 및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출 : 2021년에는 수입에 비해 수출의 큰 증가가 예상
 - 환율 리스크 상존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지속 전망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돼 국내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
 - 수출 차별화 심화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수요 변화 등으로 향후 국내 수출도 산업별, 수출대상국별 차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
- 국내 수출 주요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재침체 및 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글로벌 통상 트렌드 변화 대응, 에너지·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시사점

- 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요국 경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②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부산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및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 ③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해 지역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

검토 : 이미정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위원, mjlee627@bdi.re.kr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62호](#)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61호](#)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60호](#)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9호](#)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8호](#)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7호](#)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6호](#)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5호](#)

[BDI 국내정책연구동향 54호](#)

미디어

영상리포트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제127호] 공공주도 노후주거지 재생



부산시 주거여건 진단

출산율을 높이려면(부산사회조사 가족편)

[부산대개조에 따른 부산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전략](#)

[데이터로 보는 부산항 물류](#)

[코로나19 부산시민 생활변화](#)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와 공적지원 방안](#)

[해양신산업,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의 신성장 동력](#)

[공유교통 활성화로 부산교통 혁신플랫폼 구축](#)

이슈큐레이션

[부산이슈큐레이션 제 17호]소프트파워 부산을 꿈꾸다

부안이슈
**클레이언
제17호**

Busan Issue Curation 제16호 / 2021.09

부산연구원은 솔기로운 정형내용에 답합니다.
#소프트파워#디지털콘텐츠#영상영화#게임

'소프트파워 도시' 부산을 꿈꾸다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의 힘을 의미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최근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다. 이처럼 소프트파워의 국가는 물론 국가의 태력과 경제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다.

부산도시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파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평창산부부 글로벌 도시가 되려면 연구 수 등 소프트파워가 아니라 부산이 내세울 수 있는 소프트파워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연구원은 해양문화콘텐츠, 영화·영화, 게임 등 부산의 문화적 자산을 융복합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SoftPower
콘텐츠
(드라마)

✓ 한-아세안 ICT 콘텐츠 빌리지 설립 구상 방안 +
✓ 해양문화콘텐츠 중심도시 부산의 가능성 +

READ MORE

SoftPower
영상·영화

✓ 부산 영화영상 클러스티화를 위한 연계 협력방안 +
✓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 +
✓ 부산·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할스화'를 위한 기초연구 +
✓ 부산의 영화와 영상 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융합 플랫폼 전략 +

READ MORE

SoftPower
게임

✓ 엔택트 경제에서의 부산시 게임산업 육성방안 +
✓ 부산 VR 생태계 현황조사 및 산업연구 +
✓ 부산 콘텐츠산업의 미래주, 게임산업 +

부산을 꿈꾸다

부산(네트워킹)가톨릭 10년 모라기

2021-10-25

1062

[다운로드](#)

'2050 탄소중립 도시' 부산을 그린(Green)다



기후변화는 유례없는 기상재해를 불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도

기후변화와 깊이 연결된 현상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이 인류의 최대 화두가 됐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사회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부산시도 이런 시대 흐름을 인식해 2030월드엑스포 주제를 세계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자는 내용으로 잡았다.

부산연구원은 부산의 탄소중립 도시 전환을 위해 탄소제로, 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다.

수소·에너지

[READ MORE](#)

- ✓ 남/북/러 경험수소생산, 운송 프로젝트 부산시 추진 전략 [+](#)
- ✓ 부산형 수소경제 실현 방안 [+](#)
- ✓ 부산지역 수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호주의 수소기반 혁신사례 및 활용방안 [+](#)
- ✓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 방안_수소선박을 중심으로 [+](#)
- ✓ 풍력특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방안 검토 [+](#)
- ✓ 부산지역 친환경 클린에너지 중심의 도시재생 플랫폼 구축 및 추진방안 [+](#)
- ✓ 해양중추도시 부산을 위한 소형풍력에너지 산업 [+](#)
- ✓ 부산지역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
- ✓ 부산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 ✓ 부산지역 에너지 신산업 육성 잠재력 판단과 대응방안 [+](#)

탄소제로

- ✓ '2050 탄소중립 도시'전환을 위한 부산의 대응 과제 [+](#)
- ✓ 부산시 저차원 탄소기반 신소재 융합 산업 육성전략 [+](#)
- ✓ 부산 주요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지원 방안 [수행중](#)
- ✓ 탄소중립(net Zero) 기반 부산형 트라이포트 기본구상 [수행중](#)

2021-09-29

941

[다운로드](#)

부산이슈
큐레이션
제15호

Busan Issue Curation 제15호 / 2021.08

부산연구원은 슬기로운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피란수도부산#유네스코세계유산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부산연구원의 7년간의 여정

한국전쟁 당시 부산은 1023일간 피란수도였다.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란민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포용과 평화의 실천 현장이었던 피란수도 부산 당시의 건축·문화 자산은 아직 남아있다.

부산연구원은 역사적·세계유산적 가치를 가진 피란수도 부산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연구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피란수도 유산의 의미와 기억을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다.

[+ READ MORE](#)

- 2015 [✓ 피란수도 부산 건축 문화자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김형균 +](#)
[✓ 피란수도 부산의 문화예술, 부산학연구센터 +](#)
- 2016 [✓ 피란수도 부산 건축 문화자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 연구, 김형균 +](#)
[✓ 6.25 피란생활사 피란민의 삶과 기억, 부산학연구센터 +](#)
- 2017 [✓ 피란수도 건축문화자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가치발굴 연구, 오재환 +](#)
[✓ 6.25 피란민의 자전기록 부산의 기억과 삶, 부산학연구센터 +](#)
- 2018 [✓ 피란수도 부산의 문학풍경, 부산학연구센터 +](#)
- 2020 [✓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등재 마스터 플랜수립, 오재환 +](#)
[✓ 피란수도 부산의 주거환경, 부산학연구센터 +](#)
- 2021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잠정목록 조건부 등재](#)



2021-08-31

1073

'맑은공기, 건강한 시민'

['대기오염 없는 부산'을 위한 정책 방안]



부산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방안 _2020

항만·선박 기인 미세먼지 배출량은 부산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과 연계된 대형화물차량의 운행 등으로 부산시 미세먼지 화학성분의 인체 위해도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따라 항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시민 건강 위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제시 합니다.

부산광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계획 _2020

부산시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프로그램과 감축목표 권고(안)을 참고해 2030년도 목표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통합대기환경지수를 이용한 부산지역 대기질 특성분석 및 관리방안 _2016

장기간에 걸친 부산 대기오염도 DB를 토대로 작성한 통합대기환경지수를 활용하여 부산시 용도지역 및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분석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 했습니다.

동남권 대기질관리 협의체 구성 방안 _2019

광역대기권역(부산, 울산, 경남)의 대기오염물질별 농도 특성과 배출원 특성 분석을 통한 동남권 대기질 관리 권역을 설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초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기질 관리 협의체 구성안 및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등을 제시 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변 주민의 인체 내 오염물질 노출 정량화 기술 개발(수행중)

다양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선박, 화력발전소, 산업시설, 산업도로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는 부산 공단지역 주민에게 노출되는 미세먼지의 오염원 기여도 정량 및 건강 위해도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산시 미세먼지 오염원 규명 및 관리 정책을 개발 중입니다

부산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수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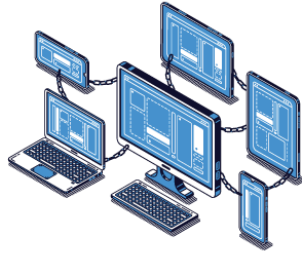
부산지역 대기오염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오염원별 배출량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대기질 관리 방안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1-08-31

353

4차산업혁명 시대 * 미래산업 정책연구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 차세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산 산업 그랜드 디자인

4차 산업혁명이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미래의 지역 먹거리,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을 제안 _김종욱, 2019

부산지역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부산을 인공지능 도시(AI City)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주요 지자체 간 인공지능 연관 생태계 비교 분석 _백수현, 2020

부산 하이테크소재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육성 전략

지역 소재산업에 대한 대내외 경쟁력을 분석하고, 향후 부산지역 하이테크소재산업의 육성 방향 및 전략 제시 _김종욱, 2020

서부산권 미래산업혁신관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동·서 과학기술 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산권 미래산업혁신관의 설립에 대한 기초 기획안을 수립 _김종욱, 2020

엔택트 경제에서의 부산시 게임산업 육성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엔택트(비대면) 경제 하에서 부산시 게임산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 제시 _구윤모, 2020

부산 혁신도시를 4차산업혁명 혁신융합클러스터로 조성

부산이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무인 운송기기(자율주행차, AGV, AUV 드론 등),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AR/VR,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선도기업 육성 방안 _백수현, 2019

4차산업혁명 융합 기술센터 설립 방안

4차산업혁명 융합기술센터 설립의 여건 분석 설립 필요성과 설립 방향 센터의 비전 및 전략 기능 및 조직 소요 예산 운영방식 및 실현전략 등을 제시 _김도관, 2018

4차산업혁명 시대, 부산의 신성장동력산업 전략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부산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육성 전략 제시 _김도관, 2017

2021-06-28

555

[다운로드](#)

부산이 직면한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도래, 1인가구 증가 등
인구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연구를 소개합니다



✓ **인구감소에 대응한 부산 인구정책 방향** (김경수, 2019)

1970년대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대도시 성장 억제 정책**'의 결과로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은 인구 집중이 가속화한 반면 부산은 30년 전 인구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지역소멸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은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으로의 청년 유출 등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다.

부산 인구는 수도권 및 김해·양산 등 인접 동남권으로의 유출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경제적 여건에 의한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의 인구정책은 청년이 부산에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를 견인할 과감한 청년인구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 **인구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 (이원규, 2021)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을 정점으로 2019년 346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311만 명, 2040년에는 289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부산시 교통정책은 인구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왔다. 앞으로는 **인구변화의 주요 요인인 인구 감소, 초고령 사회 도래,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 교통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장래 인구변화 요인 분석, 교통정책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부산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교통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도시 수용력 평가에 관한 연구** (박봉철, 2021)

부산시는 과거 국토 재건과 개발 중심의 국가정책으로 인해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했고, 현재까지 그 연장선상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 여건 변화 및 수용가능 인구를 고려하지 못한 계획인구가 산정되고 있다.

부산시 도시 수용력을 평가한 결과 수용가능 인구는 최소 2,433,590명에서 최대 3,105,999명으로 도출됐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부산시 계획 인구 및 상주인구는 도시 수용력을 초과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도시 확장 및 개발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 수용력 평가에 기반한 생활권 공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21-05-24

495

[다운로드](#)

SMART 산업

#산업단지#제조업

부산지역 **스마트**산업단지 조성방안
: 녹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19, 김도관

#해양

부산 **스마트** 항만(Smart Port)
연관산업 육성방안 연구

2020, 장하웅

#혁신기업#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업육성 기반조성

2021, 오동하

부산지역 주력 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 확대 방안

2017, 배수현

부산해양산업클러스터내
친환경**스마트**선박 R&D 플랫폼
사업 유치전략

2017, 최윤찬

부산지역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육성방안

2016, 금성근



SMART 공공정책

스마트시티부산 새로운 방향 모색

2019, 부산발전포럼

스마트시티 구축을위한
부산시 공공데이터 관리방안

2016, 오동하

스마트 안전 도시 서비스
구축을 위한 부산의 대응전략

2015, 배수현

SMART 시민사회

스마트사회 도래에 따른
부산 시민 생활양식 변화와 정책 과제

2020, 오재환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전략

2019, 오동하

체험형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식도 연구

2017, 정석찬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남광우

2021-05-14

455

[다운로드](#)

부산, 힐링·치유의 도시로 거듭나다



부산, 치유산업 어디까지 왔나?

건강·힐링·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치유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더불어 바다, 산, 강, 온천 등 치유를 위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이 풍부해 치유산업에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부산의 자연·인문 자원과 치유자원, 치유활동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부산형 치유산업의 성장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치유와 관광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시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치유산업 도시 부산'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역 치유산업 육성방안(2018, 금성근) 

무장애 관광복지를 꿈꾸는 부산지역 복지관광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고령화, 양극화 사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복지' 개념의 관광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관광 관련 시설 접근성 제고, 관광환경 보편성 강화, 관광정보 이용 편의성 확충, 관광바우처 확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부산지역 복지관광 활성화 방안(2018, 우석봉) 

돌봄과 힐링을 위한 도시형 산림복지단지 구상

풍부한 배후인구와 높은 접근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한 도시숲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도시형 산림복지단지 개념을 제시하고, 부산형 산림복지단지 조성 구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초연구(2019, 오동하)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 '웰니스 관광'

코로나19로 억눌린 여행욕구도 해소하고 바이러스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부산의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보고서는 '사람, 자연은 하나(ONE)' 라는 주제로 네 가지 정책전략을 제안합니다. B-웰니스 문화화 전략으로 5가지 세부사업, BM·W(Busan Medical Wellness) 명품화 전략으로 4가지 세부사업, B-웰니스관광 특성화 전략으로 2가지 세부사업, B-웰니스관광 플랫폼화 전략으로 4가지 세부사업을 제시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지역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2020, 박경욱) 

2021-03-24

339

[다운로드](#)



✓ 일자리 정책

지역 일자리를 분석·연구하여,
더 좋은 부산형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01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분석과 개선방안
- 02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
- 03 4차 산업혁명이 부산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04 부산시 장년층 적합 일자리 조사
- 05 코로나 시대 부산 일자리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Coming Soon**

✓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 할 수 있는 청년특화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 01 부산지역 청년 취업실태 분석 및 고용확대 방안
- 02 부산지역 청년층 지역이동과 취업성과 분석
- 03 부산지역 대졸자 지역이동 분석 및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 04 부산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 05 영남권 청년 일자리 현황 및 고용 확대 **Coming Soon**



✓ 노동 정책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생활임금제 등의 연구를 통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 01 부산시 플랫폼노동자 실태와 공적지원 방안
- 02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실태와 과제
- 03 부산지역 비정규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04 부산시 생활임금제의 적용대상과 도입방안
- 05 생활임금 민간 확산 방안

[열린광장](#)

[데이터 개방](#)

[아카이브](#)

[부산경제통계포털](#)